

2010 |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W W W . U N I K O R E A . G O . K R

2010 |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PAPER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2010통일백서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 1년 6개월 동안의 대북정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으며, 통계의 기준시점과 본문내용의 서술시점은 2010년 6월 30일입니다.

2010통일백서를 비롯하여 1990년부터 발간된 통일백서들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자료실의 통일부 발간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0 |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PAPER

발간사



지난 2009년은 국가 전체적으로 국격(國格)을 한 단계 높이고 선진일류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원칙있는 남북관계의 초석을 마련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작년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新평화구상』을 제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재래식무기를 감축하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일괄타결 방안으로 『그랜드 바겐』을 제안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주도적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도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하나원 개원 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개편을 통해 통일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통일 미래상 확립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된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의 대남비난과 강경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 발사와 제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북핵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순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내실있는 남북관계를 위해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와 도전요인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올 해는 6.25전쟁 발발 60주년이자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튼튼한 안보 속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개혁·개방에 나서야 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고 변화에 나서도록 우리는 크게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남북관계의 현 주소와 한반도의 냉혹한 안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대결적 태도와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붙잡고 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의 시급성을 절감케 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와 도전을 헤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新세계질서 재편을 주도해 나갈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의 실현은 우리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며,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현실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고 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공감대를 굳건히 다지면서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2010 통일백서』가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0년 9월

통일부장관 **권인택**

CONTENTS

2010 통일백서

발간사

제1장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립

제1절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17
제2절 정책 추진 경과	22
1. 원칙에 기초한 남북관계	22
2.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30
3.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37
제3절 천안함 피격사건과 정부의 대처	40
1. 천안함 피격사건 발발	40
2. 정부의 대응 조치	41
3. 5.24 조치 이후 경과	44

제2장 남북 교류협력

제1절 남북 경제협력	52
1. 남북 교역 및 투자	52
2. 당국간 경제협력	59
제2절 개성공단사업	62
1. 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	62
2. 입주기업과 생산 현황	66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68

4.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70
5. 기업 투자 지원	72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78
제4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82
1. 남북 출입사무소 출범 배경 및 역할	82
2. 남북 출입통행 절차	83
3. 남북간 육로 출입시설 현황	85
4. 남북간 해상 및 항공운송	91
제5절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94
1. 개소 및 운영경과	94
2. 민간 경제협력사업 추진 지원	95
3. 남북경협 기업과의 소통 강화	98
4. 남북회담 개최 지원	99

제3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제1절 남북 이산가족	104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108
1. 개 관	108
2. 남북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	109
3.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	110
4. 6.25 전쟁 중 납북자 문제	115

CONTENTS

2010 통일백서

제3절 인도적 지원	116
1. 당국차원의 지원	117
2.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18
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121
4.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 인구조사사업 지원	124
제4절 북한인권	124
1. 국제사회와의 협력	125
2. 시민사회와의 협력	127
3. 북한인권법 동향	128

제4장 남북대화

제1절 북한 조문단 방문	134
제2절 경제사회분야	137
1.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137
2.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148
3.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150
제3절 인도분야	152
1. 남북적십자 회담	152
2.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54
제4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155

제5장 통일교육

제1절 통일교육 추진체계 정립	161
1. 통일교육 기본방향 제시	161
2.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	162
3. 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정	163
제2절 통일교육 실시	164
1. 초창교육 내실화	164
2. 사이버 통일교육 강화	168
제3절 통일교육 지원	174
1.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174
2. 사회 통일교육 지원	182
제4절 통일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188
1. 기본교재 개발	189
2. 참고자료 개발	190

제6장 통일역량 강화와 통일기반 구축

제1절 평화통일을 대비한 역량 강화와 법·제도의 준비	195
1. 통일업무 역량 강화 및 조직 정비	195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개정	197

CONTENTS 2010 통일백서

3.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199
4. 교역물자관리시스템 보안	201
5. 북한 정보 분석시스템 강화	203
6. 통일법제기반 구축	206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207
제2절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외적 협력체제의 구축	224
1. 대북정책 추진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	224
2.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226
3. 한반도 비전포럼	229
4.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231
제3절 정책추진과 국민적 합의	233
1.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233
2. 국민과의 소통	237
3. 북한관련 정보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241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244
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	244
2. 남북협력기금 사업별 집행 현황	247
3.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평가 및 발전방향	259

| 부 록 |

I. 남북관계 주요 일지	267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279
1. 남북 인적·물적왕래 현황	
2. 남북 교류협력 현황	
3. 개성공단사업 추진 현황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5. 남북회담 개최 현황	
III.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289
1. 총괄표	
2. 집행실적	
3. 민간 출연 현황	
4. 요약 재무제표	



광복의 빛

≡ 더 큰

대한민국

01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립

제1절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제2절 정책 추진 경과

제3절 천안함 피격사건과 정부의 대처

제1장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립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관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과 그 진행과정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었고,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실망감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오히려 높아져 있었다.

정부는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정하였다.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남북간 인도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비핵·개방·3000」을 추진하였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하는 일대 프로젝트 성격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고 남북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였다. 또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한반도 정세 현실을 감안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출범 직후부터 우리의 정책을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거부하였다. 「비핵·개방·3000」의 폐기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우리에게 대한 비방증상을 계속하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육로통행 제한 및 차단,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등 일방적 강경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여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켰다.

정부는 북한의 왜곡 비난과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당국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으며 당국간 대화 중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순수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였다. 또한, 2009년 8.15 경축사를 통해 「비핵·개방·3000」을 근간으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포괄적 구상 아래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근원적 처방을 제시하였으며,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발표하고, 9월에는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의 연장선상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안으로서 「그랜드 바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청해전 등 북한의 강경도발은 계속되었으며 금강산 부동산 몰수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급기야는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에 대한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감행하여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과거 남북교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으며,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의 선의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정부는 북한의 잘못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

화와 안정, 공동번영, 나아가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먼저, 안으로는 국민적 지지와 공감여론, 그리고 바깥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1절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개방 및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하여 대북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하였다. 역대 정부는 1980년대 말 국제냉전의 종식이라는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 평화통일을 점진적으로 달성해 나간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해왔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정부의 국정철학, 변화된 한반도 정세와 국제환경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과거 10여 년 동안 남북간 인적왕래 확대, 남북경협사업 추진 등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 변화 흐름에 역행하면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등 당면한 안보현안에 대한 대화와 협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우리의 지원과 협력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고조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을 반영하여 대북정책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적 실용주의’를 토대로 당면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와 현실적인 적합성을 중시하였다. 즉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는 배제하여 실용의 잣대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실천 가능한 새로운 목표와 방법을 창안하여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두고 국론통합을 도모하며, 남북이 서로 상생하는 쌍방향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아울러 변화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중대한 현상인식을 바탕으로 「비핵·개방·3000」을 입안하였고 앞으로 원칙과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탈냉전 이후, 여러 국가들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발전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퇴행적으로 가고 있다. 북한 정권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외정책과 남북문제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적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국내체제의 개혁·개방과 국제경제체제로의 편입, 안정적인 국제환경에 기여, 신뢰지향의 남북관계에 적응하려하기 보다는 정반대 관점에서 대외전략을 수립해왔다. 특히, 북한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제도적 협력과 같은 정상적인 행동보다는 도발과 군사시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구사하여 생존을 모색해온 것이 사실이다. 핵 개발을 통한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까운 예로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협력에 중대한 타격을 주었다. 북한은 지난 90년대 말 이후부터 현재까지,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하고 내·외부의 난관회피와 국면전환, 국제제재에 대한 현상타파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 실험과 재래식 전략무기의

개발을 반복적으로 감행해왔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정에 커다란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반확산(Counter Proliferation) 노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남북 간의 진정한 신뢰형성과 협력은 요원할 것이며, 국제사회도 핵을 보유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핵심과제이자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주도로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핵문제 해결 진전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적극 지원하는 실천계획을 담은 「비핵·개방·3000」을 마련하였다. 이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정착과 경제격차 축소를 통한 남북의 경제통합,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통일에 이르는 정부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북한이 핵포기와 남북간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관계를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북한과 언제든지 대화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다.

정부는 2008년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정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비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의 길로 나선다면 이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남북간 상생과 호혜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이 확대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일방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남북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분단의 아픔인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남북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과 방향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다뤄나갔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비핵화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핵문제 해결 없이 무조건적으로 남북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에 강조하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 핵포기시 얻게 될 분명한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이 핵폐기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의 경제 재건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대규모 지원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핵·개방·3000」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북대화를 통해 그 세부내용이 유효적절하게 채워나가게 될 것이다. 「비핵·개방·3000」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남북한 인적·물적교류가 심화되면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 경제격차도 축소될 것이며, 사실상의 남북경제공동체가 실현되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기본권, 자유·복지가 보장되는 통일

에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둘째, 남북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추구한다는 원칙이다. 「비핵·개방·3000」은 본질적으로 신뢰의 남북관계를 근간으로 한다는 철학적 배경이 있다. 지난 기간, 많은 양의 대북지원과 활발한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도발을 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경제난은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주민들의 삶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은 당국 간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것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일체의 도발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 지원이 아닌 호혜적 협력을 통해 상생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려고 한다.

셋째로 인류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남북관계 발전의 추구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는 이미 보편적 국가 발전의 원리로 자리잡았다. 또한 과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 제한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이자 같은 민족으로서의 도의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문제, 국군 포로·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도 궁극적으로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영유아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역시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북한 인권 존중 등을 전략적 차원이 아닌 인류보편적 가치 구현 차원에서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제2절 정책 추진 경과

1. 원칙에 기초한 남북관계

가. 「비핵·개방·3000」의 추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원칙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나가겠다고 하면서 남북한이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3월 1일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서도 남북간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고, 남과 북이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하였다.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2월 12일 취임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이룩하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을 밝혔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를 창출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공존 공영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미래의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어 원칙과 기본을 유지하되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비핵화는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 북한의 강경정책과 개성공단 직원 억류

그러나 북한은 2009년에 들어서자마자 1월 17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할 것’ 이라고 발표하는 등 대남 강경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월 30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3월 9일에는 한미가 연례적으로 진행해 온 키리졸브 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군통신선을 차단하고 3차례(3.9, 3.13~15, 3.20)에 걸쳐 남북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육로통행 제한조치가 남북 합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하였다. 통일부장관은 3월 1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일방적 통행차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기업들의 애로와 의견을 청취하였다. 3월 16일에는 통일고문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통행차단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다.

3월 30일 북한은 체제 비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후 137일 동안 억류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신변안전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였다. 2차례(3.31, 4.4)의 당국자 명의의 항의 통지문을 발송하여 북한의 일방적 억류가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서 및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임을 지적하였으며, 조사내용 및 경과를 밝히고 접견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리고 4월 21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접촉 및 3차례(6.11, 6.19, 7.2)의 실무회담을 통해 억류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4월 21일 남북 접촉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모든 특혜조치를 재검토할 것임을 밝히고, 토지임대차계약 재계약, 토지사용료 유

예기간 단축, 근로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5월 15일에는 중앙 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의 무효를 선포하였다. 정부는 5월 15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과 이후 계속된 남북접촉을 통해 북한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미 완료된 계약 및 합의를 차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응하였다. 6월 11일 개최된 제1차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인상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해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합의·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동시에 억류근로자 문제의 우선 해결, 육로 통행 제한 조치의 철회,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의 개선, 출입·체류공동위의 조속한 구성·운영 및 외국공단 합동시찰 등을 제의했다.

다. 핵개발과 UN 안보리 대북제재(1874결의)

북한의 핵문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함북 무수단리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의하면 북한은 어떠한 탄도미사일 발사도 실행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4월 4일 북한의 로켓 발사 임박 발표 직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내 체류인원 안전관리지침 시달, 방북·체류인원의 안전확보 조치 실시 등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는 점 등을 지적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 (2009년 4월 5일)

1. 북한이 2009년 4월 5일 11시 30분 15초 함경북도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한 정보 공조를 하고 있다.
2.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떤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도발적 행위이다.
3. 더구나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데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4.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5.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4월 13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면서 6자회담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주적 우주 이용 권리 계속 행사, 자체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 적극 검토, 핵 억제력 강화 및 핵 시설 원상복구, 정상 가동, 폐연료봉 재처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온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 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과거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준수하고 6자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4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 추가적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 즉 우라늄 농축을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결국 북한은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핵실험 직후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2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핵실험은 자주권과 사회주의 수호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여 관련 상황 및 대책을 검토하였고, 북핵 불용 입장을 재천명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성명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회담의 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UN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폐기하고 즉각 NPT 체제에 복귀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단합되고 일치된 대응으로 대처해 나갔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5월 26일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안보리 결의 1718호(2006.10.14)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였으며, 대북 제재 조치 논의에 착수하였다.

6월 13일 유엔 안보리는 화물검색, 무기 관련 물품 수출통제, 사치품 반출제한 및 제재 대상 북한 단체와의 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환영·지지의 입장을 밝히고 관련 조치를 시행하였다. 7월 10일 「반출·반입 승인 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와 「남북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 방법」을 개정·시행하여 대북 물자 반출입 제한 품목을 확대하고, 주류, 화장품, 가죽제품, 모피제품, 귀금속 등 13종의 품목을 대북반출제한 사치품으로 지정·공고하였다. 이들 사치품을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였고, 북한 체류 우리 국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제재 대상 북한단체와 우리 기업간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재정·금융 당국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민간 경험 업체에도 이를 적극 안내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 실적을 토대로 7월 27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2009년 6월 13일)

1. 무기 금수조치 확대 : 북한과 모든 무기 및 관련물자 이전·수출·수입 금지
2. 화물 검색 강화
 - 의심 북한 행·발 화물의 항구 및 공항을 포함한 회원국 영토 내에서 검색 촉구, 공해상에서는 기국 동의하에 검색 또는 부동역시 적절한 항구로 유도 검색
 - 금지품목 발견시 압류·처분, 의심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등 bunkering service 제공 금지
3. 금융·경제제재 강화
 - WMD·미사일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거래 금지
 - 인도·개발 및 비핵화 촉진 목적 외의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 제공 금지
4. 제재 이행 메카니즘 강화 : 제재위원회 활동 계획 및 회원국 결의 이행 보고서 제출 등

또한, 우리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5월 26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기로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5월 27일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을 통해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북한군은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정

부는 우리의 PSI 가입은 북한을 겨냥하는 해상봉쇄활동이 아니며, PSI에 전면 참여하더라도 남북해운합의서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에서 대응하였다.

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와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일 라디오연설과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5월 25일에 있었던 북한의 2차 핵실험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대화와 평화의 길을 외면하고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감행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였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현실에 타당한 전략인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을 제시하였다. 먼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한 포괄적 구상인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제시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를 근원적으로 위협해 온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자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보여준다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실행,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의의 설치,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간 재래식 군비의 감축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그러한 결심을 보여준다면,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2009년 9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코리아소사이어티, 전미외교협회(CFR), 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오찬간담회 연설을 통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식으로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방안)」을 제안하였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의 연장선상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함과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의 본격화를 추진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랜드 바겐」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의 패턴을 탈피하여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근본적·포괄적 해결방안을 의미한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해 부분적·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과거의 접근과 구별된다.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토대로 6자회담 참가국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행동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랜드 바겐」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 참가국간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게 된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 2009.8.15,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먼저 이루어야 하고 그러기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기시켜야 합니다.

이제까지 북핵문제는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면 진전과 후퇴, 그리고 지연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패턴을 탈피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자 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바겐을 추진해야 합니다.

- 2009.9.21,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오찬 연설

통일부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문제의 주 당사자로서 새로운 남북관계 전기 마련을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그랜드 바겐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북한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이나 「그랜드바겐」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고, 핵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지속하였다. 정부는 핵문제가 한반도 안보의 중대 사안이므로 당사자인 남북이 직접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정부는 진정성 있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왔으며,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에 유연하게 대응하였으며,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지원해왔다. 북한의 2차 핵 실험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였으며,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북한을 지켜주는 것은 핵 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도 북한이 남북대화과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가. 북한 특사단 조의방문

북한은 2009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대외·대남 관계에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8월 4일부터 5일까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인 억류 여기자 2명이 석방되었다.

북한은 8월 13일, 137일 동안 억류되었던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를 인도하였고, 8월 20일에는 동서해지구 군사책임자 명의 전통문을 통해 2008년 12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취했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8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의 특사조의방문단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계기로 방문하였고, 이때 이루어진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간의 면담에서 남북관계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또한 특사조의방문단은 8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하고, 남북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8월 25일에는 2008년 11월 12일 폐쇄한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 운영을 재개하였다. 9월 10일에는 그간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토지임대료, 토지사용료, 임금 등의 무리한 인상을 주장해 왔던 입장을 바꿔 개성공단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종전 수준인 5%로 제시하였다.

나. 적십자 회담 · 이산가족 상봉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8월 10일부터 17일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측과 공동보도문(8.17)을 통해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합의가 언급되었다. 정부는 이산가족문제가 인도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식을 불문,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하고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이 호응해 옴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남북 각 100명) 등 2개항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이산가족 추가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제의했고, 북한이 호응해 옴에 따라 10월 16일 개성에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이 접촉에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산가족 추가상봉 등 우리의 제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9월 6일에는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 무단방류로 우리측 민간인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 사건에 대한 남북 당국간 협의를 목적으로 10월 14일 개성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임진강 사고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사과 및 조의 표명

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동 사건에 대해 유감을 전달하고, 유가족에게 대해서도 조의를 표명하였으며, 방류시 사전 통보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임진강 유역에서의 홍수예보체계 구축과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입니다. 비핵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과감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 나가자고 합의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 2009.3.1, 제90주년 삼일절 기념사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남북대화과 6자회담에 나와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2009.6.6, 제54회 현충일 추념사

우리 정부는 남북문제도 매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인도주의주의적 입장에서 과거에 소위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화해를 하고 공동번영을 하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2009.11.27, 대통령과의 대화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 하길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묻혀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낯선 땅에 와 생명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우리 대한민국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 2010.1.4, 2010 신년 국정연설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일관된 원칙과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신종플루 치료제를 제공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도적 지원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을 단지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남북한이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제 북한은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2010.3.1, 제91주년 3.1절 기념사

11월 10일, 북한 경비정이 대청도 인근 NLL을 침범하면서 대청해전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NLL이 남북간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확고한 입장에 퇴각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로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북한측에 엄중 항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다. 정부의 대화·협력 의지 천명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남북문제를 매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고 남북관계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한번만은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융통성은 갖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12월 18일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을 북한에 긴급 지원하였으며, 12월 12일부터 22일에는 남북합동 해외공동시찰을 주관하여 북한 당국인사 및 전문가간 개성공단 발전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남북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10년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남북 당국간 상시대화기구 마련을 제의하였다.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서도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해서는 북한이 남한을 단지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생각을 바꿔야 하며,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 남북한이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남북한간에 그랜드 바겐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촉구하였다.

반면 북한은 2010년 들어 강온 양면의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확고하다고 주장하면서 금강산 관광 접촉(1.14),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1.19~21), 3통 관련 군사실무회담(1.22) 등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는 한편, 우리측 일부 언론의 비상대비계획 등 보도를 계기로 국방위 대변인 성명(1.15), 조평통 대변인 성명(1.23),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1.24), 인민보안성·국가보위부 연합성명(2.8)을 통해 강경한 대남 위협발언을 쏟아내었다. 또한 서해 NLL 인근 수역에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여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북핵문제에도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1월 11일과 18일 외무성 명의의 성명·담화를 통해 대북제재 해제 전 6자회담 복귀 불가와 비핵화 이전 평화협정 논의를 주장함으로써 2009년 12월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12.8~12.10)시 보다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라.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 3통문제 군사 실무회담

정부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막고 남북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에서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 2차례(2.1, 3.2),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실무회담 1차례

(2.8) 등을 개최하였다. 2월 1일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는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협의하고 3통문제 외에 개성공단 숙소·임금 문제는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월 2일 3통문제 합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에서는 향후 통행·통관, 통신 관련 실무접촉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측은 1일 단위 통행제와 통관시 선별검사,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문제를 제외하였고, 북측은 6.15/10.4선언 이행, 대북 대결 조장행위 중지, 3통관련 기존 합의사항 이행의 방향으로 협의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과 함께 동해지구 3통관련 설비 자재자비를 우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2월 8일에는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2008년 관광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의 3대 조건이 우선 해결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동 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한 불상사이며 3대 조건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강변하면서 개성관광은 3월부터, 금강산관광은 4월부터 재개하자고 주장하였다.

3월부터 북한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즉시 재개를 요구하면서 금강산 부동산 조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협 강도를 높이더니 마침내 4월 들어 금강산 관광지구내 당국자산인 금강산 면회소, 소방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몰수하고, 민간소유 부동산을 동결하였다. 관리인원도 추방되었으며, 현대와의 관광 사업자 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조치는 남북 사업자 및 당국간 합의 위반이며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로 북한 스스로 정상적 상거래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방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당국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

였다. 아울러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과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3.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가.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내실화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금강산 부동산 몰수,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도발적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전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비롯하여 개성공단 등 기존의 경협사업을 계속 지원하였다. 남북간 교역도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계속되었다. 2008년에서 2009년 2년간 남북간 교역은 약 34억 99백만 달러로 이전 동기(2006~2007년, 31억 47백만 달러) 대비 약 11%가 증가하였다. 남북한간 민간교류도 금강산 신계사 낙성 2주년 남북공동법회(2009.10.13),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2009.11.13),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과 같이 체육, 종교, 학술, 문화 등 순수문화교류를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었다. 남북간 통신장애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간 군통신 선로를 현대화하였다. 선로 개선품사를 12월 22일 완료하여 12월 26일부터 정상 운영하였다. 2009년 9월 7일부터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의 운영을 재개하여 협력사업 333건, 위탁가공 321건, 일반교역 226건 등 총 1,476건의 사업 협의를 지원하였다.(2010.5월 기준). 그러나 2008년 12월 1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와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등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에 따른 방북 자제 분위기로 전반적인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감소하였다. 2009년 남북왕래인원은 12만 862명으로 전년(18만 6,775명) 대비 35.3%가 감소하였고, 남북교

역액은 16억 79백만 달러로 전년(18억 20백만 달러) 대비 7.8% 감소하였다. 1989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의 남북왕래인원은 총 80만 9,448명이며 남북교역액은 136억 6,800백만 달러이다. 2010년 6월 현재 개성공단은 가동기업수가 121개이고, 북한 근로자 수는 4만 4,011여 명이다.

남북교류협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9년 7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류협력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과 대북 반출 제한 사치품 공고 등을 통해 대북 반출 물자 관리를 강화하였다.

나.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

정부는 남북간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09.3.25)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2009.9.26)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년 남북적십자회담(8.26~28, 금강산), 적십자 실무접촉(10.16, 개성)에서 북한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전후 남북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피해위로금과 귀환자의 정착금을 지급하는 등 납북자 피해보상지원에 힘써왔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조건없이 추진하였다. 2009년 12월 당국 차원에서 북한 신종플루 치료제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2월에는 손소독제 20만 리터를 개성 육로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정부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도 실시하였다. 민간단체 및 WHO와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인도적 사업을 지원했다. 2008년부터 2년간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단체를 통해 총 270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국

제기구를 통해 총 3,411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인권 개선 노력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 6월까지 총 1만 9,016명으로 2009년에서 2010년 6월까지의 입국자는 3,959명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인도주의와 인권,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복지, 통일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사안으로 접근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하나원에서 가정까지’ 체계적인 정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한 취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2009년 1월에는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 및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 7월에는 지역적응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 근거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중등교육 실시 학교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3절 천안함 피격사건과 정부의 대처

1. 천안함 피격사건 발발

2010년 3월 26일 북한군이 우리측 초계함인 천안함을 공격하여 천안함이 침몰하고 장병 4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는 사건 발생 후 2달동안 민·군·해외전문가 합동조사단(합조단)을 조직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였다. 합조단은 국내 10개 전문기관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과학적, 객관적 조사활동과 검증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합조단은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된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인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었다. 우리 해군의 초계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으며, 국군 장병 46명이 사망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었다.

또한 이 사건은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다.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에서 남북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에서는 “일체 적대행위의 정지”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는 “무력위협과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이 모든 약속을 위반한 행위였다.

본질을 되새겨 볼 때,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 피격사건은 우리에게

게 중요한 교훈과 함의가 있다. 북한이 겉으로는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대남통일노선 및 전술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및 통일전선전술의 교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북한 스스로가 입증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산주의 전쟁전략의 일환인 화전양면(和戰兩面)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본질에 다시금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약 45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지원과 교류협력, 270여 회에 걸친 대화와 회담에 응하는 등 남북간에 협력과 신뢰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면에서는 연평해전과 대청해전과 같은 서해상의 도발, 두 차례에 걸친 핵 실험 등을 감행해온 것이다.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 역시,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경제협력과 인도지원을 지속해왔음에도 북한이 자신의 의도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뢰로 우리 함선을 공격하여 46명의 군인을 살상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상황을 절감했다. 북한은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등 무력도발을 계속해 왔으며,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2. 정부의 대응 조치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거듭되는 비난과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해 선의와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며 유연하게 대처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 초기부터 당국간 대화중단, 대통령 비방 및 교류협력 제한 등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조치를 되풀이하하였다. 2009년에도 군통신선·육로통행 차단, 핵 실험, 대청해전 등의 도발이 지속되었으며, 2010년에 와서는 금강산 우리 소유 부동산 동결·몰수에 이어 천안함 피격사건을 일으켰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그동안 보여준 우리 정부의 선의와 인내에 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었다. 이에 정부는 북한에 도발의 대가를 인식시키고, 호전적 태도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5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에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우리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천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한민족의 공동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 북한 정권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여 전 인류가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됩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세계 평화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2010.5.24, 대국민 담화문

같은 날 통일·외교통상·국방 3부 장관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조치를 발표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남북관계를 보다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유도하고자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를 발표하였다. 북한선박 우리해역 운행을 불허하고, 남북교역을 중단하였으며,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하기로 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을 보류하였다.

통일부 '5.24 대북조치' 주요 내용

- ①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한다. 제주해협을 포함해 우리측 해역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한다.
- ② 남북교역을 중단한다.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한다.
- ③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한다.
- ④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한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한다.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을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한다.
- ⑤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규탄여론을 조성하고, 유엔안보리 회부 등 안보리차원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국방부는 2004년 이후 중단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 서해에서 한미 연합 對 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며, 역내·외 해상차단훈련 등 PSI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 5.24 조치 이후 경과

5.24 조치 발표 직후 언론사 주관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구체적 이행에 즉각 착수하였다. 먼저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이 전면 금지됨을 통보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남북교역 및 신규투자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성공단도 체류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하여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역중단 기업에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5.24 조치 이전 진행 사업에 따른 물품 반출입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기로 한 데 따라 영유아, 임산부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 반출은 승인되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대응을 적극 지지했고, 대북조치 공조 의사를 표명했다. 2010년 6월말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세계 58개국과 UN, EU 등 5개 국제기구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정부를 지지하고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5·24 조치 발표 직후 기자회견과 6월 2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1) 5.27 조선-한국갤럽, 찬성 60.4%, 반대 20.9% / 5.31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적절 59.7%, 부적절 30.7%

나라의 대응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 호전적 행위 중단을 촉구하였다. 미국 하원(5월 25일)과 유럽의회(6월 17일)는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대북규탄결의를, G8 정상(6월 26일)은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북한비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 하토야마·간 총리(5월 31일, 6월 26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5월 25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5월 28일) 등 주변국 정상들은 정상 회담을 통해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강경 대응을 지속하였다. 합조단 발표 직후 북한은 군사전통문을 통해 조사결과 내용은 모략극·자작극이며, ‘물증확인’을 위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5월 28일에는 이례적으로 국방위원회 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조사결과에 대해 반박하기도 하였다.

특히 북한은 정부의 5.24 조치에 반발하며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였다. 5월 20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재에는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5월 24일 전선중부지구사령관 공개경고장에서는 “심리전 재개시 직접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5월 25일에는 조평통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폐쇄, 남북불가침합의 파기, 남북협력사업 전면 철폐”를 선언하고, 5월 27일에는 총참모부 중대통고문에서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합의 전면 철회”, “반공화국 심리전 책동에 무자비한 대응”을 천명하는 등 위협수위를 높였다. 6월 12일에는 “(北의 대응은)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5.24 조치의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지원은 지속하기로 하였다. 개성공

단 운영 또한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보장하였다. 동시에 공단 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체류 인원을 조정하였다. 정부의 대북조치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5.24 이전에 계약한 분량의 완제품 반입과 결제대금 송금 등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를 지속 추진하여 제대로 된 남북관계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북한이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어 핵 포기를 결심하고 남북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적극 호응하고 도울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 구상은 국제사회의 확실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고자 하는 일괄타결 방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이 언제 다시 열리느냐가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일괄타결의 방법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남북한 공동의 번영입니다. 나아가 평화통일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국제사회의 분열과 반목의 장이 아닌,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일구는 새로운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우방국 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와 협력할 것입니다.

- 2010.6.4, 상그리라 기조연설

우리에게는 못다한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빈곤과 억압 속에 고통받는 북녘 동포와 함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누리는 통일조국의 꿈입니다.

-2010.6.6, 현충일 추념사

천안함 군사도발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잘못에 단호히 대응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도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0.6.14, 제4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북한 당국에도 거듭 촉구합니다. 북한은 천안함 도발사태에 관해 분명하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국제사회앞에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무모한 군사도발을 중지하고, 7천만 민족이 다 함께 사는 길로 나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속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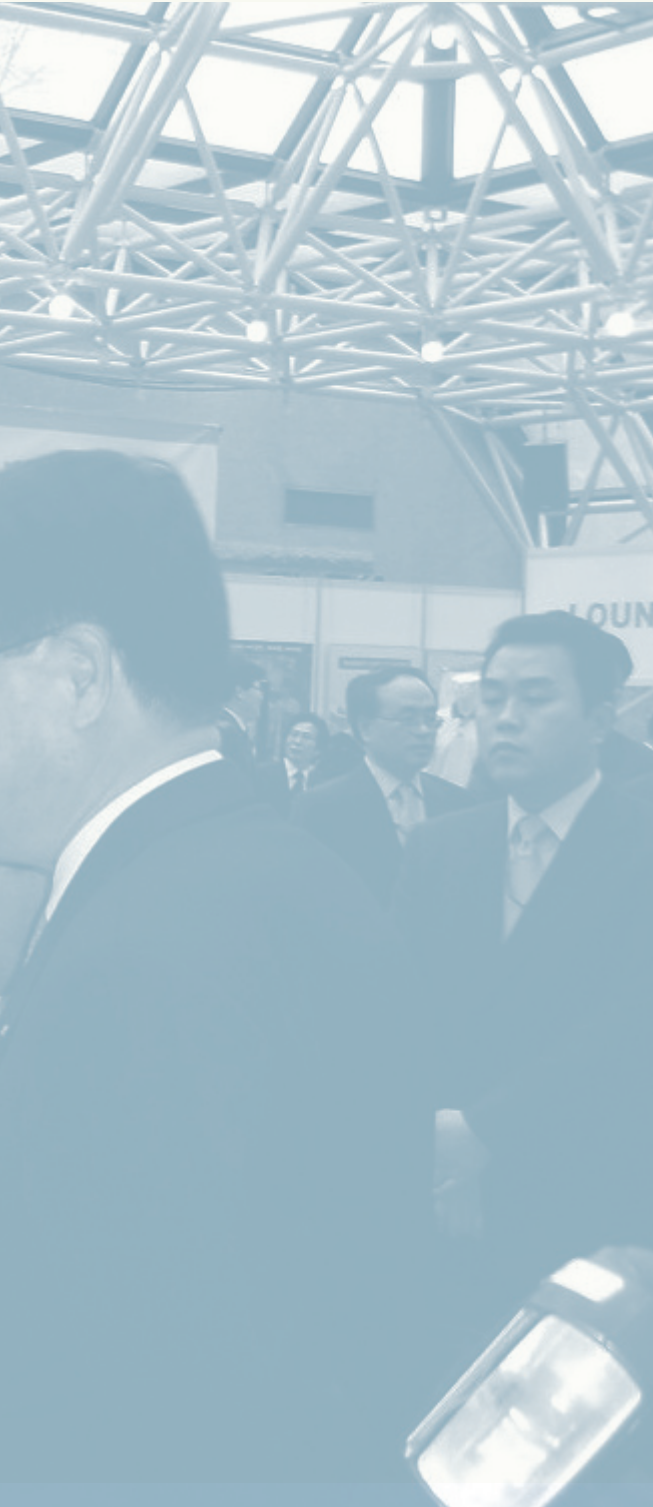
-2010.6.25, 6.25 60주년 기념연설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과
남북 상생을 위한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 및 판

·(주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층 대로비 ·(주최)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정의화,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후원) 국회 외교경제발전위원회, 통일부





02

남북 교류협력

- 제1절 남북 경제협력
- 제2절 개성공단사업
-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 제4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 제5절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제2장 남북 교류협력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잇단 강경조치와 대남도발로 인해 남북간 교류협력은 위축되어 갔다. 북한은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을 일으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게 하였고, 2008년말에는 ‘12.1조치’를 통해 육로통행을 제한하였다. 2009년에는 통신차단 조치(3월), 장거리로켓 발사(4.5), 제2차 핵실험(5.25) 등 잇단 도발을 감행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의 장애를 조성하였다. 2010년에도 3~4월 금강산지구 우리측 자산에 대해 동결·몰수하고, 3월 26일 천안함피격사건을 일으켰다.

천안함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정부는 5월 24일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남북간 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금지, 방북불허 및 접촉제한, 대북지원의 원칙적 보류 등의 대북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가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남북왕래 인원은 12만 862명으로 전년의 18만 6,775명에 비해 약 35.3% 감소하였다. 2010년에도 6월말까지 남북왕래인원은 6만 7,148명에 머물렀다. 남북간 교역액은 2009년도에 약 16억 7,908만 달러로 전년의 18억 2,036만 달러에 비해 약 7.8% 감소하였으며, 2010년은 6월말까지 9억 9,4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교류협력의 질서를 바로 잡고 향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비한 작업들을 추진해나갔다. 2009년도에는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법제를 정비하여 교류협력 절차 간소화와 질서 확립을 도모하였으며, 남북간 군통신 자재·장비를 제공하여 원활한 통행과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험보험제도 개선, 교역 보험제도 신설, 남북협력기금 대출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남북경협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개성공단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원칙을 갖고 대처하는 한편, 중국, 베트남 등 해외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시찰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하였다.

‘5.24 조치’ 발표 이후 동 조치를 실효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해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반출입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 남북간 교류가 중단되면서 야기된 남북교역 및 경협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1절 남북 경제협력

1. 남북 교역 및 투자

가. 개요

2009년 남북교역 규모는 남북관계의 조정국면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16억 7,908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8년의 18억 2,036만 달러 대비 7.8% 감소한 규모이며, 2007년의 17억 9,789만 달러에 비해서도 6.5% 감소한 규모이다.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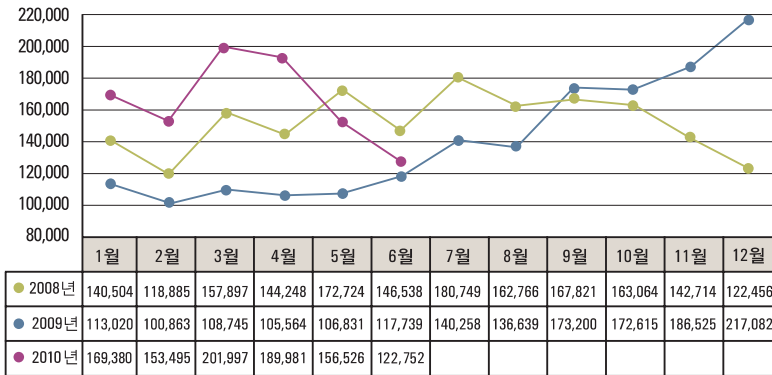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6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553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745	441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679	994

월별 교역액 추이를 보면,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취한 2008년 12월 이후 매달 감소하여 2009년 1~6월의 월별 교역액은 1억 2천만 달러를 밑돌았다. 이후 북한이 육로통행 제한조치를 철회(8.21)하고, 국내 경기가 회복추세에 접어들면서 월별 교역액이 증가세로 전환되어, 12월에는 교역규모가 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도 '5.24 조치'로 남북간 교역이 중단되었지만 1~6월간 남북교역규모는 9억 9,41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8년~2010년 6월간 월별 교역액 추이

(단위: 천 달러)



나. 유형별 교역 현황

남북교역을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나눠 보면, 2009년도 상업적 거래는 16억 4,211만 달러로 2008년 대비 4.1% 감소하였으나, 전체교역에서의 비중은 97.8%로 증가하였다. 이 중 반입은 9억 3,423만 달러로 2008년 대비 2.1% 증가하였고, 반출은 7억 787만 달러로 2008년 대비 9.2% 감소하였다.

비상업적 거래는 3,696만 달러로 2008년 대비 65.9% 감소하여 전체 교역에서 2.2%를 차지하였다. 이는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따라 대북지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10년 1~6월간 상업적 거래는 9억 8,390만 달러로, 이 중 반입은 5억 5,278만 달러, 반출은 4억 4,135만 달러였다.

비상업적 거래는 1,023만 달러로 전체 교역에서 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9년도 및 2010년도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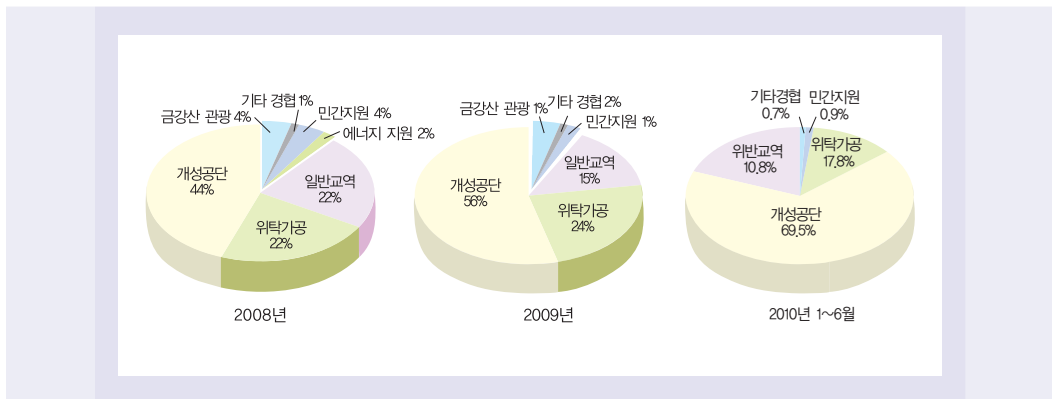
구 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 계
		개성공단	위탁 가공	일반 교역	금강산 관광	기타 경제협력	대북 지원	사회문화 협력	
2009	교역액 (천 달러)	940,552	409,714	256,141	8,711	26,997	36,379	588	1,678,494
	구성비 (%)	56.0%	24.4%	15.3%	0.5%	1.6%	2.2%	0.0%	100%
2010. 1~6	교역액 (천 달러)	691,090	177,255	107,213	1,585	6,756	9,581	650	994,129
	구성비 (%)	69.5%	17.8%	10.8%	0.2%	0.7%	1.0%	0.1%	100%

한편, 상업적 거래의 주요 구성비를 살펴보면, 개성공단 교역액은 9억 4,055만 달러로 2008년 대비 16.3% 증가하면서, 전체 교역에서의 비중이 56%를 차지하였다. 위탁가공 교역액은 4억 971만 달러로 2008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체교역에서의 비중은 24.4%로 다소 증가하

였다. 반면 북한산 농림수산물, 광산물 등을 주로 반입하는 일반교역은 2억 5,614만 달러로 2008년 대비 35.9% 감소하여 전체 교역에서의 비중이 15.3%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0년 1~6월간 상업적 거래의 주요 구성비를 살펴보면, 개성공단 교역액은 6억 9,109만 달러로 전체교역에서의 비중이 69.5%를 차지하였다. 위탁가공 교역액은 1억 7,726만 달러로 전체 교역에서의 비중은 17.8%를 차지하였다. 일반교역액은 1억 721만 달러로 전체교역에서의 비중은 10.8%를 차지하였다.

2008~2010년 6월간 거래 유형별 구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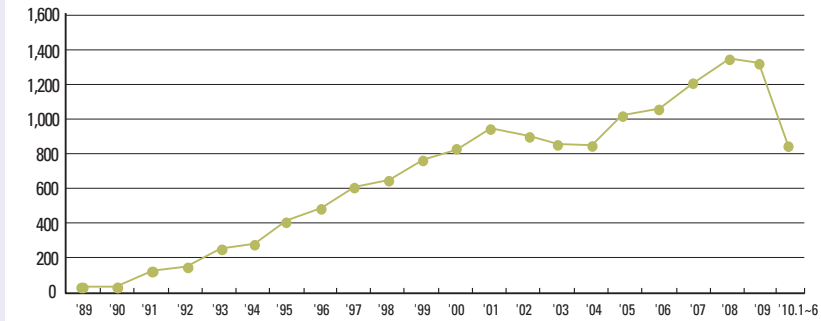
다. 교역구조

2009년 5월 25일 북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남북간 교역에 참여한 업체 및 교역품목 수는 200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남북간 교역에 참여한 업체의 수는 2009년에는 1,319개사로, 2008년 1,354개사에 비해 35개 사가 감소하였으며, 교역품목의 수도 822개 품목으로 2008년 859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이 감소하였다.

2010년 1~6월간 남북교역에 참여한 업체수는 822개였으며, 교역품목의 수는 732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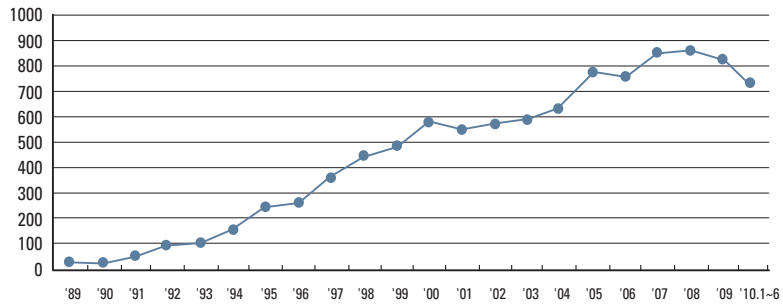
연도별 남북간 경제협력 참여업체 현황

(단위: 업체수)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단위: 품목수)



2009년 남북간 교역 품목으로는 섬유류, 전기·전자제품, 농림수산물, 기계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섬유류 교역액은 총 6억 8,779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교역에서 41.0%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의 5억 3,005만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 전자·전기제품류 교역액은 3억 3,111만 달러로 TV·라디오·전선 등의 위탁가공 품목이 늘어 2008년 대비 53% 증가하였다. 반면 농림수산물 교역액은 2억 3,771만 달러로 2008년 대비 16.9% 감소하였으며, 광산물 교역액은 5,830만 달러로 2008년 대비 59.9% 감소하였다.

2010년 1~6월에도 섬유류, 전기·전자제품, 농림수산물, 기계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섬유류 교역액은 4억 1,329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교역에서 41.6%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전자·전기제품류 교역액은 2억 3,437만 달러, 농림수산물 교역액은 9,572만 달러, 기계류 교역액은 7,449만 달러, 광산물 교역액은 1,89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남북 교역 품목 구성

(단위: 천 달러)

구분	섬유류	전자전기제품	농림수산물	기계류	생활용품
2009년	687,792	331,117	237,717	121,317	92,348
2010.1~6	413,288	234,369	95,722	74,485	63,613
철강금속제품	화학공업제품	광산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잡제품	계
63,563	59,510	58,305	26,113	1,299	1,679,081
51,759	28,250	18,989	12,987	668	994,129

라. 관광 협력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인해 2008년 7월 12일부터 중단되었다. 정부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면서 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 2월 8일 개성에서 개최된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이러한 입장을 거듭 주장하였으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함으로써 회담이 별다른 진전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북한은 무조건적인 관광재개를 주장하는 한편, 3월 25일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측 부동산들에 대한 조사를 통보한 후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3월 31일 「통일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사업자 및 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국제규범과 관례에도 어긋나는 행위로서 이에 따른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관광재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화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4월 3일 금강산지구내의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온천장, 문화회관, 면세점 등 우리 당국 자산을 동결하고 이산가족면회소 관리인원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4월 23일 동결된 당국자산에 대한 몰수 및 민간자산에 대한 동결을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는 4월 23일 「통일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동결 및 몰수조치에 대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 부당한 조치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자산들을 동결·몰수하는 한편, 4월 30일 금강산관광 관련 관리인원에 대해 16명을 제외하고 철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2010년 6월 현재 금강산관광지구에는 관광관련 인원 16명(중국인 2명 포함)만이 잔류하며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2007년 12월 5일 시작된 개성관광은 2008년 11월 24일 북한이 육로통

행 제한조치(2008.12.1)의 일환으로 중단한다고 통보해 옴으로써 2008년 11월 29일부터 중단되었다. 이후 정부는 개성 관광객에 대해서도 당국간 협의를 통한 신변안전보장 강화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2. 당국간 경제협력

가. 남북 군통신 시설 개선사업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 협력은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계기로 2002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남북은 2002년 9월 17일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의 체결에 따라 2002년 9월 24일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가설(전화 1회선, 팩스 1회선, 예비 1회선)하였고, 동해지구는 2003년 12월 5일 가설(전화 1회선, 팩스 1회선, 예비 1회선)하였다.

가설 이후 남북간 통행을 위해 활용되어 오던 군통신선이 노후화됨에 따라 2008년 5월 5일 서해지구의 통신채널이 단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측은 2008년 5월 8일 우리측에 군통신 자재·장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간 통신 장애로 인해 개성공단 등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08년 5월 22일 제20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2008년 5월 30일 일부 자재·장비를 북한측에 제공하였다. 이후 2차분 자재·장비를 구매하였으나,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등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추가적인 자재 제공은 보류하였다.

2009년 10월 북한측의 거듭된 요청과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군통신 선로 개선공사를 재개하였



남북간 광케이블 연결작업



남북간 광케이블 시험통화

다.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북한측에 광통신 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전달하고 남북이 각기 자기측 구간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 완료후 2009년 12월 22일 군사분계선상에서 광케이블을 연결함으로써 남북 군사당국간 광케이블 통신망이 구축되었다. 이후 1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시험통화를 거쳐 12월 26일부터 군통신망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신속하고 안정적인 통행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들의 개성공단 출입경 등 육로 통행 편의가 제고되었다.

나.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1990년대 후반 대규모 홍수로 임진강 하류 경기북부 지역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임진강은 전체 유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상류가 북한 지역에 위치한 남북 공유하천으로서 하류지역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측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2000년 9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북한측과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

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논의하였다.

2004년 3월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키로 하였고, 그해 4월 제3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에서는 임진강 유역 단독조사 항목 및 조사용 기자재 대북 제공, 북한측의 기상·수문 등 자료제공 등에 합의하였다.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임진강 유역 단독조사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같은 해 8월과 12월에 우리측과 북한측이 각각 상대측에 자료를 전달하였다.

이후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에 특별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2009년 9월 6일 북한측의 임진강 상류 댐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북 통지문과 통일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유사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정부는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간 공유하천 공동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의를 모색하였고, 2009년 10월 14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 의사무소에서 남북 당국간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북한측의 책임있는 당국의 공식 사과와 조의 표명 및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으로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상호 협력의 원칙, 신뢰의 원칙을 제시하고, 유사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통보체계 구축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임진강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하였으며,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향후 임진강 댐 방류시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하겠다고 확인하였다.

정부는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측과 홍수에 보체계 구축 문제와 함께 공유하천 피해예방 및 공동이용 제도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개성공단사업

1. 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

가. 공단 운영 여건의 변동

개성공단사업은 2008년 12월 1일 북한이 취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 조치(이하 '12.1 조치')로 인해 출입인원과 출입차량이 제한된 이후 2009년에도 우리 근로자 억류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2009년에도 일련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2009년 3월 북한은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오던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을 구실로 훈련기간(3.9~3.21) 동안 3회에 걸쳐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공단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생산차질이 초래되었다. 3월말에는 체제비난과 북한 여성종업원에 대한 사상적 회유 등을 이유로 공단에 체류하던 우리 근로자 1명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같은 해 5월에 북한은 개성공단의 기존 계약과 법규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효를 주장하였다.

북한의 육로통행 차단에 대해 정부는 대북성명과 통일부장관 명의의 서한 등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입주기

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부는 우리 근로자 억류 사건에 대해서도 입주기업 등 주요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을 토대로 적극 대응하였다. 우선 항의통지문을 발송하고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실무회담」시 억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유관국에 억류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기존 계약 및 법규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규범 확립’,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의 「개성공단 발전 3원칙」을 표명하고 북한에 대해 부당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일관된 노력에 따라 한미군사훈련 기간 중 3회에 걸쳐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육로통행이 3월 21일부터 정상화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근로자는 137일만인 8월 13일 석방되었다. 2009년 8월 20일에는 북한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해오던 출입·체류 제한조치도 철회하였다.

나.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의 개선 등 지속발전 여건 조성

북한의 「12.1 조치」의 철회로 1일 6회이던 개성공단 통행이 1일 23회(하절기 기준, 동절기는 21회)로 복원되었고, 2009년 9월 1일부터 평일기준 08:30부터 17:40까지 출입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12.1 조치」 철회에 맞추어 2009년 9월 차량자동심사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출입정상화를 지원하였다. 11월에는 차량심사 편의를 위해 출입사무소에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전자출입체계(RFID)리더기 교체를 통한 차량심사체계 개선 등 우리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통행·통관절차 간소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12월에는 전자운행증의 인식율이 99% 이상으로 높아졌고, 인식 속도도 2초 이내로 단축되었다. 아울러 개성공단 유선 통신 회선 증설을 통해 입주기업의 통신 불편을 완화하였다.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2009.12.12~12.22)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2009년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남북한이 중국의 청도·소주·심천공단과 베트남의 연풍공단을 합동으로 시찰하였다. 해외공단 합동시찰을 통해 남북은 해외공단의 공단개발 및 관리운영 시스템, 기업지원서비스 및 통행·통관시스템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둘러보고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이어서 남북한은 2010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시찰결과 평가 및 향후 개성공단 발전방향과 공동 해결과제 도출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후 2010년 2월 1일 개최된 「제4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3통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2010년 3월 2일 「개성공단 3통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3통 문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향후 분야별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체류인원 축소·조정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는 2010년 5월 24일 대북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당분간 금지하고 개성공단 밖에서 이루어지는 임가공 사업도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남북관계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생산활동은 지속 유지해 나가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기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은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축소·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5월 25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 5월 27일 총참모부 중대통고문등을 통해 강력 반발하고, 5월 30일에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구두 통지문’을 통해 “남측의 조치는 공단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측의 책임”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남측기업의 모든 생산설비 반출은 북측 세무서를 경유해야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축소조정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일부 불편이 초래되기도 하였으나, 정부는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관리하고, 동시에 경험보험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보완·정비해 나가면서 우리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 입주기업과 생산 현황

가. 입주기업

2004년 6월 14일 시범단지에 15개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8개사가 입주한 이래,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121개사가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업종분포는 섬유 70개사, 기계금속 22개사, 전기전자 13개사, 화학 9개사, 식품 3개사, 종이목재 3개사, 비금속광물 1개사 순이다. 2009년은 상반기 동안에 북한에 의한 통행 차단 등의 조치로 사업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2010년 6월말까지 28개사가 증가하였다.

기업 입주 추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업체 수	18개사	30개사	65개사	93개사	117개사	121개사

입주기업 생산업종 분포

업 체	섬 유 (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화 학	식 품	종이 목재	비금속 광물	계
업체수	70개사	22개사	13개사	9개사	3개사	3개사	1개사	121개사

입주기업의 증가와 함께 2008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의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던 북한 근로자는 2009년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근로자는 2004년 11월 (주)리빙아트가 55명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2월 3만 명을 넘어섰다.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 4만 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복측근로자 수 추이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근로자 수	7,621명	11,189명	22,538명	38,931명	42,561명	44,011명

나. 생산 현황

2009년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투자와 입주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도 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2억 5,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총액은 2007년 1월말 1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09년 9월 7억 달러, 2010년 1월에는 8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9억 4,104만 달러를 달성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 업종별 생산액은 섬유 2억 3,982만 달러, 전기전자 6,552만 달러, 기계금속 6,097만 달러, 화학 4,437만 달러, 식품·종이목재 등 기타 549만 달러였다.

업종별 생산액

(단위: 천 US 달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누계
섬 유	6,780	27,793	85,543	132,179	152,050	87,775	492,120
화 학	1,768	10,900	18,262	21,785	26,179	18,193	97,087
기계금속	5,250	20,853	41,947	49,250	37,312	23,662	178,274
전기전자	1,108	14,191	39,027	47,162	37,584	27,942	167,014
식 품	-	-	-	976	2,003	1,380	4,359
종이목재	-	-	-	70	1,313	731	2,114
기 타	-	-	-	-	34	38	72
계	14,906	73,737	184,779	251,422	256,475	159,721	941,040

3.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개성공단의 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 공사는 2006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2007년 10월까지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을 완공하였다. 2009년 12월 기준 용수공급용량 3만톤/1일, 폐수종말처리용량 1만 5,000톤/1일, 폐기물매립용량 6만 1,000m³, 폐기물소각용량 12톤/1일 등의 기반시설과 전력시설용량 10만kW용량을 구축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용량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12월 2차 소각시설(50톤/1일)의 건설을 추진하여 2011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09년 북한에 의한 공단 통행차단 등의 상황 변화로 착공이 유보된 상황이다.

통신시설은 KT가 2009년 11월 유선통신 600회선을 증설하여 총 1,300회선을 확보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통신 불편 완화에 노력하였다. 향후



개성공단 전경(2009년 10월)



개성공단 소방서

국내 환경과 동등한 수준의 통신 공급을 위해 통신센터 건립, 인터넷·이동전화 개통을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대시설로는 2007년 기술교육센터가 준공되었으며, 2009년에는 종합지원센터 및 탁아소가 완공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 연건평 2,181㎡, 소방차량 8대 규모의 소방서 건립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응급의료병원 등도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2007년 8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된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15층, 지하1층, 연면적 3만 784㎡ 규모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공공기관의 업무시설, 은행 등의 편의시설, 공단 홍보관 및 제품전시·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종합지원센터(2009년 12월)

4. 법·제도 및 사업지원체계

가. 법과 제도

개성공단에는 남북간 합의서, 남측 법규, 북측 법규가 함께 적용되고 있다. 남북한이 협력해 나가는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이 체결되어 있으며,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기타 남북간 합의서가 개성공단에 적용되고 있다.

2007년 5월에는 우리측 법규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지원을 비롯해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나 출입·체류하는 우리 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모든 지원제도의 혜택을 개성공단 현지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 법률 외에도 개성공단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기금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남북간 합의서

구 분	남북간 합의서
남북경협 4대 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관련 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기타 관련합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북한 법규는 2002년 11월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개발규정」 등 16개의 하위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행세칙의 제정은 남북이 협력하는 개성공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남북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10여개 시행세칙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2010년 6월 기준으로 「개성공업지구 건축준칙」 등 46개의 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나. 사업지원체계

개성공단사업은 우리측의 남북협력지구지원단과 북한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중심으로 지원·관리되고 있다.

2009년 10월 5일 신설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조직시한 만료에 따라 10월 4일 폐지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업무였던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지원, 출입제도 개선 등의 공단 사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한편, 남북한이 합의하는 남북협력지구 개발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설립되었으며, 2009년 12월 기준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5부(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기획법제부) 3팀(법질서팀, 예산회계팀, 출입지원팀)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신속한 출입관리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과 출입업무 지원조직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2009년 한 해 동안 1,495명에 대해 출입·거주증을 발급하고, 437건의 기업 창설·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기업 투자 지원

가. 금융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초기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까지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약 478억원, 본단지 1차 입주기업에 약 258억원이 대출되었다. 이 제도는 2007년 12월부터 기술보증, 신용보증제도로 대출방식이 변경되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7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 38개사에 대해 267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2008년 12월 1일 북한이 취한 통행제한 조치에 따른 남북 협력사업 추진기업의 경영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2009년 1월, 22개 업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연장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2009년 1월에 이어 2차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추가 연장해 주었다. 이와 함께 2008년 하반기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후발진출기업에게 60억원 한도 내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0년 6월말까지 9개 업체에 약 18억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영애로를 덜어주고 생산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박탈 등에 따른 사업 중단조치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경험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북한에 의한 통행차단조치 등으로 개성공단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2008년 말 이후 가입업체가 늘어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139개의 개성공단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보험금액은 4,8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기업당 약정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 지급요건을 사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2009년에 시행한 경험보험 보장한도 확대·지급요건 완화·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통행차단 등으로 인한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2009년 8월에는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역보험제도(원부자재반출보험, 납품이행보증보험)를 도입함으로써 입주기업이 원부자재 거래 중단과 납품 중단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투자와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금융지원 내역

(단위: 억원)

구분		계	시범단지	본단지1차	본단지2차
기금 대출	1차	760	475	282	-
	2차	60	-	-	60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38개사 251억원			
경험보험		139개사 가입, 보험총액 4,859억원(2010.6월 기준)			

나. 판로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도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07년 4월 2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의 FTA 타결에 이어, 2009년 10월 15일에는 EU와의 FTA가 체결되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 기준 1년 후에 설치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특정지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 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원산지 인정과 함께 역외가공지역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매, 시장 개척을 위하여 입주기업들의 전시회·판매전 참가를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개성공단 및 남북교역상품전」, 「Buy Korea 2009 Autumn」 전시회에 입주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하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8차 한상대회」 참가, 그리고 국회 의원회관 「개성공단제품 전시판매전」 등을 통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및 개성공단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에 개발한 개성공단 공동브랜드 「PEACE WORKS」의 상표를 2009년 1월에 출원하였다.

이와 함께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명함 제작, 전시판매전 행사장 내 배너 게시 등의 홍보활동도 추진하였다.

또한 2010년도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공동 브랜드 종합 대전」 행사에 참가하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대형 유통 업체와의 상담회도 주선하였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개최한 소싱(Sourcing) 상담회를 통해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 보건의료 지원

개성공단 내 의료시설로는 「그린닥터스 개성협력병원」이 있다. 동 병원은 2007년 4월 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의 의료시설과 북한의 종합진료소를 하나의 건물에 통합하여 개원하였다. 이 협력병원에서는 남북한 진료소를 구분하여 각각 자기측 근로자를 진료하고 있으나, 수술실·방사선실·검사실·초음파실은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협력병원의 의료진은 우리측에서 의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 2명 등 5명, 그리고 북한측 인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닥터스 진료 실적

(단위: 명)

구분	전체	남측	북측
2005년	6,169	5,362	807
2006년	7,232	5,834	1,398
2007년	43,413	7,647	35,766
2008년	69,724	7,751	61,973
2009년	78,007	5,803	72,204
2010년 6월말	19,952	2,133	17,819

2009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 협력병원에서 진료 받은 북한 근로자는 총 9만 23명으로 내과 3만 7,359명(42%), 산부인과 3만 2,461명(36%), 외과 1만 7,453명(19%), 기타 2,750명(3%)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0년 공단 내에 응급의료병원 설립을 준비중이다.

2009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으로의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진행하였다. 우선 2009년 8월 우리측 출입사무소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개성공단으로 출경하는 근로자의 발열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2009년 11월 14일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 1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이후에는 북측 출입사무소에 열감지 카메라 2식을 무상 대부하는 등 개성공단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조치를 강화하였다. 우선 12월 그린닥터스 의료진에 대해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북한에 2대의 열감지 카메라와 북한 근로자용 타미플루 치료제 1,000명분을 제공하는 등 개성공단에서의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다



개성공단제품 전시판매전(2009.12.2~12.3)

라. 근로조건 개선

북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기본노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가급금, 직무 또는 직책급인 장려금 및 상여금인 상금으로 구성된다. 월 최저노임은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합의로 결정하되 전년도 최저노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노임은 50달러에서 시작하여 2007년 8월 1일 52.5달러, 2008년 8월 1일 55.125달러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2009년 8월 1일부터는 57.881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기업들은 「노동규정」에 따라 노동보수 이외에 월 노임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9년 북한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80달러 정도였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6월말 기준 228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휴식시간과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샤워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성공단 출퇴근버스



개성공단 탁아소 전경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개성공단에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였다. 이 센터는 22개의 강의·실습실 등을 갖추고 1일 약 700여명에 대한 동시교육이 가능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남측 근로자의 자기개발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상황악화에 따른 북한측과의 최종합의 지연으로 아직 본격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술교육센터와 함께 2006년부터 추진된 개성공단 내 북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가 남북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2009년 10월 착공해서 12월에 완공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결근율 감소와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탁아소는 지상 2층, 연건평 860㎡ 규모로 영유아 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최근 남북관계 상황악화로 인해 북한측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세부운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제3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간의 내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해와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사회문화공동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2009년도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및 핵실험 등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감소하였다. 2009년 인적교류는 방북인원 267명(32건), 방남인원 63명(5건)으로 2008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2010년 6월말 현재 방북인원은 204명(32건)이며 방남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문화·학술·체육·종교 등 순수 사회문화 교류 중심으로 협력사업 추진과 접촉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문화예술교류와 관련하여 한국미술협회 여성위원회는 2009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한전프라자 갤러리에서, 그리고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KOREA 여성·오늘展」이라는 주제로 남북 여성화가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남북 여성화가들의 작품으로 공동전시회를 여는 것은 남북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본 행사에는 평양 만수대창작사 등에서 활동하는 북한작가 18명의 작품을 포함하여 140여명의 남북 여성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학술교류와 관련하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04년 사업승인 이후 2010년 6월말까지 총 20차례의 남북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였고, 집필이 본격화됨에 따라 2009년도에 남북공동집필회의를 4차례 개최하였다. 2010년 6월말 현재,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어휘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집필 작업중이며, 전체 계획 대비 55%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추진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은 2010년도도 계속 추진되어 3.23~5.18까지 건덕전 지구 3,300㎡에 대한 발굴조



남북 KOREA 여성·오늘전(2009.11.2~11.4, 국회의원회관)

사를 완료하였다. 2010년 6월말 현재, 금년도 발굴조사에 대한 분석작업이 진행중이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중국 곤명에서 전지훈련중인 우리 유소년 축구 선수단과 북한 유소년 축구 선수단의 친선경기를 개최(2009.7.17~8.4)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진행되어 온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남북이 협의하였으나, 상호교환경기 성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2010 남아공월드컵’ 예선 남북 축구대표팀 경기가 2009년 4월 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종교분야 교류는 대규모 행사 위주에서 실무차원의 사업 협의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실무협의로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향후 교류사업과 관련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추진되었다. 기독교계는 개성, 평양과 중국에서의 실무협의 위주로 교류를 진행하였다. (사)기쁜소식은 북한에 우리 성경을 보급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였고 새에덴교회는 평양 봉수교회 방문을 통해 봉수교회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불교계는 조계종이 2009년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신계사 낙성 2주년 기념 남



제18차 거래말근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2009.6.21~6.30, 심양)

북공동법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향후 중장기적 남북불교교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부처님 오신날’에는 북한에 향과 초 등 예불물품을 지원하였다. 천태종도 11월 21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열반 다례법회를 북한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평양에서 만나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천주교는 북한 조선카톨릭교협회와 ‘사목권’(교황청의 천주교 관련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제반 권리)을 협의하였으나, 북한의 이해 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안중근기념사업회는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1월 3일 개성에서 북한 조선종교인협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남북공동기념행사를 중국 여순에서 개최하였다. 그 밖에 천도교는 3.1절 및 광복절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동안 개천절 남북공동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왔던 단군민족평화통일협회는 2009년에도 남북 공동행사를 성사시키지 못하였지만 3.1절, 8.15, 개천절 등을 계기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09년도 6.15공동행사는 남북 공동으로 추진되지 않고 남북간 합의에 따라 각자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남측위」)는 2009년 6월 14일 장충체육관에서 자체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8.15 공동행사 또한 남북간에 각자 개최하기로 하여 「6.15 남측위」는 2009년 8월 15일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노동·교육·문학·언론 분과 등 6.15 남측위 산하 부문별 교류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2010년도는 6.15공동선언발표 10주년이지만 천안함 피격사건, 북한의 금강산 위협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상황 등으로 인해 남북·해외 공동행사로 추진되지 않고 각자 개최되었다. 「6.15 남측위」는 2010년 6월 13일 서울광장에서 야외행사를 가졌으며, 6월 15일에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교류는 2009년도와 2010년도 모두 다른 분야의 교류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상황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자체 남북협력기금도 조성하여 남북교류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바, 2009년말 현재 15개 단체(광역 11, 기초 4)에서 813억원을 조성하였다. 한편, 2009년은 제주도가 1999년 1월 22일 감귤을 북한에 지원한 이래 지자체 대북교류사업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정부는 이화여대 산학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지자체 대북교류 10년』 책자를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지자체간 남북교류사업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해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등 매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4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1. 남북 출입사무소 출범 배경 및 역할

남북출입사무소는 2002년 이후 남북간에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자재·장비의 운반이 빈번해지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화됨으로써 남북출입 업무를 지원·처리할 상시조직의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발족하였다. 2003년 2월부터는 임시 출입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3년 11월 20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남북출입사무소 직제를 신설하여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간 출입통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북측을 방문하는 출입인원에 대한 심사·검역 등 통

행관리, 출입과 관련한 민원사무 처리(임시방북증 발급, 방북교육, 출입관련 긴급상황 처리 등), 반출입 물자의 통관 지원, 열차운행과 관련한 대북 연락 및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서지역 최북단이자 남북간 길목에서 통일부를 비롯하여 법무부·보건복지부·관세청 등 출입심사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특구 등 북한내 남북협력지구로의 출입통행 과정에서 관문(關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남북 출입통행 절차

남북간에는 출입통행의 특수성이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출입통행에 있어서도 동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왕래시 출입경 개념을 도입하여 출국 대신 출경으로, 입국 대신 입경으로, 사무소 명칭도 출입국사무소 대신 출입사무소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남북왕래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도 외국으로 출국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여권을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반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북승인을 받고 여권 대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만 출입심사, 통관, 검역 등의 절차는 출입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우리 주민이 북한측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에서 방북승인을 받아,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방문시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OK(Online 출입신청시스템)에 방북시 필요한 증명서인 출입증이나 체류증을 신청하고, 통행계획을 작성하여 출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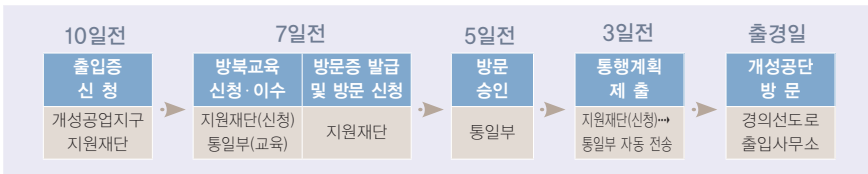
출입국·출입경 차이

구분	출입국	출입경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의 왕래, 국제 거래 • 비자발급, 여권소지 • 출입국사무소 관할(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남북관계의 왕래, 민족 내부 거래 ※ 남북기본합의서 반영 • 출입증, 체류증 발급, 북한방문 증명서 소지 • 남북출입사무소 관할(통일부)
공통점	• 보건검역, 출입심사, 통관절차	

그 이후 통일부가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방북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북한방문증을 가지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심사를 받고 출경하며, 북한측 지역에서는 출입증(원본) 또는 체류증을 가지고 입경수속을 밟은 후에 방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북승인을 신청할 때 방북안내교육과 출입증이나 체류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차량을 이용하여 방북하려면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후 통행계획 제출 전에 차량운행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자동차 운행 신청시 「전자운행증(RFID카드)」이 자동 발급되어 전자식 자동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출입경 차량에 「전자운행증(RFID카드)」을 부착하면 남북출입사무소 차량심사대에서 자동으로 처리(「통행차량증명서」, 「출발·도착보고서」 및 「출입확인서」 제출 생략)됨에 따라 신속·원활한 출입통행이 가능하다.

북한(개성공단)방문신청 개요도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일명 통통시스템) : <http://www.tongtong.go.kr>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 : <http://oks.kidmac.com>

3. 남북간 육로 출입시설 현황

가. 출입시설 현황

남북출입사무소는 2003년 남북철도·도로를 연결한 이후 2006년에 경의선 철도·도로출입시설(도라산역 포함) 및 동해선 철도·도로출입시설(제진역 포함)을 준공하였고, 2007년 12월에 도라산물류센터를 준공한 바 있다.

또한 동해선 출입사무소는 201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동해선 물류센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해선 물류센터는 앞으로 북측 동해안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철광석, 석탄, 텅스텐, 마그네슘 등)을 개발·반입하거나 동해에서 조업한 수산물의 반입 등 북측에서 생산된 물자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물류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후, 출입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남북간 인원·차량·물자의 왕래에서 발생하는 출·입경 업무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출입시설 현황

구 분		건물 연면적	공사기간	부지면적/동수
경의선 (도라산)	철도출입시설	15,825㎡	'04.9 ~ '06.4	442,015㎡ (36개동)
	도로출입시설	18,310㎡	'04.9 ~ '06.5	
	도라산물류센터	19,488㎡	'05.10 ~ '07.12	
동해선 (고성)	철도출입시설	6,705㎡	'04.9 ~ '06.4	233,973㎡ (15개동)
	도로출입시설	14,055㎡	'04.9 ~ '06.5	
	물류센터	12,041㎡	'06.12 ~ '10.9(예정)	

경의선 출입시설 전경



도로출입시설



철도출입시설(도라산역)

동해선 출입시설 전경



도로출입시설



철도출입시설(제진역)

나. 육로를 통한 출입통행 현황

2009년도 출입통행은 2008년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 사건으로 인한 관광 중단과 북한의 2008년 12월 1일 출입제한 조치(화물열차 운행중단, 개성관광 중단, 인원·차량 제한 등)로 인해 예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의선 육로는 11만 5,026명의 인원과 7만 2,929대의 차량이 통행하였고, 동해선 육로의 경우 3,682명의 인원과 1,323대의 차량통행이 이루어졌다. 2009년 9월 1일 이후 출입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경의선 출입인원 및 차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동해선은 2010년 4월 13일 북한의 금강산내 이산가족면회소·온천장 등 자산동결, 4월 23일 동결자산 몰수, 민간 소유부동산 등의 자산동결에 따른 관리인원 추방으로 5월 3일 현대아산 및 골프장의 최소관리인원 16명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인원 근무교대, 식자재 운반 등을 위한 출입경만 1주일에 1회씩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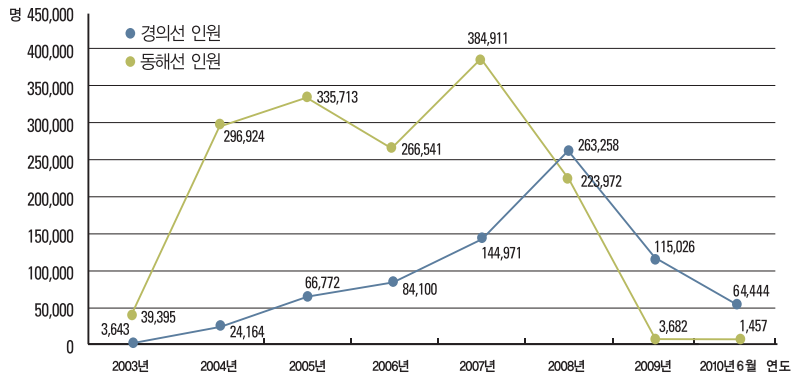
경의선의 경우, 5월 24일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인원이 800~1,000여 명에서 400~500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출퇴근 인원 증가에 따라 2010년 6월말 현재 일일 출입경 인원은 400여 명 수준에서 500여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 동안 경의선·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하여 북한측 지역을 출입한 인원 및 차량은 다음 표와 같다.

경의선 및 동해선 출경 인원·차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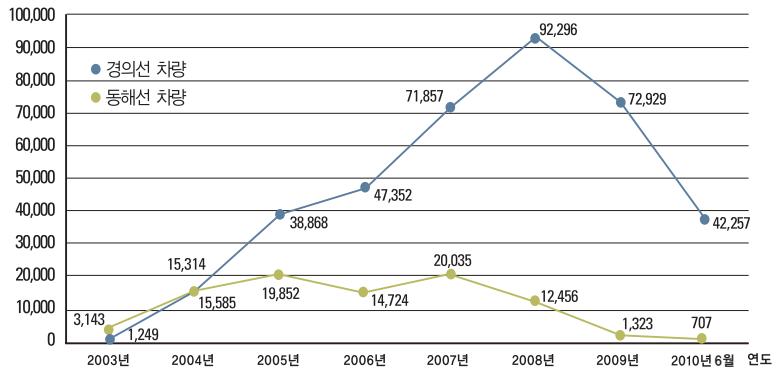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30	총계
경의선 육로	인원(명)	3,643	24,164	66,772	84,100	144,971	263,258	115,026	64,444	766,378
	차량(대)	1,249	15,314	38,868	47,352	71,857	92,296	72,929	42,257	382,122
동해선 육로	인원(명)	39,395	296,924	335,713	266,541	384,911	223,972	3,682	1,457	1,552,595
	차량(대)	3,143	15,585	19,852	14,724	20,035	12,456	1,323	707	87,825

※ 2009년 출입제한 조치 이전(8.31 까지): 75,395명, 46,862대
2009년 출입제한 조치 이후(9.1~12.31): 43,313명, 27,390대

출경인원 변동 추세



출경차량 변동 추세



다. 남북화물열차 운행 현황

2005년 12월말 경의선 구간(문산~개성, 27.3km)과 동해선 구간(제진~금강산, 25.5km)의 남북간 연결철도 궤도 부설공사가 완료되어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를 통해 2007년 5월 17일 남북열차시험운행

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우리측 도라산역과 북한측 판문역간에 남북 화물열차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회 정기적(오전 9시에 도라산역을 출발, 오후 2시에 북한 판문역을 출발)으로 운행하였다.

당초에는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을 편성해 운행하였으나, 2008년 2월 1일부터 남북간 합의에 따라 화물이 있는 경우에만 화차를 운행하고,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화물열차는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이후 운행이 중단되었다.

화물열차 운행기간(2007년 12월 11일~2008년 11월 28일) 동안 화물 운송량은 총 222회(왕복 444회)에 걸쳐 총 17회 31량 318톤을 기록하였다. 이중 우리측에서 북한측으로 반출된 컨테이너는 24량 235톤이고 북한측에서 우리측으로 반입된 컨테이너는 7량 75톤으로 주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물자를 수송하였다.

이처럼 화물운송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개성공단내 대부분의 생산제품이 다품종 소량이고, 열차를 통한 화물운송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며, 북측지역 역사의 인프라 또한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은 최소한 200~300km가 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운송 목적지가 주로 100km 이내인 경인지역이어서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측은 2009년 8월 20일 통지문을 통해 화물열차 운행을 12월 1일 제한조치 이전으로 원상회복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우리측은 구체적인 운행재개 여부·시점은 물동량 등 화물 수요를 보아가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라. 남북관계 특수성에 따른 출입통행 조치

북한측이 2008년 12월 1일 개성지역 출입제한조치를 일방적으로 실시

하여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출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키리졸브 군사 훈련기간 중에는 남북간 군통신선을 차단해 출입통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반출물품검사 강화,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등 남북관계 특수성에 따라 출입통행조치도 부침이 반복되어 남북출입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원활한 출입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출입제한조치로 인한 민원인들의 출입통행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성지역 출·입경 기준을 마련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시행하였다.

출입경 기준 주요내용

- ① 매일 09:00 출경과 15:00 입경시 승용차를 이용한 출입을 금지
- ② 대체 교통수단으로 매일 09:00, 10:00 출경과 15:00, 17:00 입경시 서울-도라산-개성공단간 정기 셔틀버스 운행
- ③ 출입경 인원이 많은 월·금·토요일에는 입주기업과 건설업체별로 시간대를 구분·출입
 - 입주기업 : 월 9:00, 10:00 출경 / 금 17:00, 토 15:00 입경
 - 건설업체 : 월 11:00 출경 / 토 16:00 입경
- ④ 나머지 시간대는 인원·차량 공히 선착순(방문 3주전부터 접수)

한편, 북한측이 반입금지물품의 휴대·탐재 등 규정위반자에 대해 방북을 허가하지 않고 즉시 복귀시키는 등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동 사실을 출입 예정자들에게 사전 홍보하고 출경현장에서 휴대품 및 출입증·체류증 소지여부를 직접 점검·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즉시복귀자의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키리졸브 군사훈련 기간동안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북측에 출입통행계획을 전달하였으며, 출입통행계획에 대한 동의문서도 개성

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신하였다. 북한군에서 방북동의 통보가 없을 경우와 통상적인 동의시간(당일 08시 전후) 이후에 동의서를 통보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출경과 관련한 변경상황을 출경대기자에게 수시로 안내하였다.

또한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 제1874호가 결의됨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는 2009년 7월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관세청과 협력, 기존 반입물품 검사와 더불어 전략물자·사치품 등 대북 반출금지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다. 특히 화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출경 20분전까지 심사를 마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9년 말부터 신종플루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개성지역을 출입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와 북한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는 우선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출·입경자를 대상으로 열감지기 및 고막체온계를 이용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기존 입경검역과 더불어 출경검역도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였다. 개성공단내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 입경 조치 후 감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 방지에 주력하였다.

4. 남북간 해상 및 항공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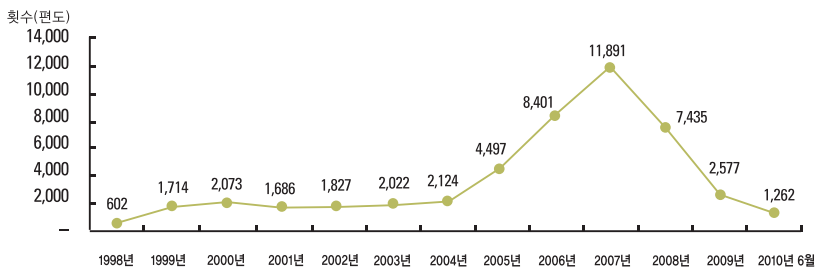
가. 해상운송

2005년 8월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우리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 등 7개항과 북한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등 7

개항 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어 남과 북의 국적선이 운항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8월 15일을 계기로 북한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5년 8월부터 남과 북의 해사당국(남: 통일부, 북: 육해운성)은 전화 1회선과 FAX 1회선의 유선통신망을 설치하여, 1일 2회(오전, 오후)씩 정기적으로 통화하면서,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및 각종 사고시 긴급통보, 선박운항정보 제공 등을 통해 남북간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2009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2,577회로 2008년 대비 65.3%가 감소하였다. 우리측 선박은 해주·고성 등지의 바다모래와 수산물 반입 감소로 2008년보다 71.5%가 감소한 2,044회를 운항하였다. 북한 선박은 주로 수산물 수송 증가 및 2009년 5월부터 인천-남포 간 정기 화물선(동남1호)이 투입되면서 2008년보다 109.8%가 증가한 533회를 운항하였다. 2010년 1~6월 중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1,262회였다. 한편 2010년도 5월 24일에는 천안함피격사건과 관련 북한 선박의 우

리 해역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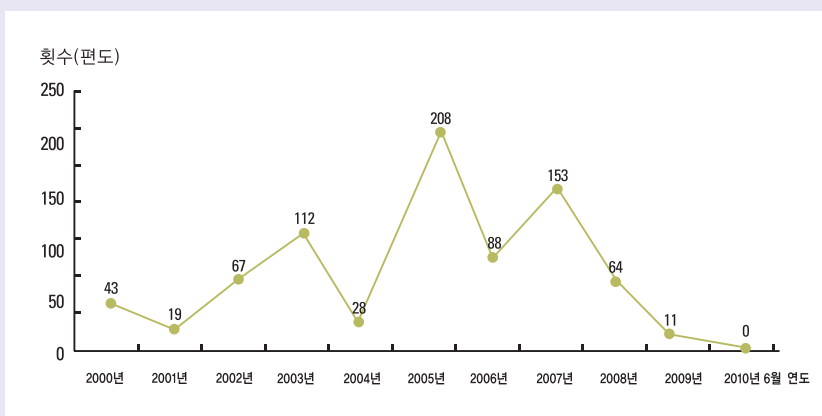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2010년 6월까지 북한 선박은 우리측 해역을 총 2,165회 운항하였으며, 이 중 남한과 북한간 운항은 1,477회, 우리측 해역을 통과해서 북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예: 서해 남포 ↔ 동해 청진)은 688회였다.

나. 항공운송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평양간 서해를 우회하는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였다. 2009년에는 당국간 회담 및 민간 방북행사가 중단되면서 남북간 항공기 운항도 2008년 대비 82.8% 감소한 11회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북한 경유 방한,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북한 조문단 방남 및 보즈워스(Stephen Warren 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국정부 대표단 방북을 위한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졌다.

2010년 1~6월 중에는 남북관계 상황 악화에 따라 민간 방북행사 등이 전무하여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간 항공기운항 현황



제5절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1. 개소 및 운영 경과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거래방식을 직접거래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하여 2005년 7월 12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개설하였다.(2008.2.29 대통령령 제20721호,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개칭)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는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정부기관으로서, 남북당국이 동일건물에 근무하면서 상시 접촉을 통해 남북사이의 경제거래 및 투자의 소개와 자문, 연락지원, 편의 보장, 교역·투자 관련자료 제공, 사업협의 지원, 교역상담회·설명회 개최, 상품전시회 참가 지원 등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8년 3월 24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3월 27일 당국인원 11명이 철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4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사무소 폐쇄 통보로 12월 1일부터는 사무소 기능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2009년 8월 2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정상 운영하며 해당관계자들의 출입·체류를 이전과 같이 한다”고 통보하였으며, 9월 1일에는 경제협력협회사무소 북측사무소 명의로 “9월 4일부터 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정상 운영하려고 하니 양측 사무소명단을 9월 2일 교환하자”고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이에 우리측은 9월 2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남측소장 명의로 “우리측 내부준비관계로 9월 7일부터 정상운영하기를 희망하며, 양측 사무소

명단은 9월 3일 교환하자”고 북한측에 수정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이 우리측의 수정제의에 동의함으로써 남과 북은 9월 7일부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을 정상화하였다.

한편,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대북조치 발표(2010.5.24) 이틀 후인 5월 26일 북한측은 “남측 당국이 함선사고를 우리와 연계한 것은 진상을 왜곡한 것으로 금일 이시간부터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철폐하고, 남측인원 전원을 금일 오전 12시까지 추방한다”고 북측사무소장이 구두로 통보해 왔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우리측은 동 조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무소 폐쇄·인원추방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5월 26일 당시 개성 체류인원 8명이 모두 철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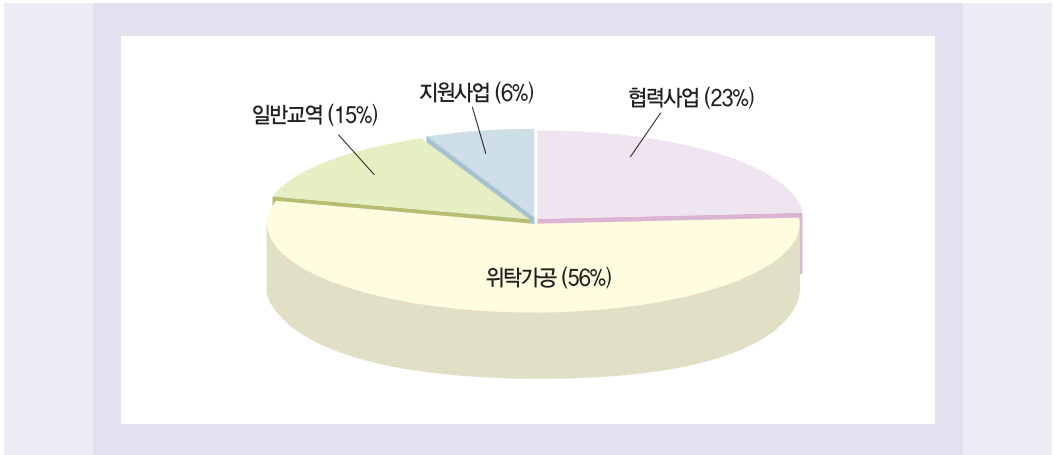
2. 민간 경제협력사업 추진 지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기능 정지로 2008년에는 중국 단둥에서 개최되었던 춘하북 위탁가공 상담회가 2009년 9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기능이 정상화됨에 따라 협의사무소에서 2차례 개최(2009.11.10~12.15, 2010.1.25~2.13)되었다. 여기에는 총 65개 우리측 업체 관계자 171명과 북한측 업체 관계자 231명이 참가하여 2010년 춘·하북 약 1,298만 장(약 2,429만 달러 규모)의 물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2009년 9월 7일 기능 정상화 이후 2010년 5월 26일 철수시까지 192회의 남북 민간기업간 사업협의를 진행되었으며, 2005년 10월 28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 이후 2010년 5월 26일까지 위탁가공 821회, 협력사업 333회, 일반교역 226회, 지원사업 96회 등 총 1,476회의 사업협의를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 4,703명, 북한측 4,467명 등 총 9,170명의 인원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이용하였다.

2005~2010년 사업형태별 구성비



또한 남북기업간 직접통신이 곤란하고 현지공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경협업체간 사업제안, 작업지시, 작업진도 파악, 출하제품 선적 확인 등 다양한 협의문건을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남북 민간경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였다. 2009년 2,147건을 비롯

남북간 사업협의를 및 참석인원 현황

연도별	사업형태별 사업협의를 건수(건)					참석인원(명)		
	위탁가공	협력사업	일반교역	지원사업	계	남한	북한	계
2005년	13	16	9	5	43	160	111	271
2006년	222	131	69	24	446	1,396	1,149	2,545
2007년	316	94	64	36	510	1,540	1,386	2,926
2008년	156	64	46	19	285	1,012	1,040	2,052
2009년	75	13	23	7	118	339	461	800
2010년 (5,26기준)	39	15	15	5	74	256	320	576
합계	821	333	226	96	1,476	4,703	4,467	9,170



남북기업간 사업협의 장면(2009.12.15)



문건전달 연락관 접촉 장면(2009.9.23)

하여, 사무소 개소 이후 2010년 5월 26일까지 남과 북은 총 2만 7,862건 (남→북: 1만 3,743건, 북→남: 1만 4,119건)의 문건을 교환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간 민간경협 추진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송달이 필요한 견본품을 택배시스템을 활용하여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해 교환·전달하는 견본송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견본품 전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남북 민간경협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남북 사무소간 견본송달 지원에 관한 합의서 체결(2006.5.4) 이래 2010년 5월 26일까지 총 1,635건의 견본품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해 교환·송달되었다.

견본 송달지원 체계



연도별 대북 민간경협 지원실적

연도별	사업협익	문건증개	견본송달
2005년	43	27	1
2006년	446	3,221	222
2007년	510	7,325	484
2008년	285	11,630	686
2009년	118	2,147	97
2010년 (5.26 기준)	74	3,512	145
합 계	1,476	27,862	1,635

3. 남북경협 기업과의 소통 강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의 기능이 정지된 기간(2008.12.1~2009.9.6)에는 그동안 협의사무소를 이용해 왔던 대북 경협기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하고 남북 경협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협기업 간담회(27회, 55개 업체대표 참가)를 개최하여 정부와 경협기업간 소통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대북 경협사업에 관심있는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대북 경협사업 추진절차 안내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남북 경협사업에 관한 이해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민간의 남북경협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부와의 소통 강화는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북 경협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4. 남북회담 개최 지원

2009년 9월 7일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기능이 정상화된 이후, 여러 차례의 남북당국간 회담이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 10월 14일 개최된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2009.10.16), 개성공단 해외공동출장 실무협의(2009.11.23), 개성공단 해외공동출장 평가회의(2010.1.19~21), 개성공단 제4차 실무회담(2010.2.1),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2010.2.8),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2010.3.2) 등 2010년 5월까지 총 7차례의 남북회담이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는 개소 이후 2010년 5월 26일 현재까지 총 43회의 남북간 회담을 지원하였다.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2010.2.8)





03

남북 인도분야 협력

제1절 남북 이산가족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제3절 인도적 지원

제4절 북한인권

제3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남북간 인도분야 협력은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이산가족문제는 당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서 정부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적십자회담이 2009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십자회담 등 남북간 협의시 송환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편 2007년 제정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2010년 6월말까지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375건, 탈북 귀환자에 대한 정착금 8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1건의 지급이 결정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조건없이 추진

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지속하였다. 2009년에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의 북한내 확산을 막기 위해, 12월 18일에 타미플루 등 치료제 50만 명분을 지원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2008년에 북한에서 실시한 인구 및 주택 조사 사업의 결과, 북한의 총 인구수는 2,405만 명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에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2009년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인권실태조사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1절 남북 이산가족

고령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7차례의 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한 4,130가족, 2만 848명이 상봉하였다.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은 인도주의 정신 존중의 원칙, 근본적 문제해결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등 인도적 문제해결 3원칙을 제시하고 북한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남과 북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추석을 계기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2009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금강산)

당국차원의 교류 현황(2000년~2010년 6월)

구 분	남	북	계
대면상봉(17회)	1,780가족(11,227명)	1,793가족(5,873명)	3,573가족(17,100명)
화상상봉(7회)	279가족(2,257명)	278가족(1,491명)	557가족(3,748명)
계	2,059가족(13,484명)	2,071가족(7,364명)	4,130가족(20,848명)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2년만에 재개되었다. 2009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남측 97가족(126명)이 재남가족 228명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북측 98가족(106명)이 재남가족 428명을 상봉하였다. 상봉행사에는 국군포로 2명, 납북자 2명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당국차원의 교류와 함께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2009년 2월부터 민간교류 경비지원 금액을 최대 생사확인 100만원, 상봉 300만원, 교류지속 50만원으로 2배가량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 성사 건수는 2007년 542건, 2008년 314건, 2009년 119건, 2010년 상반기 23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민간교류의 지속적 감소추세는 이산가족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당국간 교류와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교

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교류 절차 및 경비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역
 량있는 민간단체를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건수

(단위: 건)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9	200	152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월	계
생사확인	198	388	209	276	69	74	50	35	10	3,836
서신교환	935	961	776	843	449	413	228	61	9	11,391
상봉	208	283	188	95	54	55	36	23	4	1,732

한편 정부는 2008년부터 고령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
 년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9개 지역에서 이산가족 위로방문 및 정책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서울·경기 지역 미상봉 이산
 가족 300여명을 초청하여 남북출입사무소·도라산역·통일전망대 등 남북



2009 이산가족 초청행사(경의선 출입사무소)

분단과 교류의 현장을 둘러보고 이산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초청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정부는 추석과 연말 등 계기시마다 소외계층 고령 이산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0년에도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속초, 여수, 경주 등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지역별 100여명씩 총 300여명의 고령 이산가족을 초청하여, 1박2일간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하였다.

2009년 3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법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최초의 법률로서 제도화하였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주요내용은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통합 관리체계 구축,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대북지원,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산가족법의 제정으로 체계적·효율적 교류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조 항	주요 내용
제4조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제5조	3년마다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 보고
제6조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9조	상봉행사의 정례화와 상봉 규모의 확대, 면회소운영, 긴급가사방문 등을 위해 북한당국과 협의 의무
제10조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
제11조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12조	이산가족 교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	권한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료에 대한 현행화 작업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2009년 10월부터 두달 동안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 중 40대 이상 이산가족 8만 2,371명을 대상으로 안내서한을 발송하여 연락처 등 관련자료를 현행화하였다.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 12만 8,124명 중 4만 3,990명이 사망하여 생존자는 8만 4,134명이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등록현황

(2010년 6월말 현재)

구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50세	계
인원수(명)	4,745	29,572	30,715	11,994	7,107	84,133
신청비율(%)	5.6	35.2	36.5	14.3	8.4	100

2008년 7월 12일 완공하고 개소가 보류중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최소 유지·관리중이었다. 북한측은 2010년 4월 27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면회소 몰수조치를 강행하였다. 정부는 북한측의 반인도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귀를 촉구하였다.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1. 개관

6.25전쟁 휴전 이후 UN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하였다. 당시 UN군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 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실종된 국군의 상당수는 송환되

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탈북 귀환 이후 2010년 6월말 현재 총 79명의 국군포로가 탈북 귀환하였고,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2009년말 기준으로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북자는 크게 6.25전쟁 중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 등을 고려하면 8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한 피납자, 즉 전후 납북자는 총 3,832명이다. 이중 86%인 3,310명은 납북 직후 1년 이내에 귀환하였으며, 8명은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하였다. 2010년 6월 현재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는 514명으로 추정된다.

전후 납북자 현황(2010년 6월말 현재)

(단위: 건)

구 분	계	어선원	KAL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832	3,729	50	27	6	20
귀환자	3,318	3,271	39	-	-	8
미귀환자	514	458	11	27	6	12

2. 남북 협의를 통한 해결 노력

정부는 그동안 남북당국간 회담과 적십자 회담 등 계기시에 지속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의 경우 이미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된 문제이고 납북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협의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여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협의해왔다. 그러나 이러

한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것으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산가족 범주내의 접근이 아닌 송환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측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에 대한 논의를 회피함에 따라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2009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에 과거와 같이 국군포로 10명, 납북자 12명의 생사확인을 의뢰하여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1명과 납북자 2명은 우리측 가족과 상봉하였다. 또한 북한측 상봉신청자중 국군포로 1명이 포함되어 우리측 가족과의 상봉이 성사되었다. 상봉행사 이후 10월 16일 개성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도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국군포로·납북자 상봉현황(2000년~2010년 6월) (단위: 명)

구 분	생사확인 의뢰수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기타	상 봉	상봉 가족수
전후납북자	109	17	22	70	16	18가족 (81명)
국군포로	112	15	13	84	13	22가족 (89명)
합 계	221	32	35	154	29	40가족 (170명)

3.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후 발생한 납북자와 가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탈북귀환 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 국가공권력으로 인한 사망과 상이의 피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에서는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 피해위로금, 보상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납북자문제 실태조사, 납북자가족의 권리침해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이 있으며, 대학교수, 법조인, 남북관계 전문가와 당연직 위원인 정부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원회」와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납북피해자 신청서 접수현황

(2010년 6월말 기준/단위: 건)

어 부	피해위로금			정착금 주거지원금	보상금	합 계
	해군 1-2정	KAL기	기 타			
337	8	10	21	8	9	393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2010년 6월말 기준)

구 분	신청(건)	지원결정(건)	지원액(천원)
피해위로금	376	369	11,609,273
정착금·주거지원금	9	8	1,528,320
보상금	8	1	67,604
합 계	393	378	13,205,197

이 법의 시행이후 2010년 6월말까지 피해위로금 등 남북피해 지원신청이 총 393건에 이르렀고, 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여 총 378건, 132억 5백만원(피해위로금 369건, 정착금·주거지원금 8건, 보상금 1건)의 지급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7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위로금 188건, 정착금 5건, 보상금 1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09년 11월 5일에 민간위원중 4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명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였으며, 2009년 11월 27일 제22차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김호섭 위원을 제2기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2010년에도 민간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2010년 4월 8일에 2명을 신규 및 재위촉하였다.

2009년 위원회에서는 남북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자가족에게 안내서한을 발송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남북자가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강원과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고령자와 지방거주 남북가족들의 피해위로금 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주요 일간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신청 남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였다. 인터넷카페를 통해서도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 안내, 각종 신청서 등 민원 서식을 게재하여 남북피해자들의 지원신청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법률에 따른 지원외에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남북자 가족에 대해 명절과 연말연시에 쌀과 생필품, 소정의 격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남북자가족에게는 사단법인 '사랑담는 사람들'과 동인병원(동해시 소재)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밖에 통일부 장·차관 등은 남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귀환남북자의 국내 정착을 격려하였다.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2009년~2010년 6월)

일 자	위원회	위원회 결과
2009.1.30	제13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5건, 494백만원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결정 : 1건, 198백만원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산정과 지급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09.2.27	제14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1건, 346백만원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결정 : 3건, 528백만원
2009.3.30	제15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7건, 209백만원
2009.4.28	제16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3건, 432백만원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결정 : 1건, 224백만원
2009.6.4	제17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9건, 634백만원
2009.7.3	제18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0건, 323백만원
2009.8.31	제19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7건, 522백만원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산정과 지급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
2009.10.6	제20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1건, 312백만원
2009.10.30	제21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6건, 191백만원
2009.11.27	제22차 위원회	위원장 호선, 산정분과위원장 임명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3건, 433백만원 보상금 지급결정 : 1건, 67백만원
2009.12.17	제23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7건, 522백만원
2010.1.28	제24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6건, 187백만원 정착금(가산금) : 1건, 26백만원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0.2.25	제25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6건, 208백만원
2010.3.25	제26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6건, 191백만원
2010.4.29	제27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8건, 278백만원
2010.5.27	제28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2건, 407백만원
2010.6.24	제29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21건, 733백만원



의료지원



이동민원 현장

또한, 납북자가족의 피해위로금 신청기한이 2010년 10월 27일인 점을 감안, 피해위로금 신청독려 홍보계획을 수립(2010.5.18)하였으며, 지방버스 내·외부 광고, 통일부 관련 홈페이지 팝업창, 옥외 전광판, 지역 유선방송 자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는 등 해당가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납북자 가족 위로방문(2009.2.6)



귀환 납북자 위로방문(2009.7.31)

4. 6.25 전쟁 중 납북자 문제

6.25전쟁 중 북한은 제헌의원과 고위공무원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납치는 물론 부역 동원과 의용군 충원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강제 동원을 실시하였다. 이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확인된 명부중 최대치는 1952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8만 2,959명이다.

정부 발간 납북자 명부

연번	명 칭	작성주체	작성시기	인 원	존재여부
1	서울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2,438명	보존
2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2년	82,959명	보존
3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2년	126,325명	유실
4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3년	84,532명	유실
5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년	17,940명	보존
6	실형사민 명부	국방부	1963년	11,700명	1권: 보존
					2권: 유실

6.25전쟁 초기부터 1963년까지 정부차원에서 납치자 명부를 수차례 작성하였으나, 국제적 냉전질서 속에서 남북간 대결이 심화되어 생사확인과의 송환에 대한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정부와 가족들의 노력이 중단되었다. 2000년에 6.25납북자가족단체가 재결성되었으며, 2001년 9월 6일 통일부의 설립허가에 따라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설립되어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2006년 9월에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제1권을 편찬한데 이어, 2009년 9월 제2권을 발간하였다. 사료집에는 납북자 가족의 증언을 비롯하여 6.25전쟁중 납북과 관련된 국내외의 문서자료를 광범위하게 발

굴하여 수록하였다.

전시납북자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안이 16대와 17대 국회에서 총 4건이 발의되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2008년 12월 10일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박선영 의원이 2009년 1월 23일에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두 법률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되어 2010년 2월 23일 상임위에서 통합대안이 의결되고, 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월 26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6.25전쟁 납북사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어 6.25 전쟁중 납북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인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3절 인도적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민간 대북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 대북지원 분배투명성 향상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 2월 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지원심사평가단’을 확대 구성하였고, 9월에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0년도 통일부 연두 업무보고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북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침을 밝혔다.

특히 2009년에는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장거리 로켓발사 및 핵 실험 등으로 인해 우리국민의 신변안전 확보문제가 대두되어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 및 지원 물자의 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물자반출 및 방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민간 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지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9년 12월에는 북한의 신종플루 발생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당국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2009년 정부는 당국 차원에서 179억원, 민간단체를 통해 105억원, 국제기구를 통해 216억원 등 총 5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는 5월 24일 인도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기로 하였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인도적 지원만은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던 바, 수혜대상·지원품목·투명성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

1. 당국 차원의 지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쌀·비료 지원 등 당국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12월 초부터 일부 대북 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내 신종플루 발생 보고를 받고, 12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지원을 지시하였다. 북한은 12월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의주·평양에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공식화하였고, 이에 정부는 북한과 남북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과 손소독제 20만리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북한 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해 신속히 지원절차를 진행하여 국회 상임위 보고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18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1,500만 달러 규모의 타미플루 40만명 분, 리렌자 10만명 분, 2010년 2월 23일에는 손소독제 20만리터를 각각 북한에 전달하였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문가들이 동행하여 치료제 및 손소독제의 사용 방법과 우리의 신종플루 방역을 위한 경험과 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북한은 이를 잘 참고하겠다는 반응과 함께 우리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였다.

2.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속되었다. 정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2000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남북관계의 조정국면이 지속되고



정부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치료제 사용방법 설명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장거리로켓 발사 및 제2차 핵실험, 천안함 피격사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환경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예년에 비해 다소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종전 개별사업, 합동사업, 정책사업, 영유아지원사업 등으로 세분되어 있던 사업유형을 개별사업과 정책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절차·사업내용 등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금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지원심사평가단’을 확대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구매업무 서비스 지원 및 공개경쟁입찰 활성화 추진 등 기금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노력하였다.

가. 개별사업

개별사업은 1개 단체 또는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정부는 2000년 7개 사업에 33억 8,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8년까지 257개 사업에 총 784억 8,5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09년에는 북한의 연이은 강경조치들로 인하여 남북관계 긴장과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남북협력기금 지원도 당초 계획과 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내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 하에 8월 3일과 10월 22일 두 차례로 나누어 15개 단체의 취약계층 및 영유아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45억 2,4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6월말까지 26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다.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지원액
1차(8.3 의결)	남북 나눔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 등 10개 사업	3,575
2차(10.22 의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의약품지원 등 5개 사업	949
합계	15개 사업	4,524

나. 정책사업

정부는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전액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2007년에 도입하여 2008년까지 북한산림녹화, 제약공장 원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7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에도 사업추진 여건 악화로 기금지원이 지연되다가 12월 28일 취약계층 지원, 산림녹화, 기초의약품 생산지원 등 6개 사업에 60억 5,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6월말까지 6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다.



민간단체 지원물자 분배현장

민간단체를 통한 정책사업 지원(2009.12.2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사업추진 단체	지원액
취약계층지원	○ 어린이 영양식, 생활용품 등 지원 ○ 기초 의약품 지원 - 항생제, 영양제, 진단시약 등 필수 의약품, 의료소모품	우리민족서로돕기(9억원) 한국제이티에스(11억원) 남북어린이어깨동무(8억원) 어린이재단(7억원)	3,500
산림녹화	○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묘목 지원 등	겨레의 숲	1,980
기초의약품 생산 지원	○ 기초의약품 생산 지원 및 GMP 교육 사업 - 수액제 등 기초의약품 생산 및 GMP교육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00
사업관리			75
합계			6,055

3.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1996년 이후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해왔다. 2009년에는 2개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사업 3건에 대해 1,816만 달러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북한 말라리아 방역과 관련하여 107만 달러(질병관리본부지원액 제외), 북한 영유아 지원과 관련하여 1,311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말라리아 방제 지원사업의 경우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 4월 7일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하였고, 4월 23~24일간 인도 델리에서 기술협의를 통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모기장 6만장, 치료제 10만 명분, 예방약 180만 명분 등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영유아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

한 지속적인 지원방침에 따라 12월 28일 의약품 및 기술지원, 인력교육, 번역·출판, 모니터링 등의 북한 영유아 보건의로 체계 개선을 위해 기금지원을 결정하였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도 12월 28일 영유아 지원을 위해 협력기금에서 398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사업, 보건 및 영양지원 사업 등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내역

① WFP(식량지원)

연도	내역	지원액(천원)
1996	혼합곡물 3,409톤	200만불(16억원)
1997	혼합곡물 18,241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2,053만불(185억원)
1998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100만불(154억원)
2001	옥수수 10만톤	1,725만불(223억원)
2002	옥수수 10만톤	1,739만불(235억원)
2003	옥수수 10만톤	1,619만불(191억원)
2004	옥수수 10만톤	2,334만불(240억원)
2007	옥수수 1.2만톤, 콩 1.2만톤, 밀 5천톤, 밀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2,000만불(190억원)
계	543,950톤	12,770만불(1,434억원)

② WHO(말라리아, 영유아, 긴급 의료지원)

연도	내역	지원액(천원)
1997	의료기자재 등	70만불(6.3억원)
2001	말라리아 방역	46만불(6억원)
2002	말라리아 방역	59만불(8억원)
2003	말라리아 방역	66만불(8억원)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구호세트	87만불(10억원)
2005	말라리아 방역	81만불(9억원)
2006	말라리아 방역(100만불), 영유아지원(1,067만불)	1,167만불(116억원)

2007	말라리아 방역(138만불), 영유아지원(938만불), 홍역지원(105만불)	1,181만불(111.8억원)
2008	말라리아 방역(120만불), 영유아지원(1,027만불)	1,147만불(148억원)
2009	말라리아 방역(107만불), 영유아지원(1,311만불)	1,418만불(166.5억원)
계		5,322만불(589.6억원)

③ UNICEF(취약계층, 영유아)

연도	내역	지원액(천원)
1996	분유 203톤	100만불(8억원)
1997	ORS공장, 분유 781톤	394만불(35.4억원)
2003	취약계층 지원	50만불(6억원)
2004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12억원)
2005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10억원)
2006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230만불(23억원)
2007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315만불(29억원)
2008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408만불(47억원)
2009	영유아지원(백신, 보건, 영양)	398만불(36.6억원)
계		2,095만불(207억원)

④ 기타 국제기구(기상자재, 농업 등)

연도	국제기구	내역	지원액
1996	WMO	기상 장비	5만불(0.4억원)
1997	UNDP	수해복구 장비	120만불(11억원)
1997	FAO	영농 자재	30만불(3억원)
2007	IVI	백신, 의료교육	50만불(4.6억원)
2008	IVI	의료장비 및 시약지원	49만불(7억원)
계			254만불(26억원)

4.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 인구조사사업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별도로 정부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 총조사 사업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UNFPA의 요청에 따라 2007년 6월에 동 사업에 미화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7년 12월 10일에 UNFPA와 「2007~2009 인구조사를 위한 북한의 기술 역량 강화」 사업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UNFPA는 예비인구조사(Pilot Census)를 거쳐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조사에는 조사인원 및 북한 중앙통계기관 종사자 등 4만 4,000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북한 전역에 걸쳐 호별방문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UNFPA 자문하에 자료분석 작업을 거쳐 2009년 12월 16일 북한은 2008년 인구일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구조사결과 북한은 출산률이 저하되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북한의 총 인구수는 2,405만 2,231명으로 남성이 1,172만 1,838명, 여성이 1,233만 393명으로 나타났다.

제4절 북한인권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이같은 심각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국제사회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대해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북한의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

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국제사회와의 협력

최근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개선조치를 촉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인권문제를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제63차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시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2009년 3월 제10차 UN 인권이사회, 11월의 제64차 UN 총회, 2010년 3월 제13차 UN 인권이사회 등 UN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정부는 총 4번에 걸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2009년 제64차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요약

- 북한 내에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으로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점에 대해 우려 표명
- 강제실종 형태의 납치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 북한의 불안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 정부에 예방 및 구제 조치 촉구
-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 및 지속적인 임무수행 노력 평가
- 북한정부에 대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도록 강력히 촉구
- 65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

정부는 2009년 6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비티 문타폰(Vitit Muntarbhorn)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연장안에도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2010년 6월까지 1년간 연장되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제10차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 차별, 개인 안보, 권리 및 자유에 대한 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침해 심각성, 여성·아동 등 특정그룹에 대한 불평등 대우 등 5개 세부 분야별 검토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이 여전히 비참하고 절망적이라고 평가하였다. 2010년 6월 18일 제14차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6년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해온 문타폰의 후임으로 인도네시아 출신의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을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문타폰 보고관의 임기는 6월말로 만료되고, 신임 다루스만 보고관이 2010년 7월부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결과 및 우리입장

구분	UN 인권위원회			UN 인권이사회		UN 총회				
	2003년 (59차)	2004년 (60차)	2005년 (61차)	2008년 (7차)	2009년 (10차)	2005년 (60차)	2006년 (61차)	2007년 (62차)	2008년 (63차)	2009년 (64차)
연도	2003년 (59차)	2004년 (60차)	2005년 (61차)	2008년 (7차)	2009년 (10차)	2005년 (60차)	2006년 (61차)	2007년 (62차)	2008년 (63차)	2009년 (64차)
표결 결과	28:10:14 (찬반 :기권)	29:8:16	30:9:14	22:7:18	26:6:15	84:22:62	91:21:60	97:23:60	95:24:62	97:19:65
우리 입장	불참	기권	기권	찬성	공동제 안찬성	기권	찬성	기권	공동제 안찬성	공동제 안찬성

한편, 2009년 12월 UN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를 제네바에서 개최하였다. 인권이사회는 2008년 4월부터 보편적 정례검토 제도를 통해 192개 모든 UN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제6차 정례인권검토회의에서는 북한을 비롯한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노르웨이 등 16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였다. 북한관련 검토회의는 북한대표와

UN 회원국들간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2개 UN 회원국들이 북한 대표단을 상대로 질의 및 권고를 직접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긴급하고 중요한 인권문제로 제기하였으며,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정례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북한 대표단은 이산가족문제는 6.15 및 10.4선언 합의에 따라 이행하고자 노력중이나 국군포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납북자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2. 시민사회와의 협력

정부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 대상 인터뷰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는 통일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국·영문)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학술행사와 자료발간 등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나 전문가가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활동도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의 「북한인권 NGO 국제회의」, (사)북한전략센터 주최 학술세미나,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2009 북한인권 국제회의」 등을 지원하였고,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발간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2』(사)북한인권시민연합 『생명과 인권』(계간지) 발간 등을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국내외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0 북한자유주간」 서울대회를 지원하였다. 인권단체들은 「2010 북한자유주간」 행사 기간 중, 북한인권 관련 기자회견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향후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다양한 행사 개최가 예상되는 바,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 북한인권법 동향

2008년에 발의된 북한인권 관련 4건의 의원발의 법안이 2009년에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2008년 7월 4일에 황우여 의원 등 23인이 「북한인권법안」, 7월 21일에 황진하 의원 등 25인이 「북한인권증진법안」, 11월 11일에는 홍일표 의원 등 10인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12월 26일에는 윤상현 의원 등 20인이 「북한인권법안」을 제의하였다.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안)은 2008년 11월 17일에,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일표 안)과 「북한인권법안」(윤상현 안)은 2009년 2월 19일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다.

2009년 2월 23일에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윤상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였으며 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월 14일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주관의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7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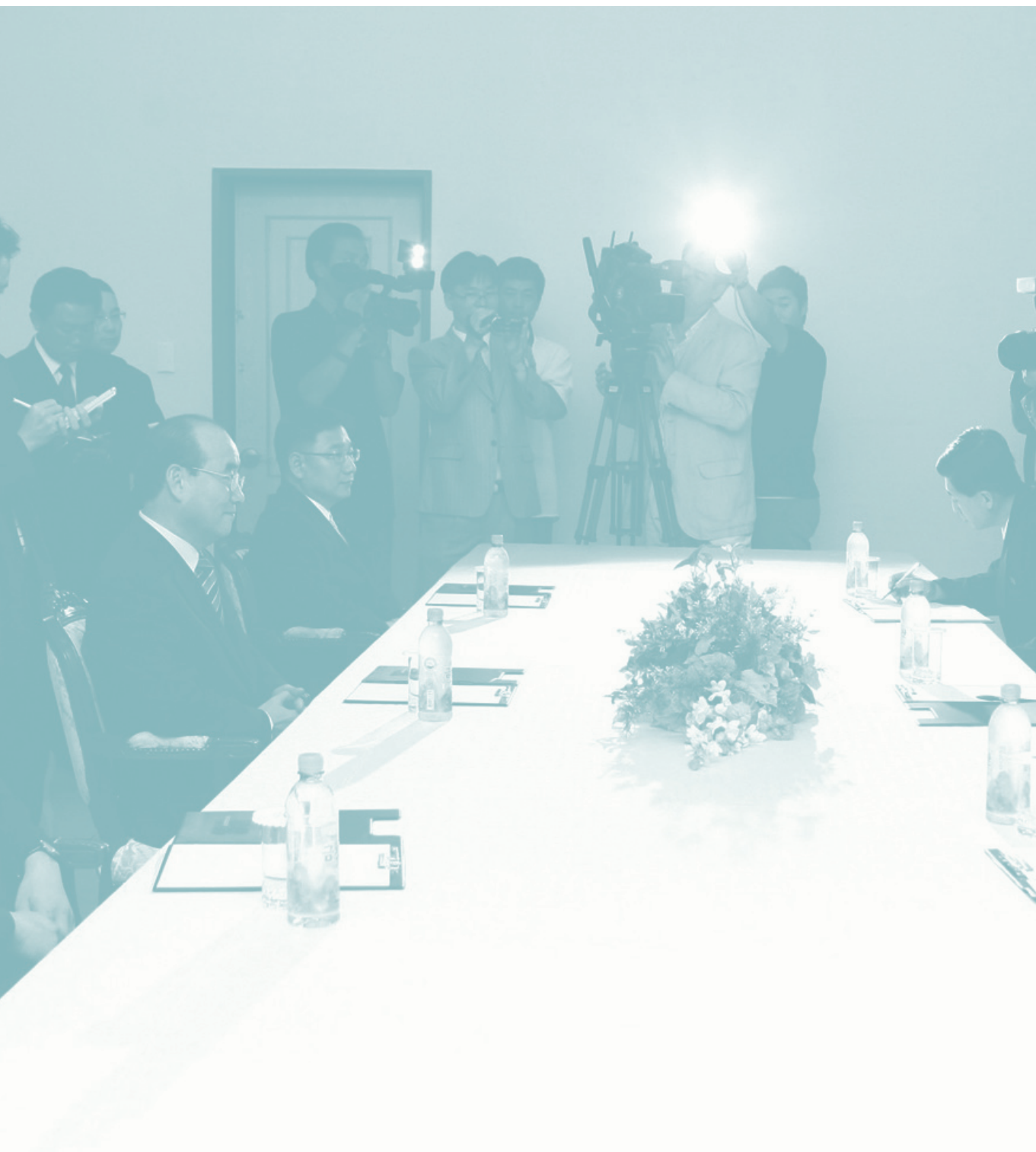


2009 북한인권 국제회의(2009.9.24)

일에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4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 2월 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동 조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의결하였으며, 4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북한인권법안」(대안)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 신설,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 실태조사, 교육·홍보,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04

남북대화

- 제1절 북한 조문단 방문
- 제2절 경제사회분야
- 제3절 인도분야
- 제4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제4장 남북대화

정부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남북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런 입장 하에 정부는 계기시마다 북한측에 당국간 진정성있는 대화를 갖자고 제의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총 9차례의 남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공식적인 남북회담은 아니지만 「故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 당시 북한 조문단 방문을 계기로 새 정부들어 첫 고위급간 접촉과 개성공단 문제 협의를 위한 「4.21 접촉」, 「해외공단 남북합동시찰 평가회의」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발하면서 남북간 대화는 중단되었으며, 판문점 직통전화도 단절되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군사적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호전성과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이는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이산가족상봉 정례회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성과가 미진하였다. 이와 함께 북

한의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 억류사건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북한 방문·체류시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제1절 북한 조문단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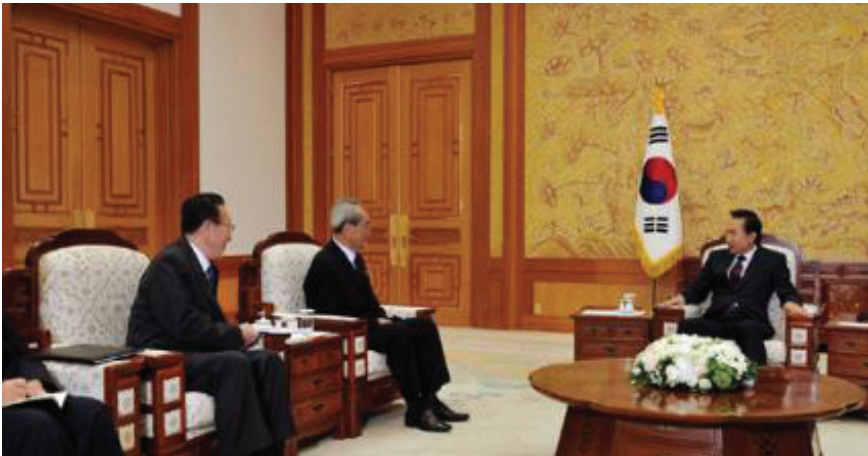
「故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과 관련, 북한 「특사조의방문단」(이하 ‘조문단’)이 2009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였다. 북한 조문단은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성 명	직 위	비 고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단 장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리 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김은주	국방위원회 기술일꾼	

주요 일정

- 제1일차 : 입국 → 빈소 조문(국회) → 국회의장 면담 → 김대중평화센터 방문 (이희호 여사 면담)
- 제2일차 : 민주당 대표 면담 → 통일부 장관 면담
- 제3일차 : 이명박 대통령 예방 → 귀환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조문단 접견

8월 21일 서울에 도착한 북한 조문단은 먼저 국회에 마련된 김대중 前 대통령 빈소를 조문하였다. 빈소 조문을 마친 조문단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은 조문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남북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7월 30일 북한측에 억류된 우리측 선원들과 선박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였다. 김기남 비서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전하였다. 이어 북한 조문단은 김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간 면담

대중평화센터를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된 서한을故 김대중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에게 전달하였다.

8월 22일에는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간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남북관계 상호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북한 조문단은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 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및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과 조찬모임을 하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도 가졌다.

8월 2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예방한 북한 조문단을 접견하였다. 이 자리에는 북한 조문단의 김기남 비서, 김양건 부장, 원동연 실장이 참석하고, 우리측에서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하였다.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하면서 이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하고,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북한 조문단은 남북이 협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예방을 마친 북한 조문단은 8월 23일 오후 북한으로 귀환하였다.

제2절 경제사회분야

1.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가. 4.21 접촉

2009년 4월 21일 개성에서 개성공단 관련 당국간 접촉이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남식(통일부 회담기획부장) 문무홍(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김인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참사)

이에 앞서 북한측은 2009년 3월 30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우리측 직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중이라는 통지문을 우리측에 전달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관련 조사내용과 경과에 대해 상세히 밝혀 줄 것과 우리측 인원에 대한 접견권 등을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근로자 억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월 16일 북한측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중대 문제를 통지할 것이라면서 우리측 당국과의 접촉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왔다. 이러한 접촉제안은 절차와 형식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우리측은 근로자 억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 이를 수용하였다. 다만, 「4.21 접촉」은 절차와 형식상의 문제로 공식적인 남북회담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우리측은 북한이 3월 30일부터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를 억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남북간의 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신병인도를 요구하였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남북합의 무효화 선언 등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이 2008년 12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중상·비방 등 대남비난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개성공단에서 우리측에 부여했던 “모든 제도적 특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토지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토지임대료 유예기간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존 계약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우리측이 이를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과 북은 의제에 대한 실질적 협의는 진행하지 못한 채 「4.21 접촉」을 종료하였다.

나.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이 2009년 6월 11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기획총괄팀장) 김현철(통일부 과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황충성(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인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우리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문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제반 현안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장기간 억류중인 근로자 문제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사안인 만큼 억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면서, 그의 소재 및 건강상태 확인과 우리측 대표단과의 접견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북한측이 주장한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의 계약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계약 당사자와 이에 영향을 받는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면서 토지임대료,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한 문제부터 협의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토지임대료는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에 대해 5억 달러를 요구하고, 근로자 임금은 월 30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 숙소와 탁아소 및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진입도로 건설 등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환경 개선과 용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대책도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거듭 우리 근로자에 대한 접견 및 신변안전 여부 등의 확인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개성공단사업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출입·체류 인원을 “이미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준에서 추가로 보장”해 줄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남북은 제기된 의제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지는 못하고 6월 19일 차기 회담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이 2009년 6월 19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기획총괄팀장) 김현철(통일부 과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황충성(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인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우리측은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근로자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협의·해결한다는 ‘실질적 접근’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측은 최우선 과제로 억류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 및 우리 대표단과의 접견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억류 근로자 가족이 근로자에게 보내는 안부서신과 북한 당국에게 접견을 요구하는 서신 등 두 건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이하 「3대 원칙」)을 북한측에 제시하였다. 이 「3대 원칙」은 그간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립된 것이었다. 우리측은 「3대 원칙」을 토대로 개성공단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

1. 규범 확립 원칙 :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철저히 준수
2. 경제원리 추구 원칙 :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원리에 따라 발전을 추구
3. 미래지향적 발전 원칙 : 국제경쟁력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미래지향적 관점과 의지 지향

특히 남북간 합의와 계약, 법규와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범 확립 원칙에 따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토지임대료 등의 재협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개성공단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구체적으로 출입·체류 제한조치의 철회,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의 해결, 남북출입·체류공동위원회의 구성·가동 등을 제의하였다.

한편, 타아소 건설 등 당면 현안문제는 출입·체류 제한조치 철회 등과 함께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 외국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는 성공적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외국공단을 남북이 합동 시찰함으로써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남북간 이견을 줄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북한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후 토지임대료를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류중인 우리측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조사중에 있으며,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우리측의 서신전달 요구에 대해서는 접수를 거부하면서도 “별 일 없다. 가족에게 전해 달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입주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육로통행 및 출입·체류 제한조치를 철회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남북은 차기회담을 2009년 7월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이 2009년 7월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기획총괄팀장) 한기수(통일부 회담1과장) 김현철(통일부 과장) 권동혁(통일부 사무관)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황충성(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김상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우리측은 먼저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의 소재와 건강상태를 즉시 알려줄 것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재강조하고, 「3대 원칙」하에 개성공단 관련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지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제기한 출입·체류 제한조치의 철회, 3통 문제의 개선, 출입·체류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협의·해결하자고 다시 한번 제의하였다. 또한 외국공단 남북합동시찰을 7월 20일부터 진행할 것을 제의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였다. 한편, 인도적 견지에서 탁아소 건설 문제를 즉각 협의할 용의가 있음도 표명하였다. 아울러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 우리측에 대한 비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회담운영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성공단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실무 본회담」과 당면 현안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실무 소회담」으로 나누어 회담을 운영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북한측은 억류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개성공단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지임대료 5억 달러 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지임대료 인상요구는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개성공단 실질현안 협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남북은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차기회담 일정에 대한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마.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가 2010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단 장	김영탁(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참가자	이강우(통일부 관리총괄과장) 김현철(통일부 과장) 김신철(통일부 관리총괄과 사무관) 권준호(기재부 남북경협팀 팀장) 김진선(지경부 남북경협팀 팀장) 안영욱(한국토지공사 팀장) 이승욱(한국토지공사 차장)	오광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만지성(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리영주(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원) 리응식(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원) 김순남(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원) 윤승현(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협력부 부장) 한명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처장) 홍시권(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가)

남북은 2009년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남북 합동으로 실시했던 중국·베트남 해외공단 시찰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방향과 공동 해결과제를 도출하는 문제 등에 관해 토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평가 회의인 만큼, 남북은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진행하였다.

평가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현안문제에 대해 상호 이견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우리측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 쌍방의 관심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측은 차기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3통문제와 숙소문제를 의제로 하여 2010년 2월 1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다음번 실무회담에서 3통문제와 숙소문제 이외에 개성공단 북한측 근로자의 임금인상 문제가 반드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2010.1.19~21)

남북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차기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듯 보였으나, 북한측은 우리 대표단이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에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로써 남북은 차기회담을 2월 1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평가회의를 종료하였다.

바.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4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4차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1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택(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 표	이강우(통일부 관리총괄과장) 정소운(통일부 회담2과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오광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리응식(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원) 홍시권(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우리측은 지난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라 3통문제와 근로자 숙소 건설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3통문제 중 ‘통행’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후 RFID) 도입을 기반으로 현재의 ‘지정시간대 통행’을 ‘일단위 통행’으로 바꾸는 등 남북간 통행을 보다 간소하고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전수조사’ 방식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통신’의 경우에는 광케이블을 활용하여 우선 인터넷망부터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자고 제의하였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는 우선 소규모로 건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함께 개성공단 관련 북한측 근로자의 수급실태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북한측도 3통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3통문제는 기본적으로 군부의 소관사항이므로,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개성실무회담에서는 임금, 숙소 등 여타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측에서 서해 포사격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남북관계 발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이 개성공단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반발하면서 정당한 군사연습이라고 강변하였다.

쌍방은 향후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문제를 협의한 후, 숙소와 임금문제 등은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군사실무회담 일자와 장소 등은 추후 우리측에서 통보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제4차 실무회담(2010.2.1)

사.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이 2010년 3월 2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강우(통일부 관리총괄과장)	리선권(조선인민군 대좌)
대 표	김정배(국방부 중령) 김도균(국방부 중령) 김현철(통일부 과장) 마경조(통일부 서기관)	전창제(조선인민군 상좌) 조철호(조선인민군 상좌) 강 일(개성공단 세관장) 리성수(개성공단 통행검사소장)

남북은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에 따라 3통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의 개최일정과 장소문제에 대해 남북 군사 당국간 채널을 통해 협의하였다. 협의과정에서 우리측은 그간 군사실무회담 관례에 따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군사실무회담을 고집하면서도 회담장소는 토의의제에 맞게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할 것

을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우리측은 3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에 장소는 북측 주장을 수용하여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되, 대표단은 3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해당 관계관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회담에 임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개성공단 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하고 북한측은 군사실무회담 대표단이 참여하는 형태로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전체회의와 분야별 실무접촉(통행·통관, 통신·군통신 분야)을 진행하고 3통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입장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3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과 회담의 운영방식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회담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회담운영을 위해 3통문제를 ‘통행·통관 분야’ 실무접촉과 ‘통신 분야’ 실무접촉으로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통행문제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을 통한 ‘상시통행’ 보장을 촉구하면서, 3월에 전자출입체계를 설치, 5월부터 전자출입체계와 ‘1일 단위 통행’의 본격 시행을 제의하였다. 통관문제의 경우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선별검사 비율은 50% 수준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문제의 경우 자유로운 통신보장을 위해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가 개성공단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실무접촉을 분야별로 운영하는 방식에는 동의하면서도, 3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측이 먼저 이행해야 할 사안들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먼저 우리측에서 6.15 및 10.4선언을 이행하고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를 중지할 것과 3통과 관련된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개성공단과 함께 동해지구에서의 3통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2010.3.2)

문제 해결을 위한 설비 및 자재·장비 명세를 새로 제시하면서,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남북은 앞으로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속 개최하여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며, 실무접촉 일자는 추후 확정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실무회담」이 2009년 10월 14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남식(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연합회 실장)
대 표	김석현(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장) 김충환(통일부 회담2과장)	김철만(국토환경보호성 과장) 김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과장)

2009년 9월 6일 새벽 북한측이 임진강 북한측 지역 댐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무단 방류하여 우리 국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즉시 대북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류계획을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9월 7일 통지문을 통해 임진강 상류에 있는 “언제(堰堤)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하게 방류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방류시 사전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우리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이 아니었고, 우리측의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9월 8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한 북한측의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 문제를 남북간에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한 북한측의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측은 10월 12일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을 10월 14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임진강 사고」에 대하여 책임있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진강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을 제시하였다.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

1.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 남북공유하천을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용
2. 상호협력의 원칙 : 공유하천 이용과정에서 남북이 서로 협의하고 협력
3. 신뢰의 원칙 : 공유하천 이용에 있어서 남북간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

나아가 우리측은 이러한 3대 원칙을 토대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통보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방류시 댐 명칭, 방류량, 방류 이유 등을 명시한 통보양식을 전달하고, 사전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향후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확인하였다.

북한측은 기본발언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하였다. 갑작스러운 방류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남북은 차기회담을 통해 홍수예보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의 제도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일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3.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8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남식(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강용철(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대 표	이천세(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박태영(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주광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책임부원) 리경진(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금강산·개성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3대 조건 즉,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기조발언에 앞서 금강산에서 피격 사망한 故 박왕자씨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는 묵념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고 하면서도,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라는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제기한 3대 조건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에 ‘진상’에 대해 해명한 바 있으며,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문제 역시 확고히 담보된 만큼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강변하였다.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2010.2.8)

또한 '실무접촉 합의서(안)' 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개성관광은 2010년 3월 1일부터 금강산 관광은 4월 1일부터 재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3대 조건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호응해 오지 않아 남북 양측은 차기 회담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제3절 인도분야

1. 남북적십자 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이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영철(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동식(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로학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부장)

정부는 그간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8월 17일 우리측 현대그룹과 북한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에 적

극 대처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측은 8월 2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여 1년 9개월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3원칙 하에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의하였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

1. 인도주의 정신 존중 원칙 : 남북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 없는 이산가족 교류 지속
2. 근본적 문제 해결 원칙 :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상시 상봉, 고향방문 및 점진적 자유 왕래의 실현
3. 상호 협력의 원칙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상호 협력

아울러 우리측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규모 및 일정을 제시하고 2009년 내 추가 상봉과 2010년 설을 계기로 한 상봉행사도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이산가족상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



남북적십자회담(2009.8.26~28)

번 적십자회담에서는 추석계기 상봉행사의 세부 일정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남북은 추석계기 상봉행사에 대해서는 큰 의견 차이 없이 합의하였으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는 수준에서 합의하여 2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남과 북은 9.26~10.1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 상봉규모는 각각 100명씩 실시
 - 9.1 생사확인 의뢰(200명), 9.15 회보서 교환, 9.17 최종명단 교환(100명)
 - 단체상봉은 금강산 면회소, 개별상봉은 금강산 호텔 등 기존시설 활용
 - 선발대 사업은 상봉 5일전부터 진행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2년여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2.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2009년 10월 16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대 표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과장)	박형철(「조평통」 서기국 책임부원) 리동혁(민화협 참사)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을 재강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2009년 내에 이산가족 추가 상봉을 하고, 2010년 설 계기에도 상봉행사를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 면회소의 정상운영 문제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산가족면회소 사무소의 남북대표 상주문제와 면회소를 통한 상시 상봉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앞서, 우리측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남북은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인도적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제4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북한은 우리 정부가 2008년 제 63차 유엔총회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데 반발하여, 2008년 11월 12일 판문점 남북연락 사무소간 직통전화 단절 등 남북간 연락업무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 판문점 남북연락업무는 북한조문단 방문(2009.8.21~23), 남북적십자회담(2009.8.26~28)을 계기로 2009년 8월 25일 재개되었다.

판문점 남북연락업무 재개 이후 이루어진 2009년도 남북간 연락업무는 직통전화 운용 226회, 남북 연락관 접촉 14회, 전화통지문 수·발신 24건, 북한 선박조난 등 긴급 구난활동 5회 등이다. 한편 2010년 5월 31일까지 남북간 연락업무는 직통전화 운용 218회, 남북 연락관 접촉 6회, 전화통지문



남북 연락관 접촉

수·발신 22건, 북한 선박조난 등 긴급 구난활동 1회 등이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2010.5.20)와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발표(2010.5.24)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여 또 다시 2010년 5월 26일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로써 2009년 8월 25일 정상화 되었던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등 남북연락업무가 9개월 만에 다시 중단되었다.

판문점 남북연락업무 재개(2009.8.25) 이후 남북간 주요 연락내용

연도	월별	주요 연락내용
2009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특사조의방문단」 출·도착상황 통보 및 비행운항계획서 전달 • 남북적십자회담(8.26~28, 금강산) 관련 전통문 접수 및 협의사항 통보 • 「연안호」 귀환 관련 전달사항 통보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9.21~10.1, 금강산) 관련 문건 교환 및 실무절차 • 협의 '북측의 임진강댐 무단방류' 관련 '국회의장' 명의 대북서한 전달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강 실무회담」 (10.14, 개성) 및 「적십자 실무접촉」 (10.16, 개성) 관련 전통문 교환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선박 「주작봉 5호」 피항 관련 전달사항 통보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12.18, 개성) 관련 전통문 및 전달사항 교환 • 북한선원 7명 대북송환 관련 전통문 발송 및 송환 실시
2010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송환 통보(1.5)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실무회담 대표단 명단 교환(2.5) • 손 소독제 지원 관련 통보(2.19) • 의약품 및 분유지원 관련 전달사항 통보(2.26)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 1만톤 지원/금강산·개성관광 관련 통보(3.15)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관련 통보(4.1)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조치 철회 요구 통보(4.9)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령도 해상을 통해 남측에 온 북한 주민 송환 요구 전통문 접수(5.12) •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 사업 중지 및 통신연계 단절 전통문 접수(5.26)





05

통일교육

- 제1절 통일교육 추진체계 정립
- 제2절 통일교육 실시
- 제3절 통일교육 지원
- 제4절 통일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제5장 통일교육

제1절 통일교육 추진체계 정립

1. 통일교육 기본방향 제시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1999년 2월 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헌법과 통일교육 지원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 기본계획」 및 『통일교육 지침서』를 발간하여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통일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부는 「2009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 ‘사이버 통일교육 확대 실시’ 등을 제시하였고, 「2010 통일교육 기본계획」에서는 ‘현장중심의 통일교육 확산’, ‘학교 통일교육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통일교육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2.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

지역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 체계 개선을 통해 통일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이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9년 10월 19일 공포되었다.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통일교육전문강사의 양성, 통일교육위원 위촉 등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통일교육 지원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일교육 활성화 노력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제8조를 개정하여 학교통일교육 진흥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였다.

셋째,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통일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일교육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전문과정」을 운영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그동안 통일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통일교육위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이 2010년 4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통일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3. 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정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사이버통일교육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 9월 3일 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운영규정에서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스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책임자, 시스템관리자, 사용자 등 각 역할에 맞는 업무범위와 처리절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비롯하여 교원·공무원사이버통일교육, 사이버방북안내교육 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절 통일교육 실시

정부는 각종 사회단체 임원·회원, 교사 등 교육 관계자,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등 각계 여론주도층을 통일교육원으로 직접 초청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초청교육과 시·공간의 제약 없이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도 초청교육은 학교 통일교육과정, 사회 통일교육과정, 공무원 통일교육과정,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방북 안내교육 등으로 구별되어 실시되었고, 2009년에 총 6,155명, 2010년 6월말 현재 2,750여 명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과정을 확대하였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느끼고’, ‘체험하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새롭게 운영하였다.

1. 초청교육 내실화

가. 학교 통일교육과정

학교 통일교육과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장·교감, 장학사,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2009년도에는 2008년(1,452명)보다 59% 증가한 총 2,474명이 과정을 이수하였고, 2010년에는 6월말 현재 1,030여 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 현황과 정부의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실상과 북한 핵문제, 안보환경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

고,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에 북한의 교육제도, 남북 교육통합, 학교 통일교육 기법 등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교사들이 한반도 주변정세, 북핵문제, 북한인권 등 통일환경과 북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커리큘럼도 보강하였다.

특히, 교육계의 여론 주도층인 교장·교감, 장학관·장학사들에게는 통일 교육의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관리자 맞춤형 커리큘럼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통일연찬을 실시함으로써 대북정책, 북핵문제, 북한인권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청소년 통일교실’은 탈북 청소년과 함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발표·토론하게 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였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2009년이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하여, 통일을 가상한 ‘모의국무회의’를 열어 통일을 위한 각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성찰하도록 하였다.



대학생 통일체험연수

나. 사회·공무원 통일교육과정

사회 통일교육과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종교계·여성계·통일관련 단체 회원, 향군 강사, 재외동포 등 각계각층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2009년도에는 2008년(1,878명)보다 12% 증가한 총 2,096명이 참여하였고, 2010년에는 6월말 현재 1,340여 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의 직능별 특색을 고려하여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민간 남북경협 실태와 추진사례”,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 “북한이탈주민 상담기법”, “사회복지분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등을 커리큘럼에 반영하였다.

한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특히 남북경협 관계자, 정훈장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 신규 임용 수습 사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통일교육과정도 운영하였는데 2009년도에는 총 1,585명이 이수하였고, 2010년에는 6월말 현재 370여 명이 참가하였다.

다. 재외동포 통일교육

재외동포가 조국애와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사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동포를 국내로 초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미국 시카고,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 현지 교포사회 지도층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세미나를 겸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남북관계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다.

또한 11월에는 재일본 민단간부를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단사회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이해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라.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2000년대에 들어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통일교육원에 통일미래 지도자과정을 개설하고 이후 2009년(제4기)까지 총 135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제5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통일미래 지도자과정은 중앙과 지방의 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들이 참가하는 1년간의 장기교육과정이다. 「통일정책」, 「북한이해」, 「국제관계」, 「통일과정」 등 크게 4개의 분야별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강의, 정책세미나, 현안문제 토론회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통일정책」 분야는 ‘통일에 대한 비전의 제시’, ‘통일정책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 ‘분야별 교류협력 이해’로, 「북한이해」 분야는 ‘북한 연구방법과 배경지식’, ‘북한의 정치행정’, ‘북한경제 및 산업’, ‘북한사회 및 문화예술’로, 「국제관계」 분야는 ‘국제정치와 한반도 주변정세’, ‘주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변국 외교현안', '동북아 협력체제와 한반도' 로, 「통일과정」 분야는 '국가통합이론', '분단국 통일·체제 전환사례', '통일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 현장·안보현장 방문 등 체험학습, 구사회주의 국가 체제전환 해외사례연구, 개인별 정책과제 연구, 교양 강의,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정도 편성되어 있다.

마. 방북 안내교육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북한방문 예정자들을 위해 북한지역 방문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 북한 체류시의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방북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북 안내교육에는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례교육, 방북 예정자 요청시 현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출경 전 실시하는 영상교육 등이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방북예정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방북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는 방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방북 안내교육 내용 중 '방북 유의사항' 부분을 확대하고, '방북시 대화와 행동에 대한 요령' 을 보강하는 등 안전관련 사항을 강화하였다.

2009년도에 방북 안내교육을 받은 인원은 총 6,762명이며, 2010년 6월 말 현재 2,970여 명이 방북 안내교육을 받았다.

2. 사이버 통일교육 강화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게

재하는 한편, 교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2000년부터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겸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를 개설하여 다양한 사이버 통일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09년에는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다양한 통일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2005년부터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웹진(<http://zine.uniedu.go.kr>)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 이벤트도 개최하였다.

2009년에 총 9,300여 명이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2010년 6월말 현재 1,620여 명이 이수하였다.

가. 사이버 통일교육 강좌 운영

통일교육원은 2003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를 받은 이래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통일교육 직무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2004년부터 30시간(2학점)의 단기과정을, 2006년부터 60시간(4학점)의 장기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2009년도 총 이수자 수는 3,477명으로, 전년도보다 11.4% 증가하였다. 이 중 장기과정은 6회 운영에 645명이 이수하고, 단기과정은 7회 운영에 2,832명이 이수하였고, 2010년에는 4월말까지 콘텐츠 개편을 추진, 5월부터 6월말까지 570여 명이 이수하였다.

사이버 교육의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에는 장·단기과정 이수자들이 남북 분단 및 교류의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현장 체험교육은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 판문점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특강 등을 듣는 다양한 프로그램

교원 사이버통일교육 홈페이지

홈으로 | 사이트맵 | 통일교육원 | 웹진

교원사이버통일교육

교육과정 | 수강신청/결과 | 온라인정규강좌 | 교육이력 | 열린강좌 | Help Desk

회원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 ID/비밀 찾기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교원통일강좌

공지사항

- 제3기 장기과정 집합교육 장소는 대전, 충청 지역입니다
- 수업듣는 방법
- [장기과정]기수별 출석시험장소안내
- '09교원연수계획
- 곧바로 교원사이트로 접속하는 방법

온라인과정
Online Course

- step 1. 수요조사서 교육신청 및 명단제출
- step 2. 회원가입, 교육신청 확인
- step 3. 나의 강의실 선택
- step 4. 온라인 연수, 집합연수

오프라인과정
Offline Course

- step 1. 수요조사서 교육신청
- step 2. 교육생 명단 제출
- step 3. 교육안내
- step 4. 교육실시

온라인 강의실 이용안내 HELP DESK

온라인수강 필수 유틸리티 다운로드

온라인수강 필수 유틸리티 다운로드

온라인수강 필수 유틸리티 다운로드

수강관련 S/W 설치매뉴얼
온라인 수강 필수 유틸리티

통일교육원

Copyright © E.C.U 2003.9 ,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방침]
우)142-715 강북구 수유6동 535-353 . 안내 02) 901-7114 . 건의 Webmaster

램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장기과정 교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도 병행하였다. 집합교육은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특강,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9월 공무원 대상 원격통일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2007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점을 인정한 교원과는 달리, 공무원은 행정안전부가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사이버통일교육 홈페이지



공무원 사이버통일교육은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의 정치경제, 북한의 사회문화와 남북통합의 이해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기씩 총 9기를 운영하였으며, 총 4,48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2010년에는 4월말까지 콘텐츠 개편을 추진, 5월부터 교육과정을 개시하여 6월말까지 1,050여 명이 이수하였다.

그동안 방북 예정자들이 방북교육을 받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월 사이버 방북교육과정을 개설한 이후 2010년 6월말까지 총 8,190여 명이 이수하였다.

나.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정부는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통일의지 함양을 위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04년 1월부터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청소년통일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 대상 「통일교실」 및 초등생 대상 「한마음학교」 등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차원에서 「통일교실」 및 「한마음학교」 콘텐츠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초·중·고 수준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통일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사이버 방북 안내 교육 홈페이지

Home | Sitemap | Membership

교육소개 | 수강신청 | 나의학습실 | 자료실 | HELP DESK

사이버 방북 안내 교육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Cyber
국민과함께하는 사이버 방북 안내교육
각종 방북관련 정보와 풍부한 내용으로 방북안내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양 PYONG YANG
평양
금강산
개성

로그인 ID지정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공지사항
로그인시 팝업 차단 해제...
로그인을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반드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HOME

상업전화번호 안내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02-901-7175, 7149

권민준
미리보기

남북교류협력시스템

142-897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수유동) 통일교육원 대표전화 : 02-901-7114
본 사이트의 모든 저작권은 통일교육원에 있습니다.

family site

한편, 인터넷 잡지인 통일교육원 웹진(Unizine)을 매월 발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웹진은 교장·교감·교사 등 정책고객 4만 1,000여명에게 PCRM(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학계인사 등의 ‘통일칼럼’, 통일관련 다양한 주제를 만화로 표현한 ‘통일 카툰’, 통일교육 연수 참가 소감문인 ‘참여마당’, 탈북 대학생들의 국내 생활 적응기인 ‘평화열차’, ‘통일소식’, ‘자료마당’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사이버 이벤트 기획 추진

2009년에는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5월에는 통일관련 퀴즈를 보고 활을 쏘 정답을 맞추는 「사이버 통일교육용 양궁게임」을 개발하여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11월에는 통일 애니메이션인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과 ‘한마음학교’ 를 보고 게시판에 느낀점을 쓰는 「통일 애니메이션 보고 감상평 쓰기」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전국 초·중·고 학생 총 9,069명이 참가하였다.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은 주인공 헤미가 가상의 통일한국 모습을 체험한 후에 통일에 대한 생각이 변한다는 줄거리이며, ‘한마음학교’ 는 북쪽에서 온 친구들이 학교생활, 컴퓨터 배우기 등 일상의 에피소드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친구로 다가선다는 내용이다.

사이버 이벤트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이버 통일교육용 양궁게임


통일교육원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통일애니메이션 보고 느낀점(감상평) 쓰기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느낀점 작성하기

참가대상 초등학교
참가기간 2009.11.9(월) ~ 11.22(일)

지역애니메이션 '한마음학교' (1~7차시 모두)

작품접수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느낀점 작성 및 접수
 '청소년 통일배움터' 이벤트 코너에서 직접 작성(산문, 800자 내외)

입상자 발표 2009. 12.1(화)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용 대상, 금상, 은상, 참가상 순위별 문화상품권 지급

☎ 문의처: 02)901-7171(강령실사무관), ysk7@unikorea.go.kr



이벤트 참여하기 >

*본 이벤트는 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내에서 입력하신 정보는 주니어아이에게는 일체 저장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통일교육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관리 및 보호됩니다.

통일애니메이션 보고 느낀점 쓰기

제3절 통일교육 지원

1.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앞으로 통일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통일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근 실시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 없다'

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인식이 부족한 이유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 현장 교육운영 지도자들의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국가·사회에서의 청소년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 미흡, 객관적이면서 유익한 내용의 교육자료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국가관과 통일관, 안보관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지침서』와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기본교재의 내용을 개편하고 발간 부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한편,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청소년 대상 체험 통일교육 프로그램인 「평화통일대행진」도 기획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미래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교육청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관리자와 교사 등 일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하였다.

가. 청소년 통일교육 활성화 노력

청소년들이 올바른 통일의식 및 통일 관련 기본 소양을 함양함은 물론, 통일미래를 준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T/F」를 통일교육원 내에 구성·운영하였다.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T/F」는 각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협조를 얻어 청소년 통일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일선 초·중·고 및 통일교육 교사, 정책자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기회 확대 노력, 통일교육 담당 교육 관계자 지원 강화, 청소년 통일교육 자료 보급 및 활용 증대, 통일교육 지원제도 및 예산 확충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초청연수(8회, 505명), 학교 관리자 대상 지역별 「통일강좌」(3회, 1,720명), 통일교육 교사 대상 워크숍(2회, 106명)을 개최하였다. 2010년에는 6월말 현재 학교 관리자 대상 초청연수(3회, 205명), 통일교육 교사 대상 워크숍(2회, 60명)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역별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통일교육 사례·기법을 공유하며 학교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2009년에는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총 5회에 걸



통일교육 교사 워크숍 및 학교 관리자 대상 지역별 통일강좌

2010년 통일교육 시범학교 명단

구 분	학 교	소 재 지
서울	공연초등학교	노원구 공릉3동
	전동중학교	동대문구 휘경동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구로구 공동길
대구	학남중학교	대구시 북구 국우동
인천	가정여자중학교	인천시 서구 살고지로
경기	탄현중학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삼죽초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안성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금산동
강원	대진중학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매산초등학교	강원도 홍천군 남면
충북	주성고등학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소태초등학교	충북 충주시 소태면
충남	천안용암초등학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대전여자중학교	충남 보령시 대전동
광주	운남중학교	광주시 광산구 운남주공1길
울산	언양중학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초등학교	울산시 동구 동부동
대전	대전관저중학교	대전시 서구 원암마을1길
부산	엄궁중학교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동현초등학교	부산시 금정구 부곡1동
전북	군산 흥남초등학교	전북 군산시 문화9길
	완산초등학교	전북 전주 동완산1길
	서흥중학교	전북 군산시 흥남로
	이영중학교	전북 남원시 아영면
전남	신북중학교	전남 영암군 신북면
경북	경산 봉황초등학교	경북 경산시 진량읍
	영천 신녕중학교	경북 영천시 신녕면
	구미 상모고등학교	경북 구미시 상모동
경남	김해고등학교	경남 김해시 삼정동
	남해중학교	경남 남해군 남해읍
	용호초등학교	경남 창원시 용호동
제주	서귀 중앙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광명로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현장

처 충남, 충북, 경북, 강원, 제주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각 지역 교육청 인사 및 초·중·고 통일교육 담당 교사 등 총 1,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남북관계 현안과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2010년에도 6월말까지 전북, 대전 지역에서 2회 개최하였다.

또한 전국 20개 초·중·고등학교를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 및 맞춤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통일교육 모범사례가 초·중·고등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2010년에는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32개로 확대하였다.

나. 체험·참여형 통일교육 확산

정부는 새로운 세대의 학습 수요 특성에 맞추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자 참여형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서울지역 22개 학교(4,841명)를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 체험학습」을, 전국 32개 학교(7,784명)를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학교통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 및 전국 각 시·도 지역의 학교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통일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2009년의 경우, 이러한 체험·참여형 통일교육에는 24개 초등학교 4,278명, 23개 중학교 5,850명, 7개 고등학교 2,497명이 참여함으로써 대상학교와 교육인원이 2008년에 비해 각각 54%(29개교 → 54개교), 60%(7,564명 → 1만 2,625명) 증가하였다.

2010년도에는 2~3개 그룹의 「통일교육 강사진」을 발굴하고 통일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보완하여 현장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996년 이래 시·도 교육청 및 각 지역 통일관이 주관하는 「전국학생 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9년도 전국 학생 통일글짓기 대회는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백일장, 학교장 추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총 5,887개 학교에서 111만여 명이 참가하여 전체 학교수 대비 평균 53.1%의 참가율을 보였다. 이번 대회는 소설·일기 등 표현 형식이 다양화되고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작품이 증가한 점이 특징이었다.

2010년에도 전국 학생 통일글짓기 대회는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전국 총 5,534개 학교에서 105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2010년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6.25전쟁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부에서는 625명의 국내외 청소년들이 6.25전적지와 전방지역을 답사하는 체험중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인 「평화통일대행진」(7월 26일~7월 31일 예정)을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출발하여 강원도 고성, 양구, 화천, 철원, 연천, 동두천을 거쳐 파주까지 행진하는 동부경로와 강화, 김포를 거쳐 파주까지 행진하는 서부경로로 나누어 진행되며, 행사기간 동안 참가학생들은 「통일 골든벨」,

「평화올림 열린음악회」, 「화합의 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평화통일대행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다. 대학 통일교육 기반 확대

정부는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고 건전한 통일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 통일교육 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대학사회 내에서의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대학통일문제 연구소협의회와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2009년 대학생 통일포럼은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중앙대, 경남대, 명지대, 성신여대, 원광대, 호남대, 인제대, 제주대, 춘천교대, 동국대, 선문대 등 15개 대학 1,540여명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는 등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통일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2010년에는 참여대학이 확대되어 6월말까지 15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대학생 통일포럼

또한 1982년부터 개최해 온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통하여 대학(원)내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도모하였다. 2009년도에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통일논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의 대학(원)에서 총 81명 학생이 67편의 논문을 응모하였고,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7편의 입선작을 선정·시상하고 수상 작품집은 전국 대학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9년 대학(원)생 통일논문 수상자 명단

구 분	주 제	성 명	학 교 명
최우수	북한의 관료 부패와 체제 안정성	정태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우 수	다문화시대 통일교육의 철학적 정초 연구	이성원	인천대학교
	북한 레토릭의 정치적 의미 연구	조석근	한국외대 정치행정전문대학원
장 려	북한의 위기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	김미연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자본이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미경, 장안지	안양대학교
	새터민들의 선거의식과 투표 참여	양효원	연세대 대학원
	탈북 청소년 진로지도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지성림	고려대 대학원

이와 함께 2006년부터는 남북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각 대학 북한학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북한학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09년 「북한학과 합동워크숍」은 ‘미래 지향적 통일비전에 대한 고찰’, ‘남북한 군사협상 의제 연구’,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적 적응’ 등을 주제로 8개 대학의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남북관계 상황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북한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라. IPTV 시대를 선도하는 학교통일교육 추진

정부는 미디어 세대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IPTV를 활용한 통일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2010년 전국 24만개 학급에 구축될 「맞춤형 IPTV 교육서버」에 탑재할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통신 3사, 학교 일선 현장 및 IPTV·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IPTV를 활용한 통일교육의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2010년에는 「맞춤형 IPTV교육서버」에 탑재할 다양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용역에 본격 착수하였다.

학교 IPTV에 탑재할 통일교육 콘텐츠는 교과보조용 VOD, 재량활동용 Worksheet,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학교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실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2010년 개발·보급되는 통일교육 콘텐츠는 학교 IPTV를 통하여 전국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효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사회 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사회 통일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통일교육위원을 구성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통일교육협의회·통일관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민간 사회통일교육 기관·단체들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법적, 제도적,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토대로 기관·단체간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

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차관 회의 및 시·도 행정부시장 회의 등을 통해 공공교육훈련 기관의 통일교육 실시를 독려하였으며, 국방부의 통일교육 지원요청에 따라 2009년 2월부터 군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군 대상 통일교육 지원은 각 군 본부의 협조 아래 통일교육원 교수와 통일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순회정책홍보팀이 각 지역의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국군방송과 국방일보 등의 매체도 활용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군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에는 통일부 간부진, 통일교육원 교수 등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여론 주도층 대상 정책설명회, 대학생 대상 특강 등을 실시하여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다.

가. 통일교육위원 운영시스템 개선

정부는 1987년 제정된 「통일교육전문위원관리규정」(통일부훈령)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의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7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활동한 제16기 통일교육위원은 중앙 및 16개 시·도 협의회별로 총 1,14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주민 40만 명을 대상으로 271회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2010년 2월 1일에는 제17기 통일교육위원 1,010명을 위촉하였다.

1987년 대국민 통일교육, 국민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출범한 통일교육위원회는 2000년 전후 통일 관련 시민단체 활동 증가, 국민계도 중심의 소양교육 감소 등으로 활동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변화된 시대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통일·대북정책



제17기 통일교육위원 중앙·지역협의회장단 회의

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충, 통일부와 지역간 유기적 정책 소통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09년 10월에 「통일교육 지원법」을 개정하고 2010년 4월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일교육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 조항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통일교육위원의 위상 정립 및 활동지원을 위해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통일교육위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나. 통일교육협의회 개선 및 지원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상호간 협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2000년 12월 22일에 설립된 민간 통일교육단체 협의체이다.

통일교육협의회는 다양한 통일교육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 통일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본부 및 분과위원회(시민, 여성, 청소년)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 이해와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통일문제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회원단체 지원사업은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사업을 공모하여 2009년도의 경우 43개 응모단체 중 평화문제연구소 등 33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들 단체들은 강연·강좌 91회, 포럼·워크숍·토론회 22회, 경진대회 등 행사 7회, 통일기행·현장체험 18회 등 138회(1만 1,164명)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학교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통일강좌를 실시하여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는 그동안 내·외부로부터 제기되어 온 협의회의 운영방식, 회원단체 지원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2009년 3월 통일교육협의회 운영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하였다. 또한 회원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하는 등 회원단체의 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였다.

다.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원

정부는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등 통일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통일교육 관련 단체,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2004년 부산과 광주 등 2곳을 시범 운영한 이후 2005년 5곳, 2006년 9곳, 2007년 이후 10곳으로 확대 운영해 왔으며, 2010년에는 19곳으로 확대하였다.

2005년 통일교육 지원법을 개정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통일논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통일인식 제고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09년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는 시민강좌, 통일교육 워크숍, 지역축제와 연계된 통일문화축제, 통일경진대회, 통일현장체험, 자료 제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 총 236회의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전년도 교육실적, 사업·재정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라. 통일관 지원

통일관은 전국 13개 지역에 설치되어 북한·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 지역주민의 통일교육을 위한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 통일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등 13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전시물, 북한 관련 특수자료 및 영상자료 등의 전시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경기침체, 신종플루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층 및 실향민 등을 중심으로 약 250만 명이 통일관을 관람하였다. 2010년에는 6월말까지 약 110만 명이 통일관을 방문하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미디어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통일을 주제로 교육·문화예술·IT 등 다양한 영역을 결합한 종합적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새로운 통일관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 통일관 운영 현황(2010년 6월말 현재)

지역	통일관	주 소	개관일	운영주체
강원	고 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고성통일전망대	1988.6.16	(주)고성통일전망대
	양 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후리 720	1996.8.14	양구군청
	철 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 4리 20-1	1990.12.15	철원군청
수도권	인 천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자유회관내)	1994.12.15	자유총연맹(인천지회)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통일전망대내	1992.9.8	(주)동화진흥
	서 울	서울 구로구 궁동 35 서서울생활과학고	2008.10.29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충청	대 전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 (엑스포 과학 공원내)	2001.8.11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청 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413 청주랜드	1993.2.23	청주시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충 남	충남 공주시 웅진동 98	2007.4.5	자유총연맹(충남지회)
호남	광 주	광주 서구 화정2동 316-11 (화정근린공원내)	1989.3.10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영남	부 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1989.1.30	자유총연맹(부산지회)
	경 남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자유회관내)	1998.4.29	자유총연맹(경남지회)
제주	제 주	제주 제주시 일도 2동 968-2(자유회관내)	1993.12.18	자유총연맹(제주지회)

제4절 통일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정부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이라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해 왔다.

매년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비롯하여 각종 참고자료와 영상자료 등을 발간·제작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기관, 초청 교육생, 자료 요청자 등에게 배포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오래전에 제작되어 유지해오던 통일교육 기본교재의 내용과 구성을 현재의 남북관계와 성숙한 국민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개정·보완함으로써 통일교육 콘텐츠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크게 보완하였다. 통일교육 자료의 내용을 객관적, 균형적 시각에서 재편하여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통일교육 콘텐츠의 중심개념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먼저, 한반도의 정확한 현실과 북한이해를 바탕으로 기본교재를 비롯한 각종 교육참고자료를 보완하고 있으며, 북한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폄훼하는 요소들을 보완하는 한편, 자료의 논조에 있어서도 가치중립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를 몇 가지의 개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도 통일교육의 의의일 것이다. 이는 남북문제와 통일방안을 국민과 함께 거시적 시각에서 고민하고 논의하려는 측면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통일문제를 구별하여 바라보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시기인 만큼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젊

은 세대에게 국가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관념적으로 인식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통일교육은 한민족으로서 상생·공존해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 존재하는 남북문제의 양면성을 합리적으로 재인식 시키는 방향으로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 기본교재 개발

정부는 1972년 이후 매년 통일 및 대북정책, 남북관계 등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북한 실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교재를 발간하여 왔다. 1993년 까지는 『민주통일론』으로 발간해 오다가 그 후에는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로 발간하고 있다.

2009년판 기본교재는 기본적으로 2008년판의 구성 체계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북한 및 주변정세 등의 변화 동향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통일문제 이해』는 동북아 정세, 남북관계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였다. 『북한 이해』는 북한의 대외관계 동향, 대남동향, 북한 군사력 변화, 시장통제 정책 강화 내용 등을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2010년판 기본교재는 통일문제와 북한 실상에 대해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9년판의 구성 체계를 보완하면서 남북관계 전개 상황, 북한의 사회통제에 대한 내용 등을 보강하였다.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남북관계 현황,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통일미래 비전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였고,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의 내용과 의미를 새로 추가하였다. 『북한 이해』는 북한의 시장통제와 화폐개혁 등 계획경제 강화 동향을 보완하였으며, 북한의 정치체제의 형성, 사회통제와 인권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다. 특히 이번 교재는 청소년의 건전한 국가관과 통일관, 올바른 안보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09년에는 기본교재를 처음으로 일선 중·고등학교에 보급하였다. 2010년에는 전년도보다 각각 2만부를 늘려 『통일문제 이해』 4만 3,000부, 『북한 이해』 4만 5,000부를 발간하여 수요가 많은 교육기관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10년 6월 현재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강의교재로 활용하는 대학이 35개에 이르고 있다.



2010 통일문제이해

2010 북한이해

2. 참고자료 개발

통일교육 기본교재 외에도 정부는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서, 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들을 개발·보급하여 왔다.

우선, 2008년에 있었던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 연설문, 통일부 공식자료 및 정책설명 자료 등 주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자료집을 발간(1,500부)하였다. 이 자료를 통일교육위원, 통일부 자문·평가단 등에 지원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일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교재의 보완적인 의미를 지니는 부교재로서 통일정책, 남북관계, 북한 실상 관련 각종 질의에 대한 응답 형태로 된 참고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2007년부터 발간해 온 『자주 묻는 통일이야기 50』은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에 따라 2008년에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2009년에는 2008년 발간 자료 중에서 각종 통계 수치를 200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재발간(1만 3,000부)하였으며, 대북정책 설명회 등 각종 행사시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한편, 2003년부터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하여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를 시리즈로 발간해 오고 있다. 2009년 12월까지 발간된 자료는 총 24종에 달하고 있다. 2009년에는 『독일 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북한의 대남전략』이라는 2종을 발간하여 대학의 관련학과, 연구기관, 도서관,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보급하였다. 『독일 통일 20년: 현황과 교훈』은 독일통일 20주년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통합 등 분야별 현황과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와 노선, 전개양상 등을 담고 있다.

2009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친화적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자료 개발에 힘썼다. 또한 영상자료를 장애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막과 수화를 삽입·제작하여 전국 장애인학교 및 장애인시설 등에 보급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방’에 통일교육 자료와 통일문제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탑재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자료방’ 이용자 수가 2008년 보다 32% 증가된 12만 3,267명에 달하였다. 2010년에는 ‘자료방’ 메뉴를 새롭게 개편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 나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 나눔콘서트



콘서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랑 나눔콘서트

06

통일역량 강화와 통일기반 구축

- 제1절 평화통일을 대비한 역량강화와 법·제도의 준비
- 제2절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외적 협력체제의 구축
- 제3절 정책추진과 국민적 합의
-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제6장 통일역량 강화와 통일기반 구축

제1절 평화통일을 대비한 역량 강화와 법·제도의 준비

1. 통일업무 역량 강화 및 조직 정비

가. 통일업무 역량 확충

우리부 일반예산은 2009년 1,215억원(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제외)으로 정부 총예산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이 중 80%는 남북피해자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법정경비와 시설개보수 및 청사 관리비가 차지하고 있었고, 순수 사업비는 12%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런 점에서 통일부는 최근 남북관계 및 통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합의 기반구축 및 중장기 통일 대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고 2010년도 일반예산을 전년 대비 27% 증가한 1,542억으로 증액하였으며, 이 중 사업비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1,174억원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최근의 변화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 미래비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역량 강화, 북한정세 분석 강화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나. 조직 정비

2009년에는 경제 살리기와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국정현안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고 기관별 조직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80명의 인력이 감축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009년 5월 대국대과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장기 통일정책 및 국민통합 기능강화, 대북 정세분석 기능을 강화하였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조직을 통합(14개과·팀 → 7개과·팀)하여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이렇게 인력부족 등 제한된 상황 하에서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설계함으로써 상생공영 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존속기간이 2009년 10월로 만료되는 상황이었는 바,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협력지구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을 출범시켰다. 당초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완료와 동시에 해체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개발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었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3통 문제 해결도 진척이 별로 없는 등 기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무엇보다 현대아산 직원이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개성공단 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으로 개편하고, 기존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수행하던 기능과 인력을 그대로 이어 받는 동시

에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 지구에 대한 개발과 지원 기능을 추가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9년 4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0년 3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률에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규정 되었다. 그간 한시조직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해 온 조직이 사실상 상설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과 남북이 합의한 개발 지구 등의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등 통일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강화하였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개정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확대되는 남북교류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하위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2009년에는 그 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교류협력 추진과정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건전한 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하고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남북간 교역 대상을 소프트웨어, 동영상, 전자서적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하고, 유명무실해진 교역당사자 지정제도를 폐지하였다.

교류협력 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시 방북자 중 일정한 경우 방문이 허용된 기간 내에는 별도 신고 없이 수시방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정한 경

우 북한주민접촉신고 의무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남북협력사업 절차 중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협력사업 승인만 받도록 함으로써 중복적인 협력사업 승인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특구지역 내에서 50만 달러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액투자’로서 신고만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건전한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위해서 협력사업자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벌칙·과태료 대상을 조정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목적	주 요 내 용
법 률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상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소프트웨어, 동영상, 전자서적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확대 ○ 교역당사자 지정제도 폐지 ○ 보조금 지원자 및 법인·단체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 마련
	행정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남북간 직접 왕래자의 방문신고 면제근거 마련 ○ 북한주민접촉신고 면제 근거 마련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및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 ○ 협력사업 신고제도 도입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행정조사권 신설 ○ 벌칙·과태료 대상 조정
시행령	법률 위임사항 등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주민 접촉신고 면제대상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승인 국제행사 참석시 접촉, 외국소재 법인 취직자의 업무상 접촉 등 ○ 협력사업 신고제 대상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 등 특구지역내 총 투자금액 50만달러 이하인 사업 ○ 업무위탁 대상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자, 지방자치단체 등 ○ 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고 및 출석 요구, 조사계획서 사전 송부 등
시행규칙	개정 법령 관련 서식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명령서, 조사계획서, 등
고시 등 하위규정	5.24 조치에 따라 반출입 승인 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모든 반출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전환 ○ 다만,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물품 등은 별도 공고를 통해 포괄승인 품목으로 지정

또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내 업무담당자 및 관계기관·단체·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법규집 및 개정 법률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배포함으로써 개정된 법규의 원활한 시행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가 5월 24일 발표되면서 남북간 교역이 중단되었다.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기 위해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간 모든 반출입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다만 개성공단의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물품등은 별도공고를 통해 포괄승인 간주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통관, 검역, 대북송금 관련 관계기관 및 남북교역업체를 대상으로 고시 개정안 및 시행 사실에 대한 안내를 하고 5.24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3.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2005년 12월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과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의 민간위원과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2007년 11월 28일 최초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3월 1일부터 12일까지 남북관계발전 실무위원회 서면 심의를 실시하는 한편, 3월 10일 민간위원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고, 2차 핵실험 등 북한이 연이어 도발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회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민간위원 의견수렴, 9월 24일 민간위원 검토회의, 10월 15일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23일 국정감사 시 국회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하였다.

이후 정부는 각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 변경 방향을 모색하고, 2010년 1월 29일 실무위원회를 통해 변경안을 마련, 2월 25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 및 천안함 피격사건 등 정세가 또 다시 급변함에 따라 최종안에 대한 확정절차를 보류하고 있다.

4. 교역물자관리시스템 보완

북간 교역은 1989년 이후 20년간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반출·반입 승인 대상 물품도 1만여 개에 달하는 등 양적 성장과 질적 다양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북 반출입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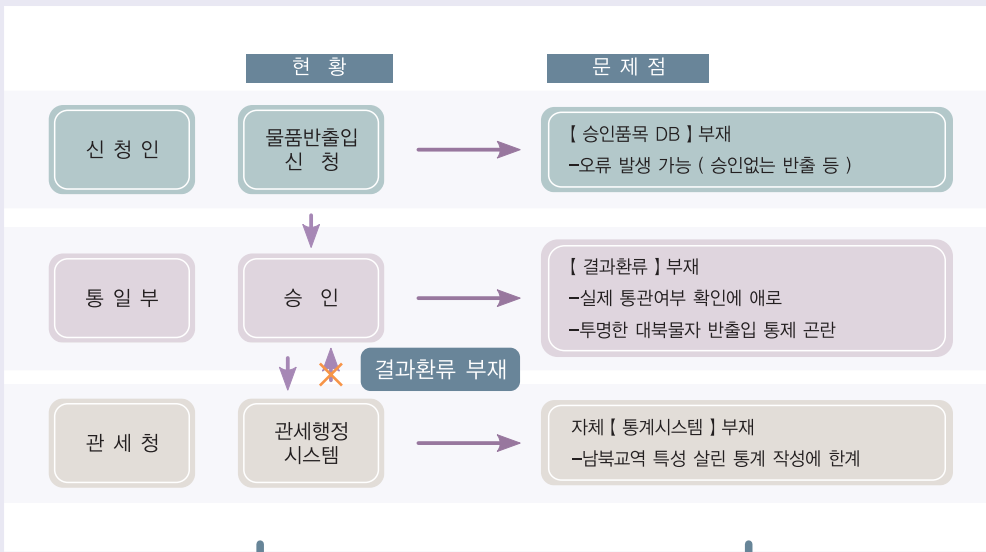
특히 국회는 2008년 국정감사에서 대북 물품 반출입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그해 12월 13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결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2009년 2월 감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개별승인대상 물품을 정비함으로써 반출·반입 승인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둘째, 개별승인대상 물품의 무단 반출·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컴퓨터 등 재반입 조건부 물품에 대해서는 재반입 할 때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반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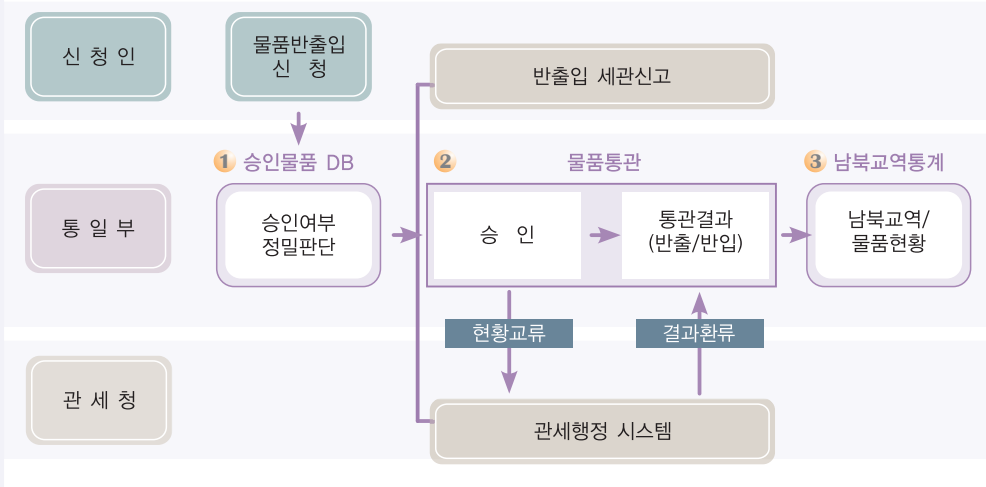
정부는 남북간 교역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회·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역물자관리 업무 위탁’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9년 5월 11일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8월 조달청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개별승인품목 정비, 물품 반출입 승인 및 통관정보 연계, 교역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완료되었다. 교역물자관리업무는 남북교역 관련 민원상담, 물자 반출입 승인신청 예비검토, 남북교역업체 D/B 운영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한 업무로서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개선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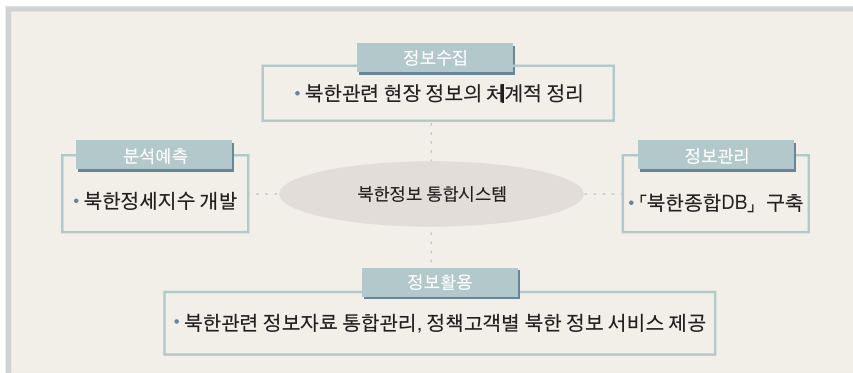
- ※ ① 통일부장관의 반출입승인이 필요한 개별승인품목을 DB로 구축
 ② 통일부 반출입 승인정보와 관세청 통관정보를 연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③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자체 남북교역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교역물자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통일부-관세청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남북간 반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교역업체에게도 HS 코드 검색, 남북교역통계 확인, 전략물자 판정업무 등의 기능이 시스템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 남북간 교역과정에서의 편의성이 한층 증진되었다.

5. 북한 정보 분석시스템 강화

2009년 5월 통일부 조직개편에 따라 대북 정세분석 기능이 강화되었다. 북한 및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되는 상황에 대처하여 통일부는 북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정보 분석시스템 개념도



그 일환으로 2010년 북한 종합DB 구축, 북한정세지수 개발, 북한관련 현장정보 수집관리 등의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북한 종합DB」구축

「북한 종합DB」는 △북한 산업·인문지리 정보 △북한 자료 △북한인물 정보 등 3개 DB를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 4월부터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선진사례 분석과 정보화 전략 및 세부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작업을 10월까지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단계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실제 종합 DB 시스템 개발과 DB 구축 작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종합DB」를 구축하게 되면 각종 북한 관련 정보자료가 통합 관리됨으로써 북한 정세에 대해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책고객별로 정보수요에 맞는 북한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정부차원에서는 대북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할 수 있는 지식기반이 강화되고, 민간차원에서도 공신력 있는 북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북한정세지수 개발

정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단이 통합 적용된 지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예측틀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정세지수는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등 4개 부문에서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 변화 추세를 예측하는 지수이다.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은 각 분야별 북한 전문연구기관과 다수의 북한 및 지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 3월말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정세지수 연구개발단 이외에 별도의 북한 및 지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해외의 저명한 지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실성 있는 북한정세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북한정세지수가 개발되면 북한 정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사전 예측이 가능해짐으로써 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북한 관련 현장정보 수집관리

1990년대 초 이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북한을 왕래하는 민간교류가 많아지면서, 현장정보가 다양해졌지만 각 기관별로 북한 정보가 흩어져 있어 대북정책이나 교류협력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힘들었다. 또한, 면접관련 비전문가에 의한 일회적인 조사나, 표준화된 기법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사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북한 관련 현장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북한 관련 현장정보는 「북한 종합DB」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북한 종합DB」의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통일법제기반 구축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남북간 합의서 체결, 교류·협력관계 제·개정, 통일관련 법제정비 등 다양한 법제도 구축 수요가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장기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통일법제 구축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통일 역량 기반구축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서, 통일부는 200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사업의 첫해인 점을 감안, 그 동안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통일법제 사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간의 통일법제 연구성과를 정리하며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우선, 통일부를 비롯 법무부, 법제처 등 통일법제 관련 정부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아우르는 「통일법제 추진위원회」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각기관의 통일법제 연구성과 및 아이디어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 연구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의 통일법제 관련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중장기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법제도 관련 정책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한 각종 정책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주제 선정시에는 「통일법제 추진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실성있는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의 통일법제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통일법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바 있는 통일법제(북한법제 및 舊 공산권 법제 연구 포함)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 DB화하였다. 이는 관련 연구 현황과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통일법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와서도 2009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통일법제 관련 연구가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연구용역 분야에서는 사업 2년차를 맞아 개론적인 내용을 넘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의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였다. 2010년 하반기에는 독일통일 20주년 등을 계기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발간물 등 자료를 대폭 보완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가. 개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월 총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섰으며, 2009년 12월까지 총 1만 7,984명이 2010년 6월 현재에는 약 1만 9,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입국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9년도에는 약 77%에 달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6	합계
남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8	329	6,104
여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59	908	13,117
합계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1,237	19,221

정부는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 선진화와 복지, 통일미래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의지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이라 한다)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지침들을 개정하는 등 정착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영농취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영농정착을 장려하고, 지방거주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거주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고, 2010년 3월 개정 정착지원법이 공포되어 2010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랑나눔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0년도에는 지역차원의 각종 정착지원 서비스 확충과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을 적극 촉진하고 있다.

나. 사회적응교육 내실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과 가족관계 등록 창설, 주거 알선, 정착금 지급 등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다.

2009년 3월에는 사회적응 교육기간을 기존의 8주에서 12주로 확대·개편하여 교육생의 심리적 안정 및 건강 증진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체험교육 등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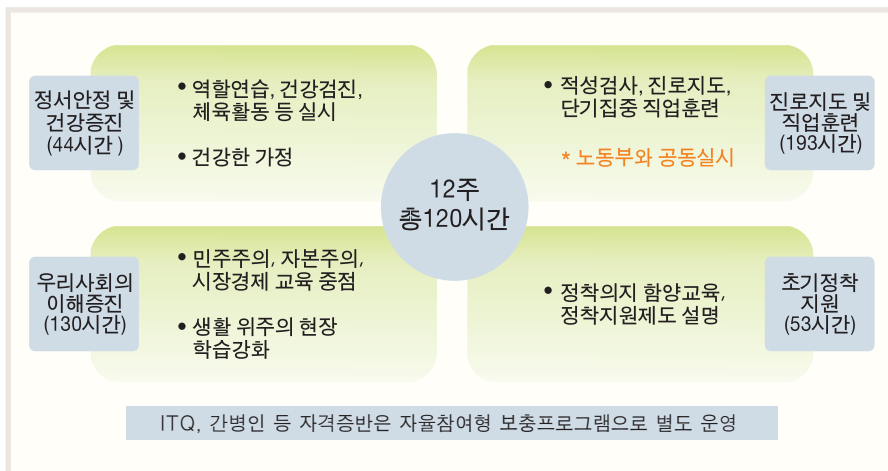
또한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정보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자격



하나원 모습

증 취득을 지원하고, 여성의 증가 상황을 감안해 성별 특화교육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교육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과목을 정규시간 외에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맞춤형 선택학습을 지원하였다.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은 각종 자격증반, 취업설명회, 운전 등 본인의 희망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하나원 교육생 컴퓨터 교육 실시

2010년 통일부 연두 업무보고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제고가 중점 과제로 선정되면서, 하나원은 현행 교육기간내에서 하나원의 직업훈련 과정을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직종 탐색 위주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에 적합한 ‘단기집중 직업훈련’ 과정으로 전환해 교육생이 하나원 수료 후에 즉시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6년 5월부터 운영해오던 기초 직업적응훈련이 훈련 직종 선택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취업률 향상에는 그 성과가 미미해 2010년 5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희망사항, 노동시장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관련 직종에서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전 직무훈련인 ‘단기집중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단기집중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교육생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1개의 직종을 선택해 76시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다. 또한 교육생과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만남의 장인 취업박람회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개설하였다.

하나원에서는 진로, 심리, 의료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진로·심리상담실 및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진로상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교육생의 진로지도를 강화하였으며, 「하나의원」에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여성 교육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였다. 2010년에는 하나의원 전면 리모델링 및 간호인력(1명) 충원을 실시하여 현재 하나의원은 내과, 치과, 한방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5개 진료과목에 공중보건의 7명 및 간호인력 6명 등 총 13명의 의료진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응교육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하나의원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생들의 정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 예술공연, 법률상담, 영어학습, 이·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치과진료분야에서는 열린치과의사회 등 자원봉사 단체들이 교육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남성 성인반, 여성 성인반, 경로반, 청소년반, 아동반, 유치반 등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나의원 분원을 설치하여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은 2009년 9월 30일 개교한 하나의원 내



하나둘학교 수업장면



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하나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에는 인근 초등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개원 이후 2010년 6월까지 총 1만 7,000명이 하나원을 수료하였다.

개원 10주년 행사 개최

하나원은 2009년 7월 8일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마다 개원 기념식을 비교적 소규모로 비공개리에 개최하여 왔으나, 개원 10주년을 맞아 하나원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10주년 기념행사를 공개적으로 확대하여 개최기로 하였다.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하나원을 처음으로 외부 언론매체에 개방하여 하나원이 걸어왔던 과정과 역할, 미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나원 개원 10주년 행사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기념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문수 경기도 지사, 전직 통일부 장·차관, 통일교문, 각종 사회단체 단체장, 기자 등 약 470명이 참석하여 하나원 개원 10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개원 10주년 기념식 개최는 기념식→경과보고→기념행사→시설순시→오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기념행사에는 하나원 출신 첫 출생 아이, 첫 결혼 정착자, 3대 거주가족 소개 동영상 상영 및 무대 인사를 시작으로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의 연주, 성악가 및 합창단의 독창·중창이 이어졌고, 하나원 교육생 및 기 수료생의 바램을 담은 편지 낭송과 참석자 모두의 합창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밖에도 하나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통일부 외신기자단 방문, 하나원의원 개원 5주년 의료 세미나, 하나원 수료생 홈커밍데이 행사, 기념 학술회의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다. 제2하나원 건립 추진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급증 추세 등 유동적 상황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정착지원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하나원 건립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여야 국회의원, 민간단체 등에 의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탈북시설 확충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하나원은 2010년 3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 강원, 충청북 4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24개 후보지를 현장 실사 후 비교 검토하여 강원도 화천군 소재 부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동 부지의 선정기준으로는 건축공간 가능성, 교육훈련 기반 접근성, 지역사회 호응과 협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제2하나원은 5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안정은 물론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남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 자문 내용을 건축물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년도 부지매입과 설계를 시작으로, 2011년초 제2하나원을 착공하여 2012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라. 정착지원 강화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지원금, 지역적응교육,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1) 정착지원금 지급

정착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을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2010년 6월 현재 정착금은 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노력 및 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가산금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그 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600만원이고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할 경우 1,900만원이다. 장려금은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거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2009년에는 장려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요건을 6개월에서 500시간으로 조정하고, 취업장려금 지급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로 완화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안주하지 않고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취업장려금을 각각(1·2·3년차) 100만원씩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이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2,440만원으로 2009년에 비해 300만원 증액되었다.

장려금 지급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	
장 려 금	직업훈련 장려금	500시간		120만원	
		500시간 ~ 1,220시간		120 ~ 240만원 (120시간당 20만원 증액)	
		500시간 ~ 1,220시간		120시간당 20만원 (최대 120만원)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만원
		자격취득장려금	1회 限		200만원
	취업장려금	1년차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신청시 250만원 지급	55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650만원	
총액 (최고액)				2,440만원	

※ 취업장려금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2005년 5월 사회진출자)부터 대상

2005년부터 도입된 장려금은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지급인원은 1,956명으로 전년 대비 71%가 증가하였다.

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 만원, 명)

연도	종류	직업훈련	자격취득	우선선정 직종	취업	총액
2010.6	지급액	64,020	69,600	29,600	274,330	437,550
	인 원	409	348	148	548	1,453
2009	지급액	88,420	104,000	21,800	296,850	511,070
	인 원	681	520	109	646	1,956
2008	지급액	62,940	69,040	18,800	89,100	239,880
	인 원	500	346	94	201	1,141
2007	지급액	36,000	43,400	9,800	12,150	101,350
	인 원	289	217	49	28	583

가산금은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가정 아동보호를 위해 지급되며, 이 중 동일인에게는 하나의 가산금만 지급하고 있다.

가산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수준
연령가산금	만 60세 이상	720
장애가산금	장애등급별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1개월×80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 가산금	만 13세 이하 한부모 아동	360

2) 주택 지원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이후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며, 이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배정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순위지역으로 배정하고 있다.

3) 취업 지원

정부에서는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실시, 취업 알선,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하나원은 2008년부터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010년 5월 현재 제과제빵, 귀금속 디자인, 조리사, 양장사 과정에 189명이 참가하여 그중 124명이 협력업체에 취업하였다. 하나원은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협력하여 '메자니아이팩'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55명의 취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2009년 11월 30일 경기도·(사)북방권교류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농분야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정부-지방-민간과 선도적 협력모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2010년 상반기에는 12개의 북한이탈주민 (예비)사회적기업 설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기도내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11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55개 고용센터에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서울남부, 2009.7.16)

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와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2009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서울 남부, 경기·인천, 서울 북부, 부산·경남, 광주·전라 등 전국 5곳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전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258명이 참가하여 그 가운데 51명이 채용되었다.

2010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청과 통일부(하나원)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중소기업 만남의 장’을 진행하고 있다. 동 행사는 구인이 필요한 국내 중소기업과 구직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0년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430개의 중소기업과 854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여 509명이 채용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북한이

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차에는 월 50만원의 범위, 2년차에는 월 70만원의 범위,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3년차에도 월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지원금의 수혜인원은 2004년까지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고용지원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83%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에 도입된 취업장려금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업체수(개)	226	274	240	218	323	378	564	888	1,151	1,110
인원(명)	251	296	310	269	446	497	728	1,111	1,489	1,513
지급액 (만원)	99,965	113,025	109,416	94,461	142,628	140,200	224,033	349,457	640,600	426,966

4)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아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대학 이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하는 경우,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에 입학할 경우 학비지원이 가능하며,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타 교육훈련기관은 연령에 관계없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학비가 전액 면제되며,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학비의 50%를 보조하고 있다. 2009년에는 사립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708명에 대해 약 19억원의 학비를 지원하

였으며, 2010년 6월 현재 798명에 대해 약 1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내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총 입국 인원 중 10대 청소년은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남북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및 일반학교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173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청소년보호시설 및 대안학교 10여 개를 지원하고 있다.

5) 사회보장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들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제도가 있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또한 정착지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2010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지급 기준(최고액)

세대 기준	현금 급여액	세대 기준	현금 급여액
1인 세대	42만원	4인 세대	114만원
2인 세대	72만원	5인 세대	135만원
3인 세대	93만원	6인 세대	156만원

생계급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하지만,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입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



「통일부-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진료지원협약서 체결(2009.11.11)

급한다. 또한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소득인정액 및 현금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의 120%를 적용한다. 또한 2009년 11월 11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진료지원협약서를 체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입원비, 수술비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연금 특례는 정착지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6) 거주지 보호 및 민간을 통한 지원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

민후원회,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정착도우미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전입한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도와주는 ‘친근한 이웃’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 외에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전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은 물론,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와 거주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한다. 2010년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8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실태자료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0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6개의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에서도 지역사회 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심리상담, 청소년교육, 주민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정착지원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탈북 청소년 지원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여 대안교육단체 및 보호시설, 방과후 공부방, 장학사업을 강화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재소자 등 인성프로그램, 주택 미배정자를 위한 쉼터 운영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등 총 46개 단체에 46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현재 78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정착현장인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초기적응 및 취업·진로지도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3주간의 초기집중교육과 1년간의 밀착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된 정착을 지원한다.



서울북부 하나센터 개소(2009.3.27)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눔콘서트(2009.11.13)

2009년에는 서울, 경기 2개 지역, 대전, 대구, 광역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였다. 2010년에는 전년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1곳 이상씩 총 30곳을 지정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2009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문제가 거주지 정착 및 취업 등 정착 전반에 있어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인식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통일부 홈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제도와 현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하였고 2009년 7월 8일 하나원 10주년을 계기로 하나원 내부시설을 공개하는 프레스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눔콘서트 실시,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 결의대회 개최, 북한이탈주민 사랑운동 협약식 체결, 홍보동영상 제작·방영, UCC 공모전, 성공·미담사례 발굴·배포 등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2010년 들어 국문·영문판 홍보리플렛을 발간하였고, 취업지원을 위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소재 영상시나리오 공모전도 실시 중에 있다.

제2절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외적 협력체제의 구축

1. 대북정책 추진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

정부는 대북정책이 국민의 의사와 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유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범정부적 협의기구이다. 동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의 민간위원과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위원으로 민간위원 9명(국회의장 추천 7명, 남북관계발전위원장 추천 2명)을 포함함으로써 공식적인 국민 의견 수렴 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12월 김영호(성신여대), 양병기(청주대), 한용섭(국방대), 김근식(경남대), 박명림(연세대), 백학순(세종연구소), 장영수(고려대), 박현선(고려대), 이정희(한국외대) 등 제2기 민간발전위원 9명이 임기 2년(2008.12.27~2010.12.26)로 위촉되었다. 민간위원들은 2009년 1월 22일 위촉식 및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였다.

지금까지 1차례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3차례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 3월과 10월, 그리고 2010년 1월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 변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 2010년 1월 29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변경안 심의를 완료하였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여 상시적으로 남북관계 현황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통일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적 통일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범정부적 협의체이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 장관)을 포함하여 13명의 정부위원과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대통령령, 1989.3.31 시행)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다음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률에 근거를 둔 협의체로 발전하였다. 협의회는 1989년 출범 후 2010년 6월 말 현재 총 232회 개최하였으며, 2009년~2010년 6월말까지 총 20회를 개최하여 「북한 신종플루 발생 관련 대북 물자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42개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또한 2008년 5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부칠 안건 등에 대한 부처간 실무적 조정·협의 기능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2009년~2010년 6월말까지 1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 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위원장)을 포함하여 19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며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전체회의 3회, 실무협의회 5회를 개최하여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취업지원 대책수립 등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는 사회적응교육, 취업, 주거, 사회복지, 지역정착

등 정부 업무 전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된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의 민간단체와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2.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정부는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홍보 강화를 통해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국내외에서 개최하여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개발에 활용하였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주요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통일부를 방문한 주요 인사로는 스타인버그(James Steinberg) 미국 국무부 부장관, 캠벨(Kurt Campbell)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우다웨이(Wu Dawei) 중국 외교부 부부장, 야치(Yachi Shotaro) 일본 정부대표, 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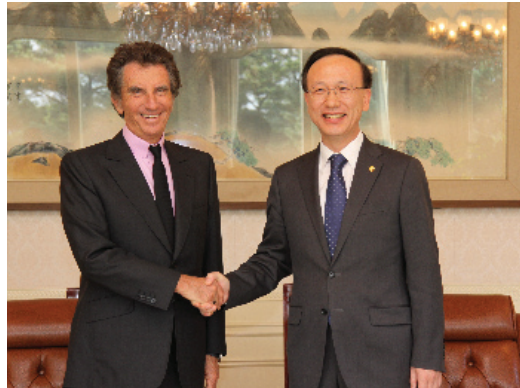
통일부 장관-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 면담



통일부 장관-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면담



통일부 장관-야치 일본 정부대표 면담



통일부 장관-랑 프랑스 대북정책특사 면담

하라(Maehara Seiji) 일본 민주당 중의원, 랑(Jack Lang) 프랑스 대북정책특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남미, EU 등 주요국 대사 간담회, 라운드테이블 등을 개최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각 나라 주한 공관의 실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남북관계 현황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각급 통일부 출장단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지역 등을 방문하여 실무급 정책협의를 갖고 한반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독일 정부와는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구 동독지역 재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내무부와 정례적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독일 통일 및 통합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문제 의원 워크숍」을 통한 의회 차원의 국제 협력활동도 계속하였다. 통일부의 지원하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국(2009.3), 유럽(2010.3) 등을 방문하여 정부 및 의회 관계자, 전문가 등을 만나 대북

정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여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동 세미나는 미국 몬트레이 국제문제연구소,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일본 히로시마시립대 평화연구소,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의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와 함께 미국 시카고·로스앤젤레스, 중국 베이징·선양·상하이, 일본 홋카이도·후쿠오카·히로시마·도쿄·교토, 러시아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지를 방문하여 현지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현지 대사관 주재 통일연구관을 활용하여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국의 대북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방한 중인 해외 한반도 전문가를 초청하여 통일부 직원과 의견을 나누는 「인터내셔널 포럼」을 격월로 개최하였다. 「인터내셔널 포럼」은 전문가의 발제와 자유 토론을 통해 통일부 직원들에게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 포럼에는 위트(Joel Witt)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 매닌(Mark Manyin) 미국 의회조사국 연구원, 오키노기(Okonogi Masao) 일본 게이오대 교수, 미야모토(Miyamoto Satoru) 일본 세이가쿠인대 교수, 아레츠(Jurgen Aretz) 독일 튀링겐재건은행 총재, 밥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동아태 자문관 등이 초청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홍보 활동도 전개하였다. 매주 주요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 주한 외교관, 해외 한반도 전문가 등에게 영문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하였고, 국내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영문 간행물인 「통일한국」과 「Korea and World Affairs」 등을 구매하여 이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지역 160여 개 국가에 배포하였다. 영어·중국어·일어본 정책홍보 리플렛을 발간하여 주한 공관 및 주요 국가에 배포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3. 한반도 비전포럼

정부는 6.25 60주년,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는 2010년을 맞아 국제사회 지도자급 인사 및 전문가를 초청,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대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비전포럼: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를 주제로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2010.5.13~14, 서울)

이번 회의는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 해외 저명 인사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 동안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의 비전에 대한 특별연설과 토론회 등이 진행되었다. 1일차 회의는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특별연설,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특별연설,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되었으며, 2일차 회의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및 국민참여 토론회로 구성되었다.

「한반도 비전포럼」 세부일정

구분	주요 내용	참가자
5.13(목)	제1회의 :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	토론 : 이홍구 전총리, 공로명 전 외무장관, 웬디셔먼 전 미국 대북정책조정관
	제2회의 : 「독일통일 20주년과 한반도에의 함의」	특별연설 :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사회 : 하영선 서울대 교수 토론 : 남주홍 경기대 교수,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제3회의 : 「한반도 평화와 안정으로의 길」	특별연설 : 콜린 파월 전 장관 사회 : 현홍주 전 주미대사
	대통령 주치 만찬	해외참가자 및 주요 패널
5.14(금)	기조연설 :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제1회의 : 「비핵·평화·민주주의의 한반도」	사회 : 백진현 서울대 교수 발제 : 후나바시 요이치 아사히신문 주필, 안드레이 하진 러시아 연방상원의원,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위엔지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토론 : 윌리엄 드래넨 전 미국평화연구소 부소장,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제2회의 : 「한반도의 미래경제비전 :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 :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발제 :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 크리스토퍼 데이비스 옥스퍼드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교수, 쉬정강 홍콩대 교수 토론 : 이석 KDI 연구위원
	제3회의 : 「함께 생각하는 녹색한반도」	사회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토론 : 강성진 고려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강인선 조선일보 기자,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생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반 국민(1일 700명)들의 행사 참석 이외에 현장 질문, 현장 설문조사, 행사 관련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통일담론의 주체로서 행사 추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대규모 국제 행사로서, 국제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의 단

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청소년·대학생 등 미래 통일세대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행사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4.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정부는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비무장지대가 가지고 있는 평화, 생태,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비무장지대가 정전협정의 관할하에 놓여있는 현실과 북한의 태도, 한반도의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정부는 유엔사와의 협력,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비무장지대 이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남북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한강하구 공동이용, 임진강 수해방지 등 공동수계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우선 남북간 합의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남북간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도 8.15경축사를 통해 남북이 '무기와 병력을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 정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행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0년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무장지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

해 장기적·체계적인 종합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전략계획의 기본방향을 검토하였으며, 2010년에는 종합전략계획 수립 및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DMZ일원의 풍부한 통일안보자원을 활용하여 DMZ를 통일미래 준비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 청소년교류, 건축설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남북 청소년 교류시설 및 국내외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서의 기본 컨셉을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남북청소년교류센터는 남북 청소년간 문화통합의 거점이자, 국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중심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정부는 DMZ의 평화생태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코리아DMZ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비무장지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로 인해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부처와 기관이 매우 다양하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코리아DMZ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동 협의회를 통해 정부 기관간에 비무장지대 업무 추진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종합·조정을 통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DMZ의 다양한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사회 및 북한과 협력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제3절 정책추진과 국민적 합의

1.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정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대국민 정책소통 활동을 강화하였다. 사회 각계 원로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법·제도, 통일정책 등 9개 분과로 구성된 정책자문회의를 수차례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은 주요 종교계 지도자를 예방하여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 사회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갔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쌍방향 정책대화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각종 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관·차관이 참여하는 정책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을 설명하였다. 특히 2008년 11월 처음 시작한 「상생공영포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예술계를 시작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학생, 여성계 등을 대상으로 통일 및 대북정책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민간 통일운동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통일 관련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다. 의장단 면담, 강연,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통일운동단체와의 접촉을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대북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09년 말에는 처음으로 234개 통일부 등록단체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와 민간단체간 뿐 아니라 민



통일부 등록법인 워크숍(2009.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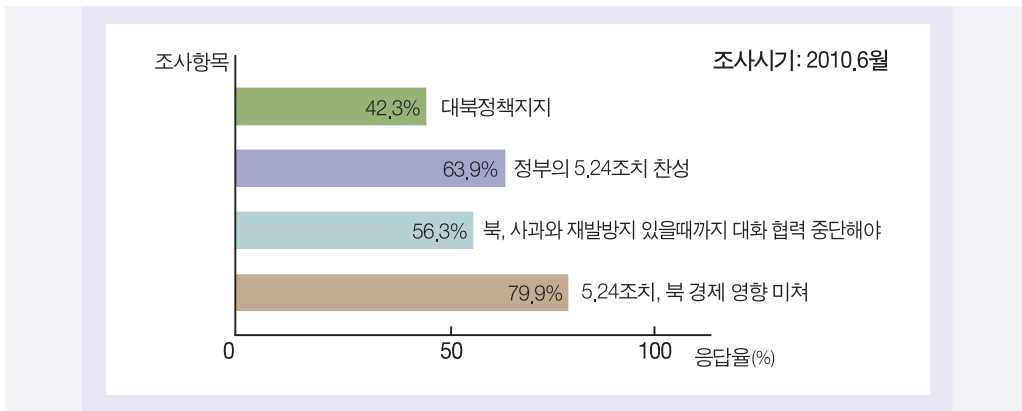
간단체 상호간에도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장관·차관 이하 통일부 간부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9년도와 2010년 상반기까지 총 6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의 큰 틀과 방향은 이러한 국민여론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2009.3.9~20)를 했을 때 우리 국민의 72.2%가 개성공단 출입불허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2009.3.17, 미디어리서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2009.4.5)했을 때 우리국민 62.1%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안보 위협행위이며 68%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2009.4.5, 리서치&리서치).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북한측의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60.8%)이 폐쇄 의견(22.2%)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2009.5.31, 리서치&리서치). 한편 정부의 ‘원칙 견지, 유연한 대처’에 대해 대부분(83.9%)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2009.8.25, 리서치&리서치).

2010년에는 정기 여론조사 표준항목을 확정하여 매 분기별로 같은 항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문항은 대북정책 지지도, 통일·북한에 대한 인식, 개성공단·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등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24 대북 조치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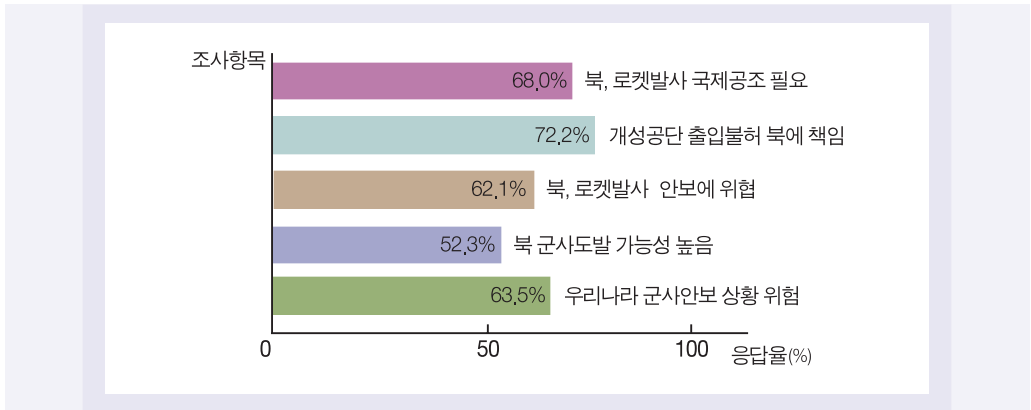
2010년 1분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 47.8%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3.26, 리서치&리서치). 2010년 2분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42.3%가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2010.6.27, 리서치&리서치). 특히, 정부의 「5.24 대북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 63.9%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2010년 1분기에는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3.6%, 적대시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1.3%에 불과했으나, 2010년 2분기에는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은 58.8%로 감소하고, 적대시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은 21.7%로 증가하였다. 통일에 대한 염원 및 관심도와 관련하여 2010년 1분기에 국민 72.9%가 통일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010년 2분기에는 국민 71.1%가 통일을 희망한다고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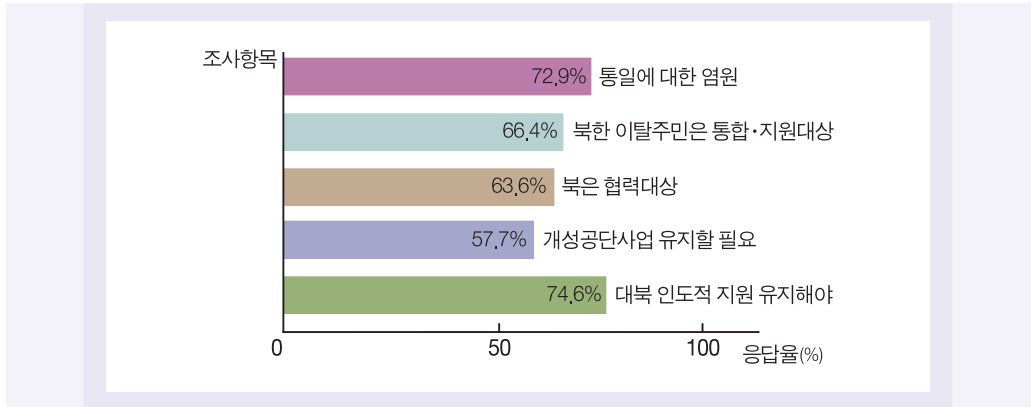
답하여 1분기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다.

한 해 동안 남북현안과 관련한 여론을 종합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각성과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인식이 달라짐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염원과 건전한 남북관계에 대한 요구는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안보인식과 대북인식



통일염원과 남북관계



조사시기 : 2009.3~2010.6월


2. 국민과의 소통

정부는 통일정책의 목표인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과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의 정책소통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먼저 일관된 대북원칙을 견지하면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홍보와 함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조화롭게 병행함으로써 「남북관계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에 대한 국민 합의를 강화하고,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결집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홍보영상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2009년 설계기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란 홍보동영상을 수도권외의 주요 극장 및 KTX에 상영하는 한편 전국에 있는 옥외전광판을 통해 광고하였다. 2010년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바람’이란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SBS·MBC 등 전국 단위의 공중파 방송뿐만 아니라 다음·네이버·야후 등 인터넷 포털에도 광고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해결」과 「원칙이 바로 선 남북관계」 구현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등 남북관계에서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설명자료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였다.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관련 참고자료」(2009.4.5), 「북핵실험 등 관련 참고자료」(2009.5.27),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 - 북한의 강경 위협 조치, 당장 중단되어야 -」(2009.6.1) 등을 통해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부 입장에 대한 공감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에 대한 홍보리플렛(2009.10.15)도 만들었다.

무가지 광고 내용	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의 첫 걸음입니다. 그랜드바겐을 통해 북핵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 원칙이 바로 서 있는 남북관계를 만들어하겠습니다. 상호존중과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올 한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문, 미래로 열린 창 통일부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부 홍보대사 정준호</p> 

2010년에는 대북정책 2주년을 맞이하여 대북정책 2주년 성과자료집인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2010.2.25), 통일부 직원 기고문집인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2010.2.26) 등을 제작·배포하였다.

정기간행물, 무가지 등 틈새 홍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다. 「통일」, 「통일시대」 등 유관 잡지에 통일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기고하여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7월부터는 「국방저널」에 “북한에서는 지금”이란 고정칼럼을 신설하여 북한의 올바른 실상과 변화를 소개하였다. 무가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도 강화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2.25) 계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알리는 전면광고와 하나원 10주년 관련 정책광고 및 ‘통일부 UCC 공모전’ 광고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공간을 넓히고자 하였다. 2010년 2월에는 메트로·포커스·AM7·노컷뉴스·스포츠한국 뉴스면 등 5개 무가지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2010년 5월에는 연합연감에 통일부 공익광고(한반도 새로운 평화)를 게재하였다.

「대한민국정책포탈」(www.korea.kr), 「위클리공감」(주간誌) 등 정부 매체를 통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전달하였다. KTV에 「통일라운지」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09년 6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상생기자단 인터뷰 취재 현장

매주 1회씩 총 22회를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통일부 차관을 포함하여 간부 21명과 외부 전문가 22명이 출연하여 대북정책 현안을 설명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젊은 층과의 정책소통 활동도 강화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미니공감 위젯(2009.4.28), K-TV 「통일라운지」코너(2009.6.17), 월간북한동향 코너(2009.7.20) 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였다. 「통일의 꿈, 사진공모전」(2009.2.2~20),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상생공영 뗏글달기」(2009.2.19~3.6), 「‘북한이탈주민지역센터’ 명칭 공모」(2009.3.10~3.17), 「2009 통일부 광고·영상(UCC) 공모전」(2009.6.1~7.31), 「통일부 슬로건 국민 공모전」(2009.8.12~10.15),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눔 UCC 공모전」(2009.8.24~9.16), 「통일애니메이션 감상평 쓰기」(2009.11.9~22), 「한반도 통일미래비전 국민공모전」(2009.11.17~28) 등 온라인 프로모션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젊은 층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통일부 블로그인 ‘통일미래의 꿈’도 온라인 소통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정책과 이슈’, ‘현미경과 망원경’ 등 정책기사와 현장탐방 등을 통해 젊은이들의 눈으로 본 남북 문제와 북한 실상 등에 대해 공유하

였다. 「‘통일미래의 꿈’ 개설 1주년 및 방문객 50만 돌파 기념 이벤트」(2009.9.7~10.3) 등도 개최하여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하였다. 통일부 블로그는 2008년 8월 개설 이후 2010년 6월 말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84만명에 이른다.

한편, 통일부 블로그를 활성화하고 젊은 층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남녀 대학생으로 구성된 상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상생기자단은 남북관계 현장 및 통일부 사업이나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상생기자단은 2008년 10월 31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래 활발한 블로그 활동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젊은이들과 소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9년 4월 30일에는 상생기자단 1기가 마감되고 “상생기자단 2기(14명)”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2010년 4월 30일에는 2기가 마감되고 “상생기자단 3기(20명)”가 구성되었다.

상생기자단 제2기 해단 및 제3기 기자단의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2·3기 합동 워크숍(2010.4.30) 등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팀웍 형성 및 향후 활동방향을 정립하였다.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주요 정책 고객들에게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책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하였다. 2009년 한해 동안 정책메일 발송 건수는 308건에 이르며, 2010년에는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206건의 정책메일을 발송했다. 이외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 주요고객에게는 매일 ‘북한 정세주요동향’을 발송하고 있다.

2010년에는 특히 뉴미디어를 통해 젊은층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2010년 3월 23일에 미투데이에 통일부 공식계정(<http://me2day.net/mouni>)을 개설하였고 2010년 6월 30일에는 트위터에 통일부 공식계정(www.twitter.com/uni_kr)을 개설하였다. 또한 통일부 각 실국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부 직원들로 구성된 「트위터 기자단(2010.6.30)」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3. 북한 관련 정보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북한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방송 주요내용’ 코너를 통해 북한 방송매체의 주요 보도내용을 일일단위로 게재함으로써 북한 주요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간 북한 동향’ 코너를 통해서도 한 주 동안의 북한 보도 내용 중 중요성을 띤 보도를 선별하여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당·군·정 주요 기관 및 단체들의 인물 현황을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집인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과 주요 인물들의 활동사항을 정리한 『북한의 주요인물』을 발간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제공하였다. 그 밖에도 북한 주요 기관·단체들의 조직체계와 1년 동안의 주요 정치 일정 및 기념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표화 한 『북한 권력기구도』와 『북한 주요행사 예정표』를 해마다 리플렛 자료 형식으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 연구소, 단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E-mail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세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동향에 대한 의견 교환을 활성화하는 등 쌍방향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광화문에 설립하였던 「북한자료센터」를 2009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여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관련 도서자료 6만 5,000여 권, 정기간행물 1만여 권, 파일자료 3,000여 건, 시청각자료 8,000여 건, 통일부 발간물 6,700여 건 등 총 9만 6,000여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2010.6.30 현재)

종 류	단 행 본	정기간행물	시청각 자료	비도서자료	자료 건수
자료 건수	19,456	3,786	4,032	6,278	33,552

정부는 1989년부터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원 및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실상 및 북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09년도에는 총 31회를 개최하여, 3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2010년 6월말까지 총 530회의 북한실상설명회가 개최되어 총 5만 1,340여 명이 참가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2,200여 편의 북한영화를 소장하고 있으며,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북한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인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 청주통일관 등 9개 지방 도시로 북한 영화 상영지역을 확대하였다.

2009년에는 북한영화를 총 716회 상영하여 7만 9,0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1990년 이후 2010년 6월말까지 북한영화 상영 횟수와 관람인원은 총 7,500여 회, 126만여 명에 이른다. 또한 2009년에는 북한 예술영화 등 비이념성 북한 영상자료 30여 건을 일반자료화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북한자료센터」는 「통일교육원」과 더불어 북한 TV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 TV방송을 보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표를 제공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교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16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 정보교류협력기관

체결연도	협약 체결 기관명
2003	국회도서관
2004	외교안보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
2004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5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5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6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06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7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센터
2007	평화문제연구소
2008	북한연구소
2008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2008	대진대학교 북방연구소
2009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
2009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또한 북한영상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북한정보자료의 접근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각급 학교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북한 영상자료의 우편대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든 북한영상자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였다.

그 밖에도 북한자료의 효율적·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장 자료에 대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시스템 구축, 원문DB 구축, 최신 검색엔진 도입, 북한 자료 메일링서비스 및 SMS서비스 실시 등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북한자료를 e-Book으로 제작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371건의 북한관련 자료를 e-Book으로 만들었으며, 2010년 6월말까지 총 1,888건을 생산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unibook.unikorea.go.kr)를 통해 북한영화 소개, 북한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 고객도 계속 증가하여 2009년의 경우 연 13만 명에 이르렀다.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1.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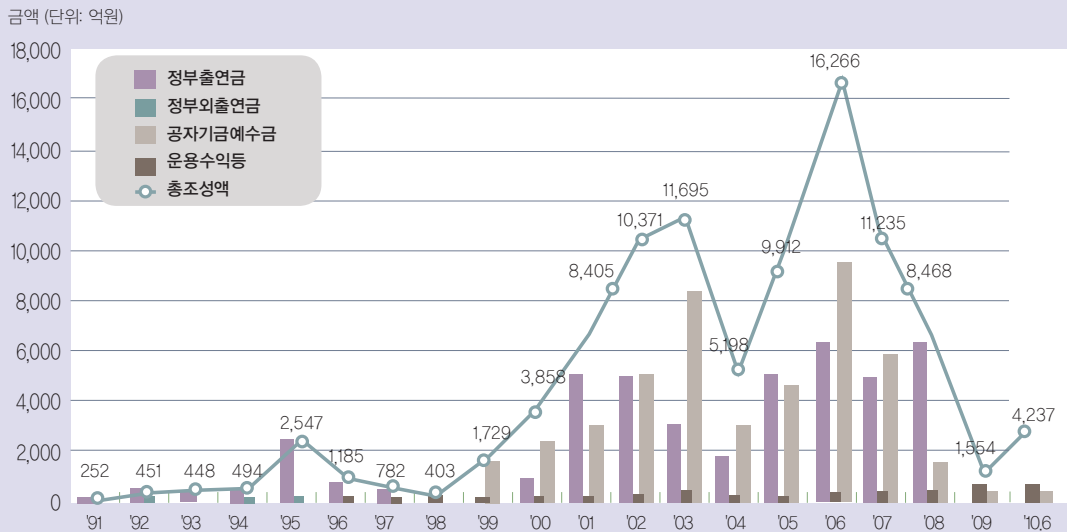
가. 남북협력기금 수입

2009년 남북협력기금 수입계획은 총 1조 5,086억원으로, 남북협력사업에는 1조 3,928억원, 경수로사업에는 1,157억원이 편성되었다. 남북협력

사업 수입계획은 정부내부 수입 5,206억원(정부출연금 3,5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706억원), 여유자금 회수 8,275억원, 재산수입 119억원, 용자금 회수 281억원, 기타 48억원으로 구성된다. 경수로사업 수입계획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874억원, 여유자금 회수 275억원, 재산수입 8억원으로 구성된다. 2009년부터 재원 배정방식이 수시배정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남북협력사업의 정부출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5,206억원은 배정되지 않았다.

2010년 수입계획은 총 2조 2,279억원으로, 남북협력사업에는 1조 3,235억원, 경수로사업에는 9,044억원이 편성되었다. 남북협력사업 수입계획은 정부내부 수입 4,179억원(정부출연금 3,5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679억원), 여유자금 회수 8,441억원, 재산수입 167억원, 용자금 회수 386억원, 기타 62억원으로 구성된다. 경수로사업 수입계획은 공공자금관리기금 8,951억원, 여유자금 회수 90억원, 재산수입 3억원으로 구성된다.

남북협력기금 조성



나. 남북협력기금 지출

2009년 남북협력사업은 사업비 1조 1,182억원, 여유자금 운용 2,53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 171억원, 기금관리비 46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09년 12월말 현재 사업비는 1조 1,182억원 중 1,000억원이 집행되었다. 인도적지원은 추석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 지원 13억원,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 7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78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215억원 등 총 315억원이 집행되었다. 경제협력분야 기반조성은 무상지원 415억원, 융자지원 86억원, 교역·경협자금대출 154억원 등 총 655억원이 집행되었다. 사회문화교류는 겨울말 큰사전 편찬사업 29억원,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 1억원 등 30억원이 집행되었다. 경수로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 1,112억원, 여유자금 운용 45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을 위해 1,102억원이 집행되었다.

2010년 남북협력사업은 사업비 1조 1,189억원, 여유자금 운용 1,329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 683억원, 기금관리비 34억원이 편성되었고, 경수로사업 관련 여유자금 운용 55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 8,988억원이 편성되었다. 2010년 6월말 현재 남북협력사업 사업비는 총 334억원이 집행되었다. 이 중 2009년도에 지원 결정되었으나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북한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113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14억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 경비 지원 4억원, 경제협력분야 무상지원 59억원 등 190억원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2010년도의 경우 6월말 현재 사회문화교류사업 9억원, 이산가족교류협력 5억원, 인도적지원사업 127억원, 경제협력분야 무상지원 86억원, 융자지원 16억원, 교역·경협자금대출 93억원 등 334억원을 집행하였다. 경수로사업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상환을 위해 4,029억원이 집행되었다.

2. 남북협력기금 사업별 집행 현황

가. 인도적 지원

1) 인도적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 방식은 당국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당국차원의 지원은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옥수수 5만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였으나,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지원이 성사되지 못하였다가 2009년 12월 북한의 신종플루 발생과 관련한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제22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12.15)를 개최하여 치료제 177억원, 수술비 등 부대경비 1억 8,000만원 등 총 178억 8,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의결하였고, 12월 18일 타미플루 40만 명분, 리렌자 10만 명분, 손세정제 20만ℓ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 88억원, 리렌자 16억원, 손세정제 7억원, 부대경비 1억원 등을 집행하였다.

북한 신종플루 발생 관련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승인액	집행액	비고
치료제	17,700	11,092	타미플루 40만명분, 리렌자 10만명분, 손세정제 20만ℓ
부대경비	180	91	수술비, 행정경비 등
계	17,880	11,183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영유아·임산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 사업에 2009년에 2차례(2009.8.3 제2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2009.10.22 제2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걸쳐 15개 단체에 45억 2,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업

(단위 : 백만 원)

구분	단체명	사업명	승인액	집행액
1차 (8.3 의결)	남북나눔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486	325
	등대복지회	북한 장애인 어린이 종합복지지원	630	630
	민족사랑나눔	영양개선 및 복지 지원, 보건의료 지원	208	123
	우리민족서로돕기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 의료 지원	540	540
	유진벨	결핵 퇴치 및 결핵병원 지원	630	-
	원불교	취약계층지원	101	101
	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어린이 영양제 생산 원료 지원	198	-
	한국건강관리협회	어린이보건 지원사업	69	62
	한국제이티에스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 의료 지원	560	-
2차 (10.22 의결)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평양어린이병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지원	102	101
	그린닥터스	개성 협력병원을 통한 대북의료지원	66	66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북한 어린이 보건의료 및 영양개선	291	221
	나눔인터내셔널	북한주민 질병퇴치	75	75
	어린이재단	북한어린이 건강 증진	302	137
	장미회	북한주민 간질치료	134	134
정책사업 (12.28 의결)	우리민족서로돕기 한국제이티에스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재단	어린이 영양식, 생활용품 등 지원 기초 의약품 지원	3,500	-
	겨레의 숲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사업 모독 지원 등	1,980	42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기초의약품 생산 지원 및 GMP 교육사업	500	250
사업관리비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207	133
합 계		15개 사업	10,579	3,508

또한, 사업의 파급효과와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제22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12.28)를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 지원, 산림녹화, 기초의약품 생산지원 등을 추진하는 6개 단체에 60억 5,5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말 현재 3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대해 제21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4.7)를 통해 107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두 차례로 나누어 물자지원을 완료(2009.6.12, 2009.7.24)하였으며, 북한으로부터 분배내역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모기장, 치료제, 예방약 등에 대해 14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순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나간다는 차원에서 제22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2009.12.28)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영유아 사업에 대해 1,311만 달러,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영유아 사업에 대해 398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의로 시설개보수 및 교육훈련에 대해 150억원을 집행하고, UNICEF를 통한 북한 영유아 사업에 대해서는 백신, 보건 및 영양개선 물자 등에 대해 47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

구분	사업내용	승인액 (만 달러)	집행액 (백만 원)
WHO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107	1,359
	병원개보수, 장비, 의약품 등 지원, 기술지원, 인력교육, 번역·출판, 모니터링 등	1,311	15,061
UNICEF	예방백신 접종, 영유아 보건, 영양개선, 복합요인조사 등	398	4,668

2) 이산가족교류 지원

정부는 이산가족문제를 남북간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남북 이산가족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지원 방식은 당국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화상상봉을 지원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2009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사업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세부 집행내역	승인액	집행액
행사준비	기획총괄	57	57
	안전보안	4	4
	교육	1	1
상봉행사	국내집결지 숙식비	84	71
	이동 및 체제경비	684	675
	가족공동식사	419	416
	상황실·프레스센터	47	38
예비비		20	0
계		1,316	1,262

2009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추석 계기 상봉행사에 합의하면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에 정부는 제2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9.16)를 통해 13억 1,594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고, 행사준비 경비 6,249만원, 이동 및 체제경비 6억 7,550만원, 가족공동식사 경비 4억 138만원 등 총 12억 6,279만원을 집행하였다.

2009년 2월 정부는 당국간 교류중단 상황에서 보완책으로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경비 지원 단가를 인상²⁾하여 제2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1.21)에서 2억 9,760만원을 의결하였고, 이산가족 54명에 대해 7,626만원의 교류경비를 지원하였다. 2010년에도 제229차 교류협력추진협의회(2010.1.21)에서 2억 9,300만원을 의결하였으며, 6월말 현재 이산가족 17명에 대해 1,700만원의 교류경비를 지원하였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건설(2008.7월 완공) 이후 상봉행사 재개에 대비하여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유지관

2)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경비지원 금액을 생사확인 80→100만원, 상봉 180→300만원, 교류지속 40→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리 비용은 1년 단위로 면회소의 최소 유지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5.15)를 통해 2009년 6억 7,4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2009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 6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이산가족면회소 완공에 따라 정부는 제20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2008.7.3)을 통해 면회소 비품 구입·설치에 필요한 비용 42억원을 지원 결정하였고, 2009년 추석 이산가족 단체상봉 개최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면회소 연회장에서 사용될 비품 일부 5,960만원을 구입·설치하였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관련 지원사업

(단위 : 백만 원)

사업내용	승인액	집행액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	674	733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비품경비 지원	-	59.6

나. 남북 경제협력 지원

1) 개성공단 조성

① 기반시설 건설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상·하수도, 조경시설 등 내부기반시설 건설을 지원(2004.9.8 제13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폐수처리시설의 조경관리공사 준공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사설계용역비, 단지내 시설의 조경공사관리비용 등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에 3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다.

② 종합지원센터 건설 지원

개성공단내 행정서비스 기능과 전시·판매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2006.4.27, 제17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는 부지 39,669㎡, 연면적 30,911㎡에 지상 15층, 지하 1층 규모로 2009년 12월 18일 준공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실내외 장공사, 조경공사, 전기·통신·난방시설 설치공사 마무리, 감리 등에 23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다.

③ 탁아소 건설 지원

개성공단에 취업중인 북한 근로자는 4만 3,000여 명에 달하며, 이중 여성근로자가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의 북한 여성근로자가 근로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내에 탁아소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제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8.11.18)에서 개성공단내 탁아소 건립비 9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 9월 24일에 착공하여 12월 26일에 완공하였다. 탁아소는 부지 4,506㎡, 연면적 858㎡,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2층 건물로 설계되었고, 10개의 보육실과 보모실, 목욕실, 간이조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09년에는 건설비 7억 5,000만원, 감리비 900만원, 자산구입비 7,500만원을 집행하였다.

④ 소방서 건설 지원

2010년 6월말 현재 개성공단에는 121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17개 기업이 건축 중이며, 입주기업의 66%가 화재에 취약한 섬유·봉제·화학업종이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밀집형 구조의 아파트형 공장 등 노동집약적 공장이 많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반면 소방차 3대와 소방인력 21명만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소방설비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소방서 건립계획을 수립

하고, 제2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11.27)에서 소방서 건립 및 소방차 구입에 남북협력기금 50억 6,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방서는 부지 3,305.8㎡, 연면적 2,181.82㎡에 소방차 8대 주차규모로 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사실, 교육훈련시설, 숙소, 식당 등의 부대시설도 갖추게 된다. 2010년 6월까지 부지매입, 설계, 장비구입 계약을 추진하였고, 부지매입비 6억 2,720만원을 집행하였다.

⑤ 입주기업 경제협력자금 대출

2009년 6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기업협회를 통해 북한의 2008년 「12.1 출입·체류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2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11.12)에서 2008년 하반기 이후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중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개사에 기업당 5억원 범위 내 총 60억원 한도내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³⁾ 이와 함께 기존 대출기업 28개사 중 전년대비 매출감소 등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대출 원리금상환을 6개월 유예하도록 결정하였다.

⑥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운영비 대출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에서 입주기업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해 운영비를 대출형식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바, 2009년도에도 운영비로 제2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1.19)에서 89억 1,000만원을 5년거치 10년 분할상

3)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28개 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총 760억원을 대출하였다. 그러나 2006년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지원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07년부터 남북협력기금 대출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2009년 긴급운영자금 대출은 2006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지원방침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관 특례보증을 선신청하고, 이를 통해 보증받지 못하는 부분을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환, 이자율 1%로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중에서 인건비 33억 9,900만원, 관리운영비 40억 4,600만원, 통근버스 구입비 11억 5,200만원 등 총 85억 9,617만원이 집행되었다. 2010년도에는 제22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10.1.22)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운영비중 37억 6,800만원을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자율 1%로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중 2010년 6월까지 인건비 8억 1,769만원, 관리운영비 7억 3,362만원 등 총 15억 5,131만원을 집행하였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북한지역에 위치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남측인원의 신변안전보호, 출입지원, 기업창설 등록 및 각종 인허가, 소방대 운영, 노무·환경·보건·산업안전·세무 지원 등 상당부분의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동안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비용을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으로 충당해왔으나, 정부는 제22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10.1.21)에서 정부업무 대행에 따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소요경비 51억 4,200만원을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중 2010년 6월까지 정부업무 대행인력 인건비 8억 9,719만원, 사업비 7억 8,429만원 등 총 18억 1,644만원을 집행하였다.

2) 분야별 협력사업

① 남북관리구역 군사통신체계 개선 지원

남북간 통행과 관련하여 활용되어 오던 군통신선이 기술적 장애로 서해지구에서 단절(2008.5.5)됨에 따라 북측이 군통신 자재·장비 지원을 요청(2008.5.8)하였고, 우리 정부는 군통신선이 남북간 통행에 필요한 설비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20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8.5.22)에서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일부 자재·장비를 북측에 제공(2008.5.30)하였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등 남북관계 상황 악화로 인해 2차분 자재·장비 제공을 보류하였다.

2009년 10월 북측의 반복된 요청 및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등을 감안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북측에 광통신 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재·장비 전달을 완료하고, 남북이 각기 자기측 구간 공사를 진행하여 12월 26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승인된 사업비 31억원 중 2009년에는 자재·장비 잔여분 구입 및 우리측 구간 선로 공사에 4억 6,812억원을 집행하였다.

12월 26일 광케이블 통신망 개통 이후 우리측은 북측에 수차례 장비 반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부당하게 장비 반환을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매월 약 3천만원의 임대료를 장비 소유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국고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2010.6.11)을 거쳐 2010년 6월 14일 장비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북측에 장비의 반환을 지속 촉구하고 장비 회수 시 매각하여 국고 환수할 계획이다.

② 남북간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남북간 교역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대북 반출입 물자를 관리할 시스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개별승인품목 정비 △물품 반출입 승인 및 통관정보 연계 추진 △인원출입통행 현황관리 △교역통계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역물자관리업무 민간전문기관 위탁’ 사업 추진을 위해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5.11)를 통해 23억 6,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9년도에는 시스템 구축 개발용역비 및 업무위탁비 등으로 6억 2,000만원(26.3%)을 집행하였다. 교역물자관리시스템은 2010년 2월 16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6월말 기준 시스템 구축 개발용역비 및 업무위탁비 등으로 19억 6,462만원을 집행하였다.

③ 남북농업협력 지원

정부는 (사)통일농수산사업단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시범적 차원에서 금강산 삼일포·금천리 협동농장과 개성지역 송도리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식량생산 증대, 영농기반 강화, 기술개선·인적교류, 지역소득원 개발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금강산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간 3개년 사업이 완료되었고, 2008년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개성지역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었고, 2009년도 사업은 북핵실험 이후 기금지원이 유보됨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사업비를 사고이월해 그동안 구축된 협력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농물자 구입비 및 수송비 등을 충당하였는바, 금강산 지역은 1억 3,800만원, 개성지역은 1억 3,9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다.

④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조사연구비 지원

남북당국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2006.6.6)하면서 동 협력사업의 이행을 위해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측 이행기구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지정하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위탁계약을 체결(2007.5.28)하였다. 제2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1.21)에서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와 북한 자원개발 관련 조사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7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는 정부가 위탁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6자회담 경제·에너지 설비·자재 대북지원 사업, 남북관리구역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 자재·장비 대북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에 해당하는 경비로 2010년 6월

현재 9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다.

‘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비’는 북한자원 공동개발 전략 및 투자활성화 방안과 단천지역 광산개발 및 자원개발협력특구 추진방안 수립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이며, 총 1억원을 지원하였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50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2010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한 ‘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대북에너지 설비자재 지원사업’ 및 ‘남북 군사 당국간 통신체계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위탁 사업비를 2010년 6월 현재 2억 9,242만원을 집행하였다.

3) 민간기업 대출 및 교역·경협 보험

① 교역·경협 업체 자금대출

남북간 교역·경협은 일반 무역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위험도가 높고, 거래기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일반 금융기관의 지원제도가 취약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사업타당성은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대북 교역 및 투자업체들에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하고 있다.

교역업체에 대한 대출자금은 북한물품의 반입 대금, 설비 및 위탁가공 원부자재 구입대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9년은 1개 기업에 대해 2억원의 신규 대출을 실시하고, 14개 기업에 대해 82억원의 재대출을 실시했다. 2010년은 6월말 현재 11개 기업에 대해 68억원의 재대출이 집행되었다.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제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제협력사업 승인 및 신고 수리를 받은 자에게 투자자금 대출, 운전자금 대출, 사회간접자본시설자금 대출, 산업용지분양자금 대출 등을 통해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 2009년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대출 총액은 48개 기업

에 총 2,352억원이 대출되었고, 이중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상환한 금액은 213억원이다. 2010년은 6월말 현재까지의 총 경협대출금액은 46개 기업에 2,378억원이고, 이중 상환한 금액은 280억원이다.

② 교역·경협 보험

교역·경협보험은 민간기업이 남북간 교역 및 경협 추진과정에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이나 북한측 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위험발생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 범위내에서 실제 피해규모를 산정하여 결정된다. 2010년 6월말 현재 145건, 4,962억원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까지 보험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어 기금집행 실적은 없다.

북한의 「12.1 통행·체류 제한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협기업의 경영애로 경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보험제도를 개선하였다. 2009년 7월에는 보험계약 체결 총액한도를 7,000억원으로, 기업별 경협보험 계약 체결한도는 7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험금 지급요건도 사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다. 8월에는 교역보험제도에 원부자재반출보험⁴⁾ 및 납품이행보증보험⁵⁾을 도입하여 입주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4) 원부자재반출보험

- 담보위험 : 수용, 전쟁·내란, 약정불이행, 복측의 통행제한·금지 등
- 계약금액·한도 :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 기업별 10억원

5) 납품이행보증보험

- 담보위험 : 수용, 전쟁·내란, 약정불이행, 복측의 통행제한·금지 등
- 보상수준·가입한도 :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 기업별 5억원

다. 사회문화교류 지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남북이 공동으로 남과 북, 해외의 우리말을 집대성하여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는 2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09.1.22)에서 30억 6,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도록 결정하여, 편찬사업비, 기관운영비, 사업평가비 등으로 29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남북공동집필회의가 4차례 개최되어 올림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집필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체 공정률의 약 51%가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22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2010.1.29)에서 16억 7,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도록 의결하였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사업은 2005년 12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개성역사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협력한다는데 합의한 이후 추진되었다. 2009년에는 총 사업비 5억 1,000만원 중 유물촬영비 4,900만원, 기록비 445만원, 체재비 5,700만원 등 1억 1,1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어 총 4,500여 점에 달하는 출토유물 중 주요 유물에 대한 사진과 3D 촬영작업,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 남북공동조사위원회 개최 및 4,500여점에 달하고 있는 만월대 출토 유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수장고 건립 등이 추진되었다.

3.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평가 및 발전방향

가. 운용 평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북한의 대남강경조치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영유아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등 남북협력기금을

의미있게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실적이 엄매이지 않고, 그동안의 지원방식에도 벗어나서 질서있고 제대로 된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공동번영을 열어가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된 주요 사업을 보면,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북한 신종플루 치료제 및 손 세정제 지원,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 총 5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2년간 중단되었던 당국차원의 이산가족상봉이 2009년 9월에 재개되어 195가족이 상봉의 감격을 나누었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차단, 우리 근로자 억류 사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또한 통행차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입주기업에게는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토록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애로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남북한이 함께 개성공단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공단을 공동시찰하기도 하였다.

남북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남북간 군통신 선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자재장비를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반출·반입 승인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반출·반입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역물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우리 교역·경협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교역보험제도 개선(원부자재 반출보험, 납품이행보장보험 신규 도입 등), 경협보험제도 개

선(보험금 지급 요건 완화, 보험계약 체결한도 증액), 대출제도 개선(대출 대상 확대) 등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사회문화교류 측면에서 거래말큰사전 사업지원을 통해 남북의 언어 및 사회현실을 서로 이해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사업지원을 통해 남북 문화재의 공동발굴을 통한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서도 북한은 금강산지역 부동산 동결·몰수(2010.3) 조치로 남북관계를 훼손하고, 천안함 피격사건(2010.3)이라는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심각한 경색 국면에 처해 있다. 2010년 6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334억원 집행(계획현액 1조 1,717억원 중 2.9%)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2009년도에 지원 결정되어 2010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측면에서는 「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 평가시스템 도입,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마련, 기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을 정례화하였고, 매월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금 조성현황, 집행실적, 사용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남북협력기금 실무편람」도 발간하였다.

나. 발전 방향

1)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대

남북협력기금은 단년도 비적립 사업 계정 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적립이 불가능⁶⁾하다. 또한 기금 재원도 정부출연금에 지나치게 의

6)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단년도 비적립 사업계정으로 매년 조성된 재원이 당해 연도 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 예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재원이 적립되지 않고 있다.

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기금 지원이 주로 단년도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중장기 비전에 입각한 정책자금이나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일정부분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통일을 준비하는 재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규모 재원 소요에 대비한 재원 확충 방안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남북협력기금 운영

남북협력기금은 국민의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금 사업 심사-기금 집행-기금 평가」 등 기금지원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으로써 기금 사용에 대한 효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평가시스템 도입, 기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금 지원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는 바, 이를 보다 내실화하는 노력이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금 지원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각종 통계와 분석의 질을 제고하고, 기금 지원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평가의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강화 등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3)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

남북협력기금 대출 및 보험제도는 대북 투자 및 경협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2008년 이후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 및 보험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고, 정부도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납품이행보장보험 신규 도입 등 다

양한 노력을 하였다.

현재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남북경협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은 기업간 형평성 및 남북관계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와 경제협력사업 보험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간 합의의 실효적 보장을 통해 남북경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남북협력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여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고 남북교류협력의 틀을 바로 세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통일백서
부 록

남북관계 주요 일지

(2009.1 ~ 2010.6)

날 짜	추진 내용
200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2009년 신년공동사설 발표 - 2012년 강성대국 비전하 체제결속·계획경제·자력갱생 및 6.15·10.4 선언 이행 강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대화하고 동반자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등 핵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1.1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실사단(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영변 핵시설 원자로용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 협의차 방북
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대통령의 발언을 공공연한 대결선언이라고 비난, 전면대결 태세 진입 - 등 선언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 - 미국의 핵 위협이 남아있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관련조항 폐기 주장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남북간 합의가 일방의 주장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 북한이 대화와 협력에 나올 것을 촉구, 최고지도자 비난 중단 촉구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군 총참모부 대변인,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 표명 기자회견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남북관계의 원칙 강조(제8차 라디오 연설)
2.1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6자 동북아 안보회의 개최(러시아)
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 대변인 논평 - 전단살포 자제 촉구, 북한화폐 무단 반입 시 법적조치의 불가피성 지적
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광명성 2호 발사준비 사실 발표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남통지문 접수 - 미군의 MDL 근접활동 시비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남북간 합의사항 존중 및 조건없는 남북대화 제의(3.1절 기념사)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비난,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위협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관련 동·서해 남북관리구역에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 실시와 남북 군통신 차단 발표 • 통일부 대변인, 유감 표명 및 즉각적인 철회 요구
3.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개성공단 육로통행 제한(3.9, 3.13~15, 3.20)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군통신 3월 21일부터 회복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미국 기자 억류 및 조사사실 발표(조선중앙통신) • 북한 군통신 및 육로통행 전면 허용
3.2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남아공월드컵에선 남북한전(4.1) 북한선수단 방남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 억류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PSI 참가는 선전포고로서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강조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군 총참모부 중대보도 - 미사일 요격에 대한 보복타격 위협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 • 정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 발표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지적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보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관련 의장성명 채택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성명 - 안보리 의장성명 비난, 6자회담 거부 천명
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접촉(개성)
4.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대북 제재조치 확정
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 착수 발표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 안보리 사죄가 없을 경우 핵실험, ICBM 발사시험 등 추가적 자위조치 위협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기자회견 - 현대아산 직원은 현재 조사 심화중임을 언급
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 개성공단 기존 계약 무효화 선언 •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의 5.15 북 조치 수용불가 입장 표명
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제2차 핵실험 성공 보도(중통) • 북한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PSI 전면참여 발표 •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군 관문점대표부 성명 -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위협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실무접촉(6.11) 제의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입장 재확인(제54회 현충일 추념사)
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6.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채택(현지시각 6월12일) • 북한 외무성 성명 - 핵포기 불가입장 공식 천명 • 외교부 대변인,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논평 발표
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회담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관련 남북당국간 제3차 실무회담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발표 -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이 결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
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관련 제재 대상 단체·개인 및 물자 목록 선정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 6자회담 불참입장 재확인 및 미·북 양자대화 촉구
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연안호」 NLL 월선 및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
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800 연안호」 나포 및 조사 사실 공식 확인 • 우리측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800연안호」 선박·선원(4명)의 조속한 송환 촉구
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 클린턴(William Clinton) 전 美대통령 방북, 김정일 면담, 미국 기자 석방
8.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방북, 김정일 위원장 면담(8.16) • 현대그룹-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공동보도문 채택 -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8.17)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역류 근로자 송환
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 천명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
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에 김정일 위원장 명의 조전 발송(중통) •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대중평화센터측에 조문단 파견 의사 통보

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개최(8.26~28, 금강산) 제의 •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 직통전화 8.21 재개 합의 • 북한, 12.1 통행제한조치 해제 통보
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12.1 조치 해제 관련 논평 발표 • 북한 「특사조의방문단」 서울 방문 (8.21 ~ 23)
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인택 통일부 장관-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면담
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문단, 이명박 대통령 예방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의 수용 및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 재개 공식 통보
8.2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 이산가족 상봉행사(9.26~10.1) 진행 등 합의
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800 연안호」 선박 및 선원(4명) 송환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 유엔 안보리 의장에 편지 발송 보도(중통) -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추출 플루토늄 무기화, 우라늄 농축시험 성공 진행 주장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방류로 우리측 민간인 6명 사망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강 수해관련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북한 관계기관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임진강 상류 방류 경위 등 통보
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개성공단관리위원회간 월 임금 5% 인상 합의
9.1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빙귀」 중국 국무위원 「후진타오」 주석 특사로 방북
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Grand Bargain' 제안 - G20 정상회의 참석 방미 중 CFR·KS·AS 공동주최 오찬 연설
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관리위원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관련 합의서 체결
9.26~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남 554명, 북 334명)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11명) 동해 상 어선 이용 귀순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북한 주민 전원 귀순의사 표명사실 통보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원자바오 총리, 김정일 위원장 면담(북·중 수교 60주년 행사 참석차 10.4~6간 방북) - 김정일 위원장, 미·북 양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다자회담 참가용의 표명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 대남전통문 접수 - 북한 주민 전원 및 어선 송환 재차 요구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10.14) 및 적십자 실무접촉(10.16) 제의 • 북한,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
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및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에 동의
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개성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개성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 자재장비 지원용의 통보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 자재장비 수락
1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발송 - 옥수수 1만톤 대북지원계획 통보
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통신선로 개선공사 자재장비 전달 개시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연결공사 완료(12.22), 시험통화(12.24~25), 정식가동(12.26)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폐연료봉(8,000개) 8월 말 재처리 완료 주장(중통)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EU정상 공동선언 발표 - 북한의 「9.19 공동성명」 의무 준수 및 비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의 조속한 이행 촉구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美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Grand Bargain' 지지 표명
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경비정 서해 대청도 해상 NLL 침범, 퇴거 조치(대청해전) •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 - 서해상 교전을 '무장도발사건' 이라고 주장, 우리측 사죄와 재발방지 조치 요구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대청해전관련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 (노동신문·민주조선 논평)
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서울) - 이명박 대통령 : Grand bargain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 바, 북한 스스로 안전과 경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 오바마 대통령 :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은 열려있음. 제재 조치 완화, 국제사회 동참의 길이 열려있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지하게 핵문제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김정일 면담 •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장소문제관련 '융통성' 표명 (대통령과의 대화) - 정상회담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남북자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음. 장소는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음.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박 대통령, 북한 내 신종플루 발생관련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치료제 지원방안 마련지시(국무회의) •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美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12.8~10)
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보건성, 신의주와 평양에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9명 발생 사실 발표(중앙통신)
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의사 전달 • 북한,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수용입장 통보
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정부, 북한제 무기(대공미사일, 지대공미사일 발사대, 대전차 로켓포, 탄약 등)적재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 억류(방콕 돈므앙공항)
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12.12~22) - 중국 청도(靑島 칭다오)·소주(蘇州 쑤저우)·심천(深圳 선전)공단 및 베트남(옌푹 공단)
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신종플루 치료제 대북 전달(개성) - 타미플루 40만명 분, 리렌자 10만명 분 등
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 -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북측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 동 사격구역 내 모든 어선·합선의 자체 안전대책 강구 주문

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7명) 송환 - 12.21 서해 상 소형선박 표류, 예인
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중앙통신, 불법입국(12.24) 미국인 1명 억류, 해당기관 조사 사실 보도
20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신년공동사설(“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발표 - “혁명적 대고조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해야 할 총공세의 해”로 규정, △경공업·농업 주공전선 설정, △사상교양사업 강화, △남북대화 및 관계개선, △미북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실현을 2010년 과업으로 제시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함. △북한에 대해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 △남북간 상시대화기구 마련 △6.25 60주년 국군용사 유해발굴 사업 추진 • 통일부장관, 신년사 - 2010년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의 해,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 △생산적 인도주의 구현, △통일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통일미래에 대한 국민의지 결집 및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외무성 성명, 정전협정 당사국에 대해 평화협정 회담 개최를 제의 -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하자면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 위임에 따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함.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대변인 성명, 급변사태 대비 비상통치계획 완성 관련 비난 및 입장 천명 -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하여 북과 남, 해외 동포 총동원 거족적 보복성전 개시,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평화·안정 보장을 위한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남조선 당국 제외
1.19~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 개최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통지문, 1.23 국방부장관이 도발적인 군사행동계획 발표했다고 비난, 포병 및 비행대 사격을 중지하지 않으면 대응타격 개시 위협 - △무분별한 반공화국 선전포고로 밖에 달리는 평할 수 없는 침략전쟁 행위, △위임에 의하여 포병 및 비행대 사격을 중지하지않으면 대응타격이 즉시 개시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제4차 실무회담 개최, 향후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3통문제 협의 후 숙소와 임금문제 등을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 - 우리측과 북한측은 3통문제 개선에 원칙적으로 합의/3통은 군사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임금·숙소 등 현안문제는 당국간 실무회담 협의하기로 함.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개최 - 우리측은 관광재개를 위해 3대 조건 우선 해결 강력 표명, 북한측이 호응하지 않음에 따라 회담을 종료
2.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자루이 中 당 대외연락부장, 평양 방문 (2.8 김정일 면담) - 김정일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北의 일관된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신화통신)
2.9~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방중(중통) - 북중관계, 평화협정 체결, 제재 해제, 6자회담 재개 등 신뢰를 조성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작년 12.18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분 전달에 이어 손소독제 20만를 개성 육로를 통해 북한측에 전달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3.1절 기념사 - 북한이 남한을 경제협력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한반도 평화 등 남북간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함,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도 논의해야 할 것임, 북한이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개최 - 우리측은 3통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통행·통관/통신으로 분리하여 회담을 운영하자고 제의, 북측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6.15/10.4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등을 주장하면서 개성공단과 동해지구 3통 관련 설비·자재, 장비를 우선 제공해 줄 것을 요청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 南 당국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방해시 관련 계약·합의 파기 위협 - 개성(3월)·금강산(4월) 관광 개시, 편의와 신변안전 완벽 보장, 관광재개 방해시 모든 합의·계약 파기 및 부동산 동결 등 특단의 조치 불가피
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북한 아태위에 통지문 발송 - 진상규명 및 3대 조건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차기회담에서 진전된 입장을 촉구하며 회담개최 용의 표명, 아태위가 발표한 '특단의 조치'는 사업자간 합의 위반 및 국제규범 위반임을 지적하고, 조치를 취할 경우 모든 책임이 북한측에 있음을 지적

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아태위, 통일부에 통지문 발송, 3.25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 실시 통보 - △남측 부동산 조사 방침,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장제한 등 추가 조치, △남측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 • 통일부 입장 발표 - 아태위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사업자간·당국간 합의 위반 및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 남북합의 준수 및 대화를 통한 해결, 신변안전 문제 해결 후 관광재개 등 강조
3.25~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 조사 실시 - 우리측은 관광재개를 위해 3대 조건 우선 해결 강력 표명, 북한측이 호응하지 않음에 따라 회담을 종료
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 금강산지구내 우리정부 부동산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 등 선포 - △우리정부 자산 금강산 면회소, 소방대, 관광공사 소유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 시작, △남 당국 대결의 길로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 • 통일부, 북한 명승지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에 대한 입장 발표 - 북한 일방조치는 사업자간 계약 및 당국간 합의위반 및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각 철회 촉구,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모든 책임이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경고
4.22~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방위 정책국장 박림수 소장 등 10명 금강산 민간소유 부동산 조사
4.27~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 실행, 최소 인원(16명) 외 관리인원 추방 통보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철수 북한 대풍국제투자그룹 총재, 중국 투자자와 개성공단 방문
5.3~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방중 (다렌, 천진, 베이징, 심양) - 신화통신 보도(5.7), △후진타오 5개분야 협력 제안, △김정일, 한반도 비핵화 입장 불변 언급, △원자바오, 북한에 중국의 개혁개방 소개 언급 / 김정일 중국의 대북투자 요청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 핵융합 반응 성공 보도 - 열핵반응장치가 설계 제작되고 핵융합반응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끝났으며 열핵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과학 기술력량이 마련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 천안함은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된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인해 침몰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담화문 발표 -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함,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 △북한 정권도 이제는 변해야 함,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민족의 공동번영, 나아가 평화통일임. • 통일·외교·국방 3부장관 공동 기자회견 - 통일부 :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개 대한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단, 개성공단 운영은 지속하고 취약계층 지원은 유지 - 외교부 : △국제사회의 대북규탄 여론 조성, △유엔안보리 회부 등 안보리차원 조치협의 및 기존 대북제재결의 엄격 이행 - 국방부 : △대북심리전 재개, △한미 연합 對 잠수함훈련 실시, △PSI 강화
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평통 대변인 담화,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 선언 - △당국간 모든 관계 단절, △당국간 대화와 접촉 중단,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 사업 완전 중지, △북남사이 통신연계 단절,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폐쇄 및 납축 관계자 즉시 전원 추방,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적 반격 개시, △남조선 선박·항공기 영해·영공 통과 전면금지, △북남관계 제기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
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남북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전면 철회 등 7개항의 실제적인 중대조치 시행 통고,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대한 1차적 대응 주장 - △남북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전면 철회, 당면하여 동서해 군통신연락소 폐쇄와 개성공업지구 등 관련한 육로통행 전면차단 검토 착수, △반공화국 심리전책동에 대해 경고한대로 무자비하게 대응, △서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체결한 쌍방 합의 완전 무효화, 국제해상초단파무선대화기 사용 중단 및 통신선호 즉시 단절, △해상분계선 침범행위에 대해 물리적 타격, △영해, 영공, 영토를 함선, 비행기, 기타 가동수단들의 통과 전면 불허, △당국자 경내 출입 철저히 엄금, △국방위 검열단 차단행동 계속되는 한 날조극 정제 지속 폭로

5.29~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 공동발표문 채택 -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에 의해 수행된 공동조사와 각국의 반응을 중시, △3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동 문제를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음.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6자회담 과정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 우리에게서 못다한 꿈이 있음. 그것은 바로 아직도 빈곤과 억압속에 고통받는 북녘 동포와 함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누리는 통일조국의 꿈.
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위 대변인 중통 기자회견, 안보리 회부를 반복 실천행동 진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자비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 검열단 수용 재차 촉구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참모부 중대포고, 심리전 재개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주장, 심리전 수단 청산을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 진입 선언, 서울 불바다까지 내다 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주장
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대변인 6.15 선언 10년 정부입장 발표 - △북한은 천안함 무력공격을 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서울 불바다' 등 위협과 비난을 하는 등 10년 전과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핵실험, 대화중단, 통행차단, 천안함 사태 등 각종 도발을 통해 6.15 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한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강조,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북한에 대해 진정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 등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핵개발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
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9월 상순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당 대표자회 소집 결정(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 보도
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유엔사의 장성급회담 제의(6.26) 를 거부 - 검열단 파견을 조건으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발송

남북관계 주요 통계

(2009.1 ~ 2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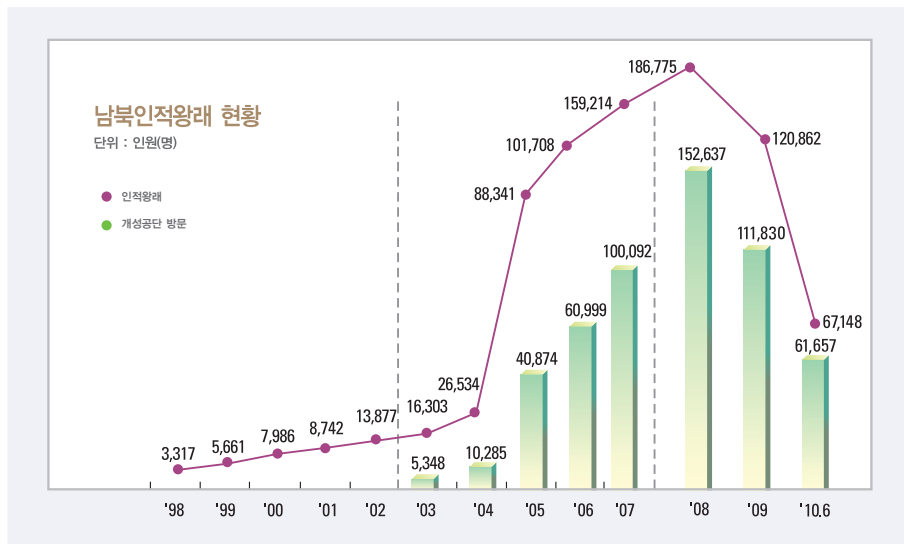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① 남북 왕래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1989~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6	계
남→북 (방북)	11,321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86,443	120,616	67,016	801,581
북→남 (방남)	637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32	246	132	7,867
계	11,958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86,775	120,862	67,148	809,448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②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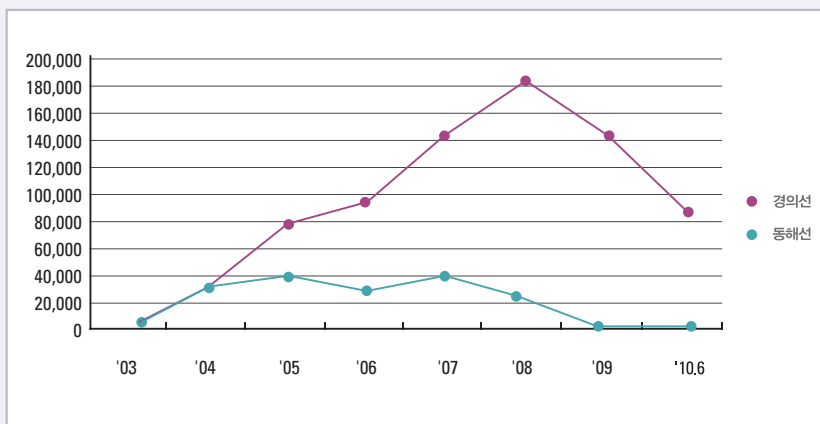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금강산 관광	해로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	-	-	-	552,998
	육로	-	-	-	-	-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1,381,664
	합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1,934,662
개성 관광	-	-	-	-	-	-	-	1,484	-	7,427	103,122	-	-	112,033
평양 관광	-	-	-	-	-	1,019	-	1,280	-	-	-	-	-	2,299

③ 남북 차량왕래 현황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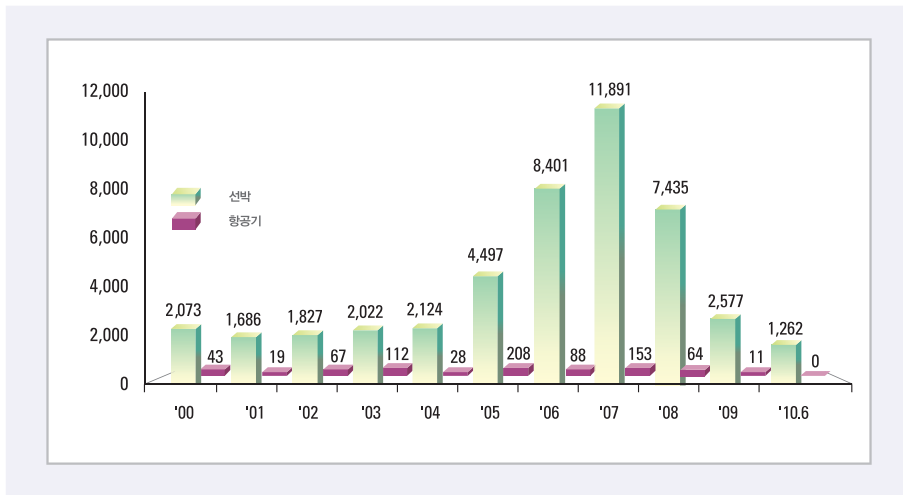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6	계	
차량 (운행회수)	경의선	2,497	30,442	77,395	94,506	143,450	184,072	145,802	83,960	762,124
	동해선	6,286	31,072	39,565	29,406	40,053	25,077	2,534	1,459	175,452
	합계	8,783	61,514	116,960	123,912	183,503	209,149	148,336	85,419	937,576



④ 남북 선박·항공기 왕래 현황

단위 : 회(편도)

구분	1994~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6	계
선박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7,435	2,577	1,262	49,194
항공기	-	43	19	67	112	28	208	88	153	64	11	0	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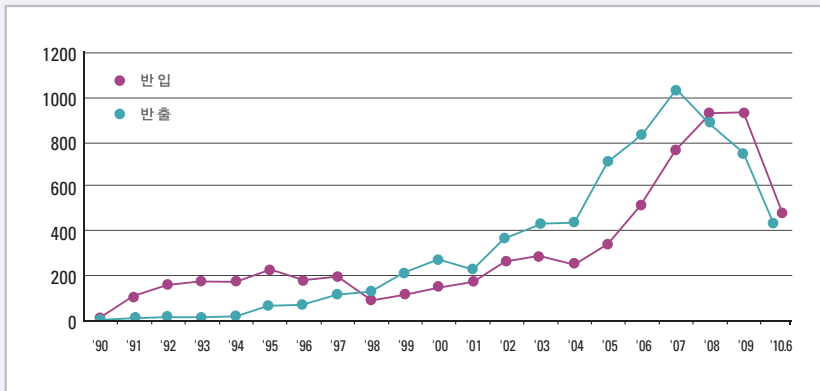


2. 남북 교류협력 현황

①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6	계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553	6,657
반출	-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3	888	745	441	7,031
계	19	13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8	1,820	1,679	994	13,688



② 연도별 남북교역 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6	계
반입	66	79	300	510	601	708	976	1475	1806	1963	3,089	3,962	4,720	5,023	6,366	5,940	9,337	16,442	25,027	31,243	37,307	21,237	178,127
반출	1	4	0	62	97	267	1,668	1,908	2,185	2,847	3,421	3,442	3,034	3,773	4,853	6,953	11,828	17,039	26,731	36,202	41,293	23,759	191,367
계	67	83	300	572	698	975	2,644	3,383	3,991	4,810	6,510	7,394	7,754	8,796	11,209	12,893	21,165	33,481	51,758	67,445	78,600	44,996	369,494

③ 연도별 남북교역 품목수 현황

2010.6.30 기준, 단위 : 개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6	계
반입	24	23	43	69	69	80	109	130	143	136	172	204	201	204	186	202	381	421	450	482	486	384	784
반출	1	3	16	25	37	87	167	167	284	379	405	527	492	493	530	575	712	697	803	813	771	671	1,081
계	25	26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570	588	634	775	757	853	859	822	732	1,102

④ 유형별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6
반입	일반교역·위탁가공	258	320	441	645	624	499	224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경공업협력)	-	20	77	120	308	435	329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	-	1	-	-	-	-
	반입 합계	258	340	520	765	932	934	553
반출	일반교역·위탁가공	89	100	116	145	184	167	60
	경제협력 (개성공단·금강산관광·기타·경공업협력)	89	250	294	520	596	541	371
	비상업적 거래 (정부·민간 지원 / 사회문화협력 / 경수로사업)	261	366	421	367	108	37	10
	반출 합계	439	715	830	1,032	888	745	441

3. 개성공단사업 추진 현황

①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 개/만US 달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6	계
가동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444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15,972	94,104

②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6
북측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4,011
남측 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28
합 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4,839

③ 개성공단 방문 현황

단위 : 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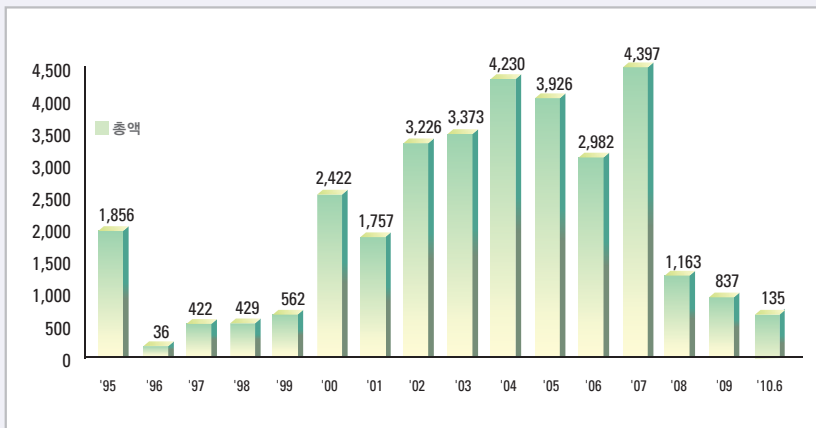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6	계
방문인원	40,874	60,999	100,092	152,637	111,830	61,657	528,089
방문차량	19,413	29,807	42,399	85,626	72,597	41,226	291,068

4. 인도적 과제 추진 현황

① 대복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6	합계	
정부 차원	무상 지원	1,854	24	240	154	339	944	913	1,075	1,016	1,211	1,240	2,139	1,767	197	384	8	13,505
	민간 기금 지원액						34	62	65	81	102	120	134	216	241	77	14	1,146
	식량 차관	-	-	-	-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505	-	-	-	8,728
	계	1,854	24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461	22	23,379
민간차원 (무상)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09	725	376	113	8,374	
총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837	135	31,753	



② 이산가족 교류 현황

단위 : 건/(명)

구 분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민간차원	생사확인	-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서신교환	-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제3국 상봉	-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방북상봉	-	-	-	-	-	-	-	-	-	1	5	4
											(2)	(18)	(9)
당국차원	생사확인	65	-	-	-	-	-	-	-	-	-	-	792
		(157)											(7,543)
	서신교환	-	-	-	-	-	-	-	-	-	-	-	39
													(39)
	방남상봉	30	-	-	-	-	-	-	-	-	-	-	201
		(81)											(1,720)
방북상봉	35	-	-	-	-	-	-	-	-	-	-	202	
	(76)											(674)	
화상상봉	-	-	-	-	-	-	-	-	-	-	-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6	계	
민간차원	생사확인	208	198	388	209	276	69	74	50	35	10	3,836	
	서신교환	579	935	961	776	843	449	413	228	61	9	11,391	
	제3국 상봉	165	203	280	187	94	50	54	33	21	3	1,696	
		(471)	(592)	(662)	(465)	(256)	(86)	(162)	(92)	(47)	(9)	(3,225)	
방북상봉	5	5	3	1	1	4	1	3	2	1	36		
	(22)	(24)	(15)	(5)	(5)	(19)	(5)	(5)	(4)	(2)	(135)		
당국차원	생사확인	744	261	963	681	962	1,069	1,196	-	302		7,035	
		(2,670)	(1,635)	(7,091)	(5,007)	(6,957)	(8,314)	(9,121)		(2,097)		(50,592)	
	서신교환	623	9	8	-	-	-	-	-	-		679	
		(623)	(9)	(8)								(679)	
	방남상봉	100	-	-	-	-	-	-	-	-		331	
		(899)										(2,700)	
방북상봉	100	398	598	400	397	594	388	-	195		3,307		
	(343)	(1,724)	(2,691)	(1,926)	(1,811)	(2,683)	(1,741)		(888)		(14,557)		
화상상봉	-	-	-	-	199	80	278	-	-		557		
					(1,323)	(553)	(1,872)				(3,748)		

※ 이산가족 정보통합 센터 등록현황 : 128,123명 등록 (사망 43,990명 / 생존 84,133명)

③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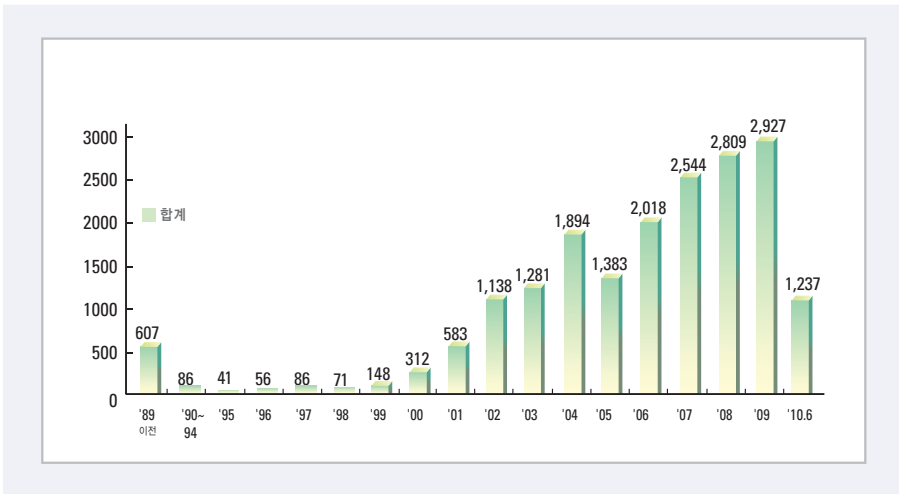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1989 이전	199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남성	562	80	35	43	56	53	90	179	294
여성	45	6	6	13	30	18	58	133	289
합계	607	86	41	56	86	71	148	312	583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1~6 (잠정)	계
남성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8	329	6,104
여성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59	908	13,117
합계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1,237	19,221

※ 보호결정 기준 집계로 인해 집계시차 발생 ⇒ 추정치 사용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5. 남북회담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	'7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6	계
정치	156	4	10	-	-	7	4	8	18	2	4	5	2	10	5	13	-	-	-	248
군사	0	-	-	-	-	-	-	-	4	2	9	6	5	3	4	11	2	-	-	46
경제	5	-	-	-	-	-	-	-	3	3	14	17	13	11	8	22	3	4	3	106
인도	111	-	-	3	-	4	1	-	2	1	3	7	2	4	3	3	-	2	-	146
사회 문화	34	-	-	-	-	-	-	-	-	-	2	1	1	6	3	6	1	-	-	54
합계	36	4	10	3	0	11	5	8	27	8	32	36	23	34	23	55	6	6	3	600

※ 정치(장차관급 회담 등)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등)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등) / 인도·사회(적십자·체육 회담 등)

6. 통일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0년 이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6	계
교육인원	365,125	12,774	16,711	17,087	20,804	26,420	25,865	34,045	32,039	71,944	31,923	654,737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

(2009.1 ~ 2010.6)

1. 총괄표(구성 및 사용 현황)

①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91~'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6	계
정부출연	635,000	500,000	490,000	300,000	171,400	500,000	650,000	500,000	650,000	-	-	4,396,400
민간출연	1,088	1,080	78	1	1	33	15	75	52	56	-	2,479
공자기금 예수금	404,683	310,000	505,000	823,000	310,000	460,000	940,000	584,591	147,800	81,000	404,000	4,969,774
운용수익	173,714	29,300	41,025	46,307	34,489	23,567	28,700	32,711	38,987	67,558	14,581	530,839
기타 수입금	362	106	1,010	208	3,883	7,611	7,919	6,148	10,287	6,796	5,244	49,574
계	1,214,847	840,486	1,037,113	1,169,516	519,773	991,211	1,626,634	1,123,525	846,826	155,410	423,725	9,946,066

② 분야별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금종류	'91~'03	'04	'05	'06	'07	'08	'09	'10. 1~6	계	
경상 사업	남북교류 협력지원	인적양래 지원	25,358	1,056	3,786	5,289	1,698	2,721	-	-	39,908
		사회문화 협력지원	3,788	3,160	7,468	7,375	6,908	3,847	3,029	856	36,431
		소 계	29,146	4,216	11,254	12,664	8,606	6,568	3,029	856	76,339
	민족 공동체 회복지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10,140	3,158	13,289	9,908	26,918	18,241	2,152	471	84,277
		인도적 지원사업	728,896	122,547	186,621	212,536	227,193	59,694	29,367	12,651	1,579,505
		경제협력 기본조성	223,684	76,033	204,475	152,091	172,540	110,074	41,461	8,571	988,929
		소 계	962,720	201,738	404,385	374,535	426,651	188,009	72,980	21,693	2,652,711
	합 계	991,866	205,954	415,639	387,199	435,257	194,577	76,009	22,549	2,729,050	
	용자 사업	인도적사업(용자)	358,526	101,982	179,262	3,939	140,479	12	-	-	784,200
		교류 협력지원	교역경험 자금대출	101,439	37,378	29,311	47,910	56,631	10,807	15,416	9,285
경제협력 기본조성 (용자)			134,070	43,974	27,520	23,065	83,369	25,820	8,596	1,551	347,965
대북경수 로사업		경수로 대출	1,255,848	86,984	22,678	8,883	-	-	-	-	1,374,393
합 계		1,849,883	270,318	258,771	83,797	280,479	36,639	24,012	10,836	2,814,735	
총 계	2,841,749	476,272	674,410	470,996	715,736	231,216	100,021	33,385	5,543,785		

2. 집행실적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구분	
2008	FIFA 청소년 월드컵대회 북한대표팀 사전 방한 지원	7	인적왕래지원 (3건, 2,721)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대회 북한대표팀 방한	13		
	북한현지 체험학습	2,701		
	2008년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한 지원	3,182	사회문화협력지원 (8건, 3,847)	
	금강산가극단 무용공연 조선무용 50년-북녘의 명무	17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	142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교육 사업	56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교육사업(2008)	63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2007)	49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조사사업(2008)	294		
	고구려벽화무덤 남북공동보존사업	44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17,960		이산가족교류지원 (4건, 18,241)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46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범교환 지원	129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단체 협력사업지원	5	인도적 지원 (70건, 59,694)	
	등대복지회의 취약계층 종합지원(2007)	31		
	2007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	400		
	2007년 민간단체 합동사업	2,585		
	2008 정책사업	1,525		
	2008 합동사업	155		
	4개민간단체컨소시움-북한영유아지원사업	8,027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농업 협동농장 지원사업	42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콩생산 및 가공식품 지원사업	168		
	국제백신연구소의 북한 백신지원사업(2008년)	281		
	국제옥수수재단의 옥수수심기 협력사업	101		
	국제옥수수재단의 옥수수심기 협력사업(2008)	139		
	굿네이버스의 어린이 건강증진 및 질병퇴치 사업	44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의 농축산개발을 통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50		
	굿피플의 콩기름공장 운영지원(2007)	73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구분
2008	나눔인터내셔널의 북한주민 질병 퇴치 및 아동성장환경 개선사업	308	인도적 지원 (70건, 59,694)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린이 종합복지사업	187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어린이 보건의로 및 영양개선 사업	560	
	남북나눔의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지원(2008)	420	
	남북나눔공동체의 영유아 이유식 생산지원	268	
	남북나눔공동체의 영유아 이유식 생산지원(2008)	121	
	남북나눔운동의 어린이 영양식 공급(2007)	212	
	남북농업발전협력기간연대의 씨감자 원종장 지원사업	131	
	남북민간교류협회의 유기농업자원을 위한 6.15사료공장 및 가축항생제 대체제 지원사업	70	
	남북민간교류협회의 6.15 사료공장, 가축질병 항생제 대체제 지원사업(2008)	110	
	남북함께살기운동의 학교 및 주택 개보수 사업	206	
	농업중앙회의 협동농장, 농업개발 사업	92	
	등대복지회의 북한 취약계층 종합지원	560	
	대북 식량차관 제공(2007년)	4,310	
	대북 수해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2007)	7,348	
	대한의공협회의 의료기자재 현대화	8	
	대한 결핵협회의 북한 결핵퇴치사업	34	
	민족사랑나눔의 급식지원 및 복지관 건립(2007)	44	
	민족사랑나눔의 급식지원 및 보건의로 복지관 건립(2008)	178	
	북고성농업협력단의 채소농장 지원사업	22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사업	8	
	새천년생명운동의 산림녹화를 위한 아궁이개량사업	141	
	서비스포피스의 주택 난방 지원사업	67	
	샘복지재단의 왕진가방, 의료지원 사업	61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병원 현대화 사업(2008)	560	
	어린이재단의 어린이 영양 개선 및 건강증진 지원	437	
	연탄나눔운동의 난방용,취사용 연탄 지원	285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어린이 급식지원	202	
우리민족서로돕기의 기초의약품 및 제약공장	147		
우리민족서로돕기의 북한협동농장 지원사업	282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구분
200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농업기술 지원사업	183	인도적 지원 (70건, 59,69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제약공장 지원 및 병원 현대화 사업	210	
	원불교의 어린이 급식 및 유아용 급식 지원	92	
	원불교의 어린이 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2008)	103	
	월드비전의식량증산농업개발사업	55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교육기자재 지원사업(2008)	5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교육기자재 후속 지원	78	
	유진벨의 결핵퇴치 및 병원 지원사업	560	
	장미회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2008)	185	
	UNFPA의 북한인구센서스 추진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633	
	평화문제연구소의 급식 및 구역병원 지원(2007)	20	
	제주도농산물 대북지원 수송비 보조	1,959	
	천주교서울대교구의 어린이 영양제 및 콩기름 원료지원	236	
	통일연합종교포럼의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12	
	통일준비네트워크의 친환경 순환농법 지원사업	134	
	통일부의 2008 민간단체 개별사업 운영관리비	210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어린이교육용 제지지원사업	157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어린이보건 지원사업	64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락량섬김인민병원 설립(2007)	221	
	락량섬김인민병원 건립 및 운영(2008)	205	
	함경북도지역자립을 위한 복지지원사업(2008)	93	
	한국대학생선교회의 염소목장지원사업(2007)	178	
	한국대학생선교회의 염소목장지원사업(2008)	32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2008)	4,662	
	WHO를 통한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2008)	1,030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2008)	13,784	
	YMCA 그린닥터스의 개성병원 지원(2007)	36	
	2008년도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285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지원	1,475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 지원	46	
	대북 2차 자재, 장비차관 지원(2003)	47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구분
2008	대북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지원(2007)	2,048	교류협력기반조성 (18건, 110,074)
	대북 에너지 자재 1차 잔여분 및 2차 제공 사업 지원	26,605	
	대북 에너지 자재 3차분 제공사업 경비 기금 지원	17,019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13,000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	7,175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위한 기금 지원	17,072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8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20,095	
	금강산 소방서 건설비용 재의결	1,677	
	대북 에너지 자재 1차분 및 증유보일러 제공 지원	250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 지원(2005)	27	
	통일농수산사업단 공동영농사업(2007)	571	
	2008년도 통일농수산사업단 공동영농사업	2,141	
	남북교류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2008)	514	
	(주)경맥의 대북 수산물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재대출)	207	
	고든통상(주)의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2008-03-08)	660	
	고든통상(주)의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2008-03-13)	300	
	삼화통상(주)의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2008-03-12)	80	
	(주)소이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2008-03-09)	800	
	(주)에스앤티스포츠의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200	
	(주)케이에치인터내셔널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300	
	(주)케이에치인터내셔널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2008)	300	
	(주)크라운앞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2008)	300	
	(주)에스앤티스포츠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2008)	200	
	(주)영산어패럴앞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2008)	550	
	우영수산(주)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2008)	470	
	(주)유지상사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2008)	136	
	세람통상(주)의 위탁가공사업 실적한도대출	80	
	무해실업의 반입사업 실적한도대출(2008)	51	
	(주)삼스코의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2008)	400	
	(주)더베이직하우스 위탁가공 실적한도대출(2008)	2,800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구분
2008	(주)안동대마방직의 경제협력자금추가대출(2007)	75	교역경협 자금용자(경협) (5건, 2,973)
	국양해운(주)의 경제협력자금대출	128	
	(주)한국체인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2008)	770	
	(주)KT의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750	
	한국전력공사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250	
	대북 2차 자재, 장비차관('03)	2,324	민족공동체 회복대출 (7건, 25,820)
	대북 역사건축 기자재 차관('05)	416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 운영경비	2,218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대출('07)	89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요경비	9,764	
	대북 경공업 원재자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지원('07)	9,834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출퇴근지원	1,175		
소 계 (133건)	231,205		
2009	2009년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2,921	사회문화 협력지원 (2건, 3,029)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사업(2009년)	109	
	이산가족 교류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2009)	96	이산가족 교류지원 (5건, 2,152)
	2009년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17차)	1,263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비품경비 지원(2008)	60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 지원(2009)	183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 지원(2008)	551	
	천주교서울대교구의 어린이 영양제 등 원료지원	69	인도적 지원 (40건, 29,367)
	장미회의 대북보건의로 지원사업	123	
	원불교의 어린이 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2008)	20	
	원불교의 어린이 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2009)	67	
	2008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겨레의 숲)	50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농업기술 지원사업	9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식량 및 보건의로 지원사업	450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어린이 급식지원	15	
	장미회의 북한주민 간질치료	134	
굿네이버스의 어린이 건강증진 및 질병퇴치 사업	29		
굿네이버스의 농축산개발을 통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34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구분
2009	국제백신연구소의 북한 백신지원사업(2008년)	454	인도적 지원 (40건, 29,367)
	남북나눔의 북한 어린이 영양식 및 성장발육 지원	271	
	한국JTS의 취약계층,농업,의료지원 사업	560	
	한국대학생선교회의 염소목장지원사업(2008)	7	
	2008년 합동사업-남북나눔	1,413	
	통일연합종교포럼의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26	
	통일부 사업운영관리비	87	
	통일준비네트워크의 친환경 순환농법 지원사업	90	
	그린닥터스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등 의료지원	48	
	그린닥터스의 개성공업지구 협력병원 통한 대북의료지원	66	
	서비스포피스의 주택 난방 지원사업	28	
	어린이재단의 어린이 영양 개선 및 건강증진 지원	123	
	어린이재단의 북한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137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평양어린이종합병원 의료 지원	101	
	월드비전의 식량증산 농업개발사업	558	
	민족사랑나눔의 급식지원 및 보건의로 복지관 건립	69	
	민족사랑나눔의 영양개선 및 복지지원, 보건의로 지원	89	
	생복지재단의 왕진가방, 비타민 보내기 사업	54	
	2008년 합동사업-나눔인터내셔널	277	
	등대복지회의 북한 장애인 어린이 종합복지 지원사업	630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의 함경북도 복지지원사업	65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어린이 보건지원 사업(2009)	62	
	2009년도 민간단체 개별사업 2차 사업운영관리비	45	
	2008 정책사업(제약공장 의약품 생산협력사업)	1,000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2009)	4,668	
	WHO의 대북말라리아방역사업	1,359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2009)	15,061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콩생산 등 지원사업(2008)	391	
	국제옥수수재단의 북한옥수수 심기 협력사업	92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원	19,937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13건, 41,461)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620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구분
2009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3차분 제공사업 경비 지원	193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13건, 41,461)
	개성공단 소방서 건립을 위한 기금 지원	148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33	
	2009년도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237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자원개발 지원('09)	528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17,767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	344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경비지원	60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사업 지원	46	
	2008년도 통일농수산물사업단 공동영농사업	280	
	남북관리구역 군사통신체계 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	468	
	교역경험 자금용자(교역)(17건)	8,416	교역경험 자금용자(교역) (17건, 8,416)
	현대아산(주)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7,000	교역경험 자금용자(경험) (1건, 7,000)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출퇴근 위한 기금 대출(2008)	1,152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 (2건, 8,596)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기금 대출	7,444		
소 계 (80건)	100,021		
2010 6월	2010년「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남북협력기금 지원	797	사회문화협력지원 (2건, 856)
	2010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59	
	이산가족교류협력촉진을위한남북협력기금지원	32	이산가족교류지원 (1건, 32)
	북한 신종플루 발생 관련 대북물자 지원	11,272	인도적 지원 (10건, 12,46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취약계층 식량 및 보건의료 지원사업	90	
	남북나눔의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 및 성장발육 지원사업	54	
	민족사랑나눔의 영양개선 및 복지지원, 보건의료 지원사업	34	
	원불교의 어린이급식 및 유아용품 지원사업	34	
	나눔인터내셔널의 북한주민 질병퇴치	75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북한 어린이 보건의료 및 영양개선	221	
	2009년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	672	
	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2009)-통일부 사업관리비	10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2009)-통일부 사업관리비	0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구분	
2010 6월	동해선 남북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129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 (7건, 7,257)	
	개성공업지구「종합지원센터」설립 지원	3,439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344		
	개성공단 소방서 건립을 위한 기금 지원	2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종합전략계획 수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2		
	2010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1,816		
	2010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위탁사업비 지원	525	교역경협 자금용자(교역) (8건, 3,767)	
	교역경협 자금용자(교역)(8건)	3,767		
	교역경협 자금용자(경협)(9건)	1,768		교역경협 자금용자(경협) (9건, 1,768)
	2010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1,551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 (1건, 1,551)
소 계 (38건)		27,693		

3. 민간 출연 현황

연 도	출 연 자	출연금액
2008	홍 은 주	1,450,500
	교보생명보험(주) 및 동사 21세기 하나로보험계약자	170,940
	광혜원중학교	204,860
	홍 은 주	200,000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50,000,000
	소 계 (5건)	52,026,300
2009	홍 은 주	1,200,000
	홍 은 주	1,120,800
	홍 은 주	200,000
	교보생명보험(주) 및 동사 21세기 하나로보험계약자	136,350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50,000,000
	정 완 길	3,000,000
	이 진 희	100,000
	소 계 (7건)	55,757,150

4. 요약 재무제표

①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I. 자 산							
가. 유동자산	7,871	4,911	4,493	8,052	5,990	10,849	10,487
나. 고정자산	18,726	20,257	22,577	22,275	25,089	28,509	27,566
자 산 총 계	26,597	25,168	27,070	30,327	31,079	39,358	38,053
II. 부채 및 자본							
가. 부 채	16,558	16,593	18,382	20,037	20,501	21,484	22,204
1. 유동부채	3,278	3,033	7,952	5,537	655	263	8,373
2. 고정부채	13,280	13,560	10,430	14,500	19,846	21,221	13,831
나. 자 본	10,039	8,574	8,688	10,290	10,578	17,874	15,849
1. 이익잉여금	10,039	8,574	8,688	10,287	10,556	17,825	15,849
이익적립금	9,679	10,039	8,573	8,688	10,287	10,556	15,740
(당기순이익)	(360)	(△1,466)	(115)	(1,599)	(269)	(7,269)	(109)
부채및자본총계	26,597	25,168	27,070	30,327	31,079	39,358	38,053

②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 사업수익	3,031	1,759	5,072	6,573	5,112	6,669	164
2. 사업비용	2,321	2,082	4,180	3,895	4,374	1,968	819
3. 사업이익	710	△323	891	2,679	738	4,701	△655
4. 사업외수익	430	356	282	396	486	3,588	502
5. 사업외비용	780	1,499	1,058	1,476	954	1,020	1,932
6. 당기순이익	360	△1,466	115	1,599	269	7,269	△2,085

2010 | 통일백서

인쇄일 | 2010년 9월
발행일 | 2010년 9월
발행처 | 통일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 화 | 02-2100-5773
팩 스 | 02-2100-5789

편집·제작 | (주)다해미디어 (02-722-7123)